인 사 말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심각한 현상들이 이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더니 수 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참사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 민주주의 회복만이 생명경시 풍조와 자본 만능주의를 척결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여는 목적은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현실 속에서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자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5.3민주항쟁이 발발 한 지 30주년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안타깝게도 인천시민들의 관심은 멀기만 합니다.

4.19혁명 이전에 일어났던 대구 2.28민주운동과 마산의 3.15민주운동에 이어서 작년에는 대전의 3.8민주운동이 54년 만에 법률이 인정하는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제 서울 부산 대구 마산과 마찬가지로 대전에도 '민주공원' 혹은 '민주로(路)' '민주센터' 등이 세워져 3.8민주운동의 정신이 기록 보존되고 계승되는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5.3민주항쟁이 6.10민주항쟁의 도화선이었다는 주장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의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이미 여러 방면의 글을 통해 이 점을 규명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수 백 명의 민주인사들이 경찰의 폭력 그리고 구속과 수배의 고통을 당했고, 정부도 이를 민주화운동 관련 활동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아직도 먼 진도에서 고생하는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합니다. 역사는 결국 기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5.3민주항쟁에 참가했던 수 천 명의 민주투사의 자랑스러운 행적들이 아직도 기록되고 보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으로 기억은 흐려지고 많은 자료와 유물들은 제대로 보관되지 못해 망실되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통해 인천5.3민주항쟁이 민주화운동으로 공인되고 이를 기리기 위한 유물과 기록의 보존, 그 정신의 계승 등의 활동을 일상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바쁜 와중에도 귀한 원고를 제출해 주시고 토론을 해주신 최원식.이준한.김영곤.이호룡.권오광.김지선.이우재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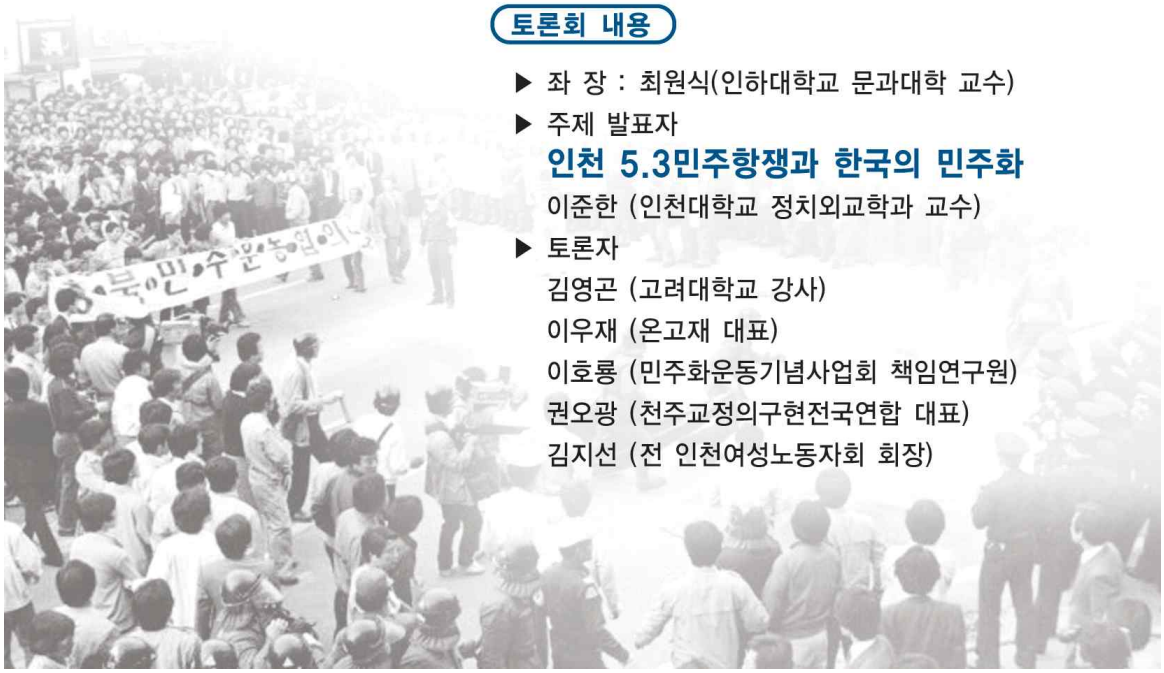
2014. 6. 20. 양승조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제28주년 인천 5 · 3민주항쟁 기념 토론회

인천 5.3민주항쟁과 한국의 민주화

일 시 : 2014년 6월 20일(금요일) 오후 6시 30분
장 소 : 부평구청 5층 중회의실
주 최 :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인천지역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자 6월항쟁의 기폭제 역할을 한 인천 5.3민주항쟁 2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당시 인천지역 노동운동, 민족민주운동 및 시민사회운동 등 다양한 운동의 현황과 움직임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그 의미를 새롭게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인천의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성찰하고, 발전에 대한 전망을 함께 찾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토론회 내용

- ▶ 좌 장 : 최원식(인하대학교 문과대학 교수)
- ▶ 주제 발표자
  인천 5.3민주항쟁과 한국의 민주화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토론자
  김영곤 (고려대학교 강사)
  이우재 (온고재 대표)
  이호룡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책임연구원)
  권오광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김지선 (전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목 차

[발제문] 인천의 5·3 민주항쟁과 한국의 민주화 ····· 1
이준한 (인천대학교 교수)

[토론문 1] 인천5·3항쟁과 민주·진보운동의 미래 ····· 29
-요구 주의 주장을 중심으로-
김영곤 (전 고려대학교 강사)

[토론문 2] 인천5·3항쟁과 노동자 ····· 53
김지선 (전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토론문 3] 인천5·3항쟁에 대한 단견 ····· 61
이호룡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책임연구원)

[토론문 4] 인천 5·3항쟁의 영향 ····· 67
이우재 (온고재 대표)

[토론문 5] 인천 5·3항쟁에 대한 소고 ····· 75
권오광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참고자료 1] 5·3인천민주화운동과 노동자의 역할 ····· 83
김영곤 (전 고려대학교 강사)

[참고자료 2] 한겨레신문 연재, 5·3 인천사태’ 국가가 폭력 ····· 123
기관임을 다시 보여줬다

발제문

인천의 5·3민주항쟁과 한국의 민주화

이준한 (인천대학교 교수)

인천의 5·3 민주항쟁과 한국의 민주화

I. 서론

이 논문은 인천의 5·3 민주항쟁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정치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의 5·3 민주항쟁이란 1986년 5월 3일 인천의 주안역 앞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일어난 정치적 시위를 말한다. 제3의 민주화 물결의 원인을 설명하는 프로테스트 모델(protest model)은 1986년 인천의 5·3 민주항쟁으로부터 그 다음해 이어진 한국의 6월 항쟁 및 민주주의 이행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을 대표적인 사례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설명틀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프로테스트 모델에 입각하여 인천의 5·3 민주항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그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환경부터 분석하고 평가한 뒤 그것이 1987년 민주화와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추적할 것이다.[1] 이러한 과정에서 이 논문은 인천의 5·3 민주항쟁의 위상을 찾게 될 것이다.

과거 인천의 5·3 민주항쟁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흔하지 않았다. 2003년 5월 2일 5·3민주화운동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최한 "5·3운동의 역사적 재조명"이라는 학술토론회에서 조희연이 발표한 논문, "5·3인천사태와 급진적 민주주의정신"이 첫 번째로 보인다. 그러나 조희연은 인천의 5·3 민주항쟁을 급진적 사태요 사건이라고 본다. 같은 날 1986년 5·3 민주항쟁의 주역 가운데 한 명인 이우재는 "5·3인천사태를 뒤돌아보며"를 통하여 참여자 개인의 시각에서 반성의 기록을 남겼다. 이우재는 "5·3인천사태는 80년대의 여러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들 중에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컸던, 따라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건"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로 "자중지란"과 "꼴불견"에 "추태," "관념적인 모험주의와 소아병주의"를 꼽았다.[2]

그 뒤 5·3인천항쟁 20주년에 거행된 "5·3에서 미래로"라는 행사에서 조현연은 "5·3에서 미래로: 1986년 5·3인천투쟁과 '위기의 민주주의'"를 통하여 인천의 5·3 민주항쟁이 발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전개과정 및 현재적 평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3] 같은 날

---

1) Bratton, Michael, and Nicolas Van de Walle. 1992. "Popular Protest and Political Reform in Africa." Comparative Politics 24: 419-442; Eckstein, Susan. ed. 1989. Power and Popular Protest: Latin American Social Movement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Wood, Elisabeth Jean. 2001. "An Insurgent Path to Democracy: Popular Mobilization, Economic Interests, and Regime Transition in South Africa and El Salvador."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4 (8, October): 862-888.

2) 이우재, 「5·3인천사태를 돌아보며」, 『5·3운동의 역사적 재조명(인천 5·3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최 토론회)』, 2003, 17-18.

발표된 이우재의 "5·3항쟁의 개요"는 배경뿐 아니라 시간대별 진행과정까지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4] 2007년에 발표된 김영곤의 "5·3 인천민주화운동과 노동자의 역할"이라는 논문은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참가한 사건이 아니지만 노동자의 역할을 규명한다는 관점에서 인천의 5·3 민주항쟁에 대하여 분석했다.[5] 그리고 김영곤은 5·3 민주항쟁이 1986년 5월 3일부터 권인숙 사건과 유성환 의원의 국시논쟁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한다.

이 논문에서는 인천의 5·3 민주항쟁과 한국의 민주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전 세계 정치학계의 민주화 이론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그것을 한국의 민주화에 적용해본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민주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추구하는 프로테스트 모델이라는 시각에서 인천의 5·3 민주항쟁의 흐름과 특징을 조망한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는 인천 수준에서 5·3 민주항쟁과 6월 항쟁 및 7·8·9월 노동자 대투쟁의 흐름과 특징을 찾아본다. 그 결과 여기에서는 인천의 5·3 민주항쟁에 대한 위한을 재정립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동아일보를 참고하여 관련기록을 찾는다.

Ⅱ. 민주화의 주요 개념

민주화란 비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a democratic form of government)로 교체되는 과정이라고 정의된다.[6] 여기에서 비민주주의 사회란 대표적으로 권위주의 사회를 지칭하지만 일당체계(one party system), 군주제의 무정당 정치체계, 일인독재체제, 또는 군부독재체제 등도 모두 가르키며 민주주의 사회란 사회구성원들이 정치영역에서 배제되지 않아 참여가 보장되고(participatory) 정치적 권력이 자유로운 경쟁(competitive)에 의해 분배되는 체제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추상적인 논의는 많았지만 현실세계에서 순수한 민주주의 체제를 발견하기는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다알은 폴리알키(polyarchy)라는 용어를 만들어 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 사용했다.[7] 다알의 폴리알키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과 시민적 참여가 두루두루 보장되어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가 크게 인정되는 정치적 체제를 의미한다.

흔히 민주화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는 민주주의 이행이요 두 번째

3) 조현연, 「5·3에서 미래로: 1986년 5·3인천투쟁과 '위기의 민주주의'」, 『인천 5·3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식 자료집』, 2006.
4) 이우재, 「5·3항쟁의 개요」, 『인천 5·3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식 자료집』, 2006.
5) 김영곤, 「5·3 인천민주화운동과 노동자의 역할」, 『인천학연구』, 2007, 제6권, 313-354.
6) Linz, Juan J., and Alfred Stepan. 1996.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7) Dahl, Robert A. 1971.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단계는 민주주의 공고화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치적 자유화 없이 민주화가 없고 민주화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정치적 자유화가 선행했음을 찾아낼 수 있다.[8] 그리고 민주주의 공고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민주주의 이행이 선행한다. 따라서 민주화는 다시 정치적 자유화, 민주주의 이행, 민주주의 공고화라는 세 개의 작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다.

민주화의 첫 번째 관문인 정치적 자유화란 기존에 비민주적인 정권에 의해 억압되었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전반적인 이완(a general relaxation of official controls on political rights and civil liberties)이라고 정의한다.[9] 정치적 자유화와 민주주의 이행의 근본적인 차이는 새로운 민주주의 형태의 정부 구성과 관련되었느냐 아니냐에 있다. 정치적 자유화란 여전히 구시대의 잔재 아래에 머물고 있지만 새롭게 열려진 공간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정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여러 정치 행위자들이 비교적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정치적 자유화의 공간에서 헌법도 새로 만들거나 고치고 대통령제니 의원내각제니 하는 정부형태도 결정하며 정당활동과 선거정치가 시작된다. 이러한 열려진 공간은 이전의 구정권 아래에서는 찾아지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도 아직 새로운 민주주의 정부의 구성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

반면에 민주주의 이행이란 정치적 자유화 이후 새로운 일정에 맞춰 거행된 선거에 의하여 비민주주의 정부 대신 민주주의 정부가 구성되는 단계를 말한다. 정치적 자유화가 없다면 새 정 구성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규칙도 만들 수 없고 야당 정치인들의 활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정당활동도 제약될 수 있어 애초에 민주주의 이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치적 자유화는 민주화(민주주의 이행과 민주주의 공고화)에 반드시 선행되고 한 사회에서 민주화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그 전에 정치적 자유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적 자유화는 그 전후와 비교적 뚜렷한 경계로 나뉘어진다. 예를 들면 정치적 자유화는 구정권의 특별한 종류의 선언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의 일부나 전부가 수용되거나, 구정권의 책임자(대통령이나 수상)가 사임하거나, 또는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예견되지 않던 특별한 변화(정치지도자의 망명 또는 사망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는 매우 불확실하며 우연적이고 돌발적인 요소들이 개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화의 전과정은 예측불가능(uncertain)하고 우연적(contingent)이다. 그러나 동시에 민주화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구정권의 성격

8) Bratton, Michael, and Nicolas van de Wall. 1997. Democratic Experiments in Africa: Regime Transi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9) O'Donnell, Guillermo, and Philippe. C. Schmitter. 1986.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이나 역학관계에 의하여 일정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로의존성(path dependent)이 있다고 하겠다.

정치적 자유화의 결과 과거의 비민주주의 사회와 많은 면에서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가 크게 신장되지만 아직 새로운 민주정부가 유권자의 손에 의해 탄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정치적 자유화가 시작되면 구정권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사이에 일련의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구정권 이후 최초의 민주적 선거를 준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당의 정당활동이 예전과 다른 수준에서 보장되고, 헌법이 개정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정부형태도 결정되고 마침내 전국단위의 선거일정이 확정된다. 한마디로 정치적 자유화는 비민주주의 사회와 민주주의 사회를 잇는 징검다리이다.

민주화의 실질적인 첫 번째 단계이지만 정치적 자유화의 다음 과정인 민주주의 이행은 비민주주의 사회 이후 최초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민주적인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완료된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화란 민주주의 이행 또는 민주적 이행과 거의 동일시되기도 한다.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헌팅턴은 민주주의 이행을 세 가지로 유형화했는데 구정권이 무너져서 새 질서에 의해 일순에 완전히 교체되는 유형(replacement), 구정권이 서서히 민주적 개혁을 실시해나가는 유형(transformation), 그리고 구정권과 민주세력이 타협으로 민주화를 점진적으로 이루는 유형(transplacement)으로 구분했다.[10] 헌팅턴은 민주주의 이행의 유형과 관련하여 린쯔 등의 이론을 발전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유형을 더 추가하자면 계약에 의한 이행(pacted transition)을 들 수 있다. 계약에 의한 이행이란 구정권 세력과 민주화를 추진하는 사회운동 세력이 함께 라운드 테이블이나 막후에서 협상을 벌여 민주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에 의한 이행에서는 구정권에 대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범법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이를 대가로 권력을 민주화 세력에게 이양하기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색이다. 헌팅턴의 민주화 이행 세 번째 형태인 타협에 의한 민주화와 계약에 의한 민주화는 서로 유사하지만 전자가 계약에 의한 이행의 대표적 사례인 폴란드의 원탁회의와 같은 구체적인 협상과정 대신 다소 묵시적이고 비정형적인 타협이라는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구분될 수 있다.[11]

민주주의 이행은 정치적 자유화보다도 더욱 확연하면서 단일한 경계로 이전의 정치

10) Huntington, Samuel P.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1) Lee, Junhan. 2002. “Primary Causes of Asian Democratization: Dispelling Conventional Myths.” Asian Survey 42 (6, November/December): 821-837.

상황과 뚜렷하게 구분된다. 그 경계석은 다름 아닌 정초선거(founding election)이다. 정초선거는 비민주사회 이후 최초로 상당히 경쟁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조건 아래에서 전국적인 중요성을 가진 자리를 놓고 다투는 선거를 의미한다.[12] 이러한 오도넬과 슈미터의 정초선거에 대한 정의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정초선거란 무엇보다도 비민주사회가 민주적인 사회로 옮겨간 뒤 첫 선거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조건을 충족시켜도 반드시 정초선거라고 규정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 조건들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정초선거란 전국적 단위의 선거(national elections)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거나, 의회를 구성한 후 수상을 선출하는 선거여야만 한다. 만약 비민주사회 이후 첫 선거라도 그 선거가 국민투표나 지방선거(local elections)라면 정초선거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비민주사회에서 민주적 사회로 이행한 뒤 첫 선거가 직접선거가 아니라 선거인단 등을 통한 간접선거라든가 전체선거가 아니라 부분선거라면 정초선거라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완전한 정부구성에 모자라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거가 반드시 자유롭고 공정한 절차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만약 참정권에 제한이 있다거나 유권자나 후보의 선거에 대한 접근성이 불평등하면 정초선거로서 결격사유가 된다. 마지막으로 정치행위자들, 특히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이 선거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의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외의 과정을 통한 집권이 대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정초선거는 정권교체를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비민주적인 정권이 선거를 통해서 패배해서 물러날 수도 있지만 비교적 공정한 선거의 결과로 재집권할 수도 있다. 구시대 정권이 재집권한 경우에도 앞의 정초선거에 해당하는 조건들이 보장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거가 이루어졌다면 국민의 선택에 의한 결과로서 또 정초선거로서 유효한 것이다. 물론 구시대 정권이 재집권한 경우에는 민주주의 이행이후 심각한 혼란과 파행이 이어질 수 있다.[13]

민주주의 공고화는 흔히들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그 사회의 유일한 게임의 규칙이 된 상황에 도달하는 기나긴 과정을 일컫는다("Democracy is the only game in town").[14] 그러나 민주주의 공고화에 대하여 이렇게 멋있으면서 간단한 정의

12) O'Donnell and Schmitter, 1986, 57.

13) Karl, Terry Lynn. 1995. "The Hybrid Regimes of Central America." Journal of Democracy 6: 72-86.

14) Przeworski, Adam. 1991. Democracy and the Market: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 and Latin Americ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6; Bratton and van de Walle 1997, 235; Diamond, Larry. 2002. "Thinking about Hybrid Regimes." Journal of Democracy 13(2, April): 21-35.; Linz and Stepan 1996, 15 참조.

가 제시되고 있지만 과연 민주주의가 유일한 게임인 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합의와 또 과연 그 상황에 도달한 경계석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는 없는 실정이다. 정치적 자유화나 민주주의 이행과 달리 민주주의 공고화란 극적인 변화도 없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서 숱한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기 마련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민주주의 공고화의 출발점이 정초선거를 통한 민주적 정부의 등장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공고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또는 그 신생 민주주의 국가가 어떠한 단계에 이르러서야 민주주의 공고화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기 사실상 매우 어렵다.

Ⅲ. 민주화 개념의 한국적 적용과 특징

한국의 민주주의는 해방 이후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의 발전에 힘입어 1960년대 초 제2공화국 시기에 잠시 꽃을 피웠다가 다시금 1987년 6월 항쟁 이후 만개하여 곧 30년이라는 수명을 바라보고 있다. 전 세계적 정치학계에서 받아들여지는 개념과 그 정의에 의하면 한국에서 민주화의 첫 과정인 정치적 자유화는 구정권의 특별선언(“6·29선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6·29선언은 첫째,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 둘째,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셋째,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 관련사범들의 석방, 넷째,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다섯째, 자유언론의 창달, 여섯째,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일곱째,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여덟째,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등을 포함했다. 한마디로 개인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괄목할 만큼 신장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직선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민주적 헌법을 만들기 위한 개헌 절차가 시작되었고 6개월 안에 치러질 자유로운 대통령선거에 대비하는 정당정치가 개시되었다.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 또는 민주적 이행은 십 수 년 동안 수천 명의 대의원만 참가하는 체육관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민전체가 직접 참여했던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거쳐 이듬해 2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종료되었다. 물론 1987년 대통령선거는 선거부정이나 금권 또는 관권개입, 그리고 선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특히 서울 관악구의 일부 선거함이 부정선거의 흔적으로 의심을 받아 선거가 끝난 뒤에도 선거결과가 도전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후보들이 선거결과를 수용했을 뿐더러 이 선거가 과거에 비해서 또는 다른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에 비해서는 절차상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었다고 국제적인 선거감시단에 의하여 인정되었기에

1987년 12월 대통령선거가 한국의 정초선거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결과의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 권위주의 시대 집권당이 재집권함으로써 민주화 이행 이후 당면과제였던 구시대 권위주의 유산의 완전한 청산과 과감한 민주적 개혁이 미흡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1987년 대통령선거로 선출된 정부가 과연 민주적인 정부인지에 대한 의심을 받았다. 이렇게 절차적 민주주의와 내용적 민주주의가 불일치함으로써 1987년 대통령선거가 민주화 이행의 완성을 알려주는 정초선거가 아니라 1992년 대통령선거 또는 그 이후의 선거가 정초선거라는 주장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정초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이룬 제3의 민주화 물결 국가보다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더 많다. 그리고 민주화 이행 이후 구성된 첫 정부가 사회구성원의 기대수준에 못 미치고 절대적인 민주주의 기준에 못 따라가는 것은 제3의 민주화 물결 국가 가운데 오히려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은 정치학자들은 제3의 민주화 물결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 잡종정권(hybrid regime) 등이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한 비슷한 이유로 공고화의 과제가 바로 이 절차상 민주주의 수준과 내용상 민주주의 수준의 균형을 맞추어 상향발전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공고화는 완성시점을 쉽게 찾을 수 없으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민주주의의 부침을 겪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1987년 선거결과의 불완전성을 이유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 및 정의와 달리 한국 민주주의 이행이 1987년 대통령 선거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따를 수 있다.

헌팅턴의 개념을 엄격하게 적용해보면 한국의 민주화 유형은 민주화 세력과 집권 세력 사이의 타협(transplacement)에 의한 경로를 따랐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민주적 이행은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의 붕괴와 같이 일시에 권위주의 정권이 완전히 민주화 세력에 의해 대체(replacement)되지도 않았고, 대만의 장경국 총통 같이 권위주의 정권이 주도적으로 민주화를 추진(transformation)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폴란드나 태국같이 권위주의 정권과 민주화 세력이 라운드 테이블이나 공식적인 협약을 맺어 이루어 진 것(pacted transition)은 한국의 민주화 유형과 차이가 있다. 인천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광범위한 민중이 참여한 정치적 시위가 상당기간 이어졌고 이에 놀란 권위주의 정권은 정치적 대타협을 위하여 6·29선언을 준비했다. 그리고 6·29선언이 발표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국적 시위가 일순간에 자취를 감추었다.

여기에서 한국의 민주화는 정치적 시위가 원인이라고 하는 프로테스트 모델로 잘 설명된다.[15] 프로테스트 모델은 권위주의 정권을 한축으로 하고 민주화운동세력(또는 시

15) 제3의 민주화 물결이 휩쓸고 간 뒤 전 세계적인 민주화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데 이론으로는 영국 식민지 경험

민사회)을 다른 한축으로 하는 정치적 행위자들 사이에서 민주화 요구, 시위, 타협, 그리고 협상의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로 이행한다고 본다.[16] 현실적으로 제3의 민주화 물결이 휩쓴 결과 등장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을 보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자발적으로 민주주의를 선사했거나 스스로 민주화의 길로 들어선 경우를 찾기 어렵다. 대신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 게임의 시작은 민주화운동세력 또는 정치적 반대파의 민주화 요구 내지는 민주화 시위(democratic protest or demonstration)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종종 민주화 시위를 피플 파워(people power)라는 표현으로 묘사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프로테스트 모델이란 바로 이러한 현상들에 주목해서 민주화를 설명한다.

정치적 시위란 정치적 권리와 새로운 정권을 요구하는 데모(demonstrations), 거부(boycotts), 또는 파업(strikes) 등을 의미한다.[17] 이에 비하여 경제적 시위란 작업환경의 개선이나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것임에 비해 정치적 시위란 바로 정치적 환경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정치적 시위는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의 부재에 따른 정치적 위기(legitimacy crisis)에 의해 촉발되며 대부분 권위주의적 정치지도자의 퇴진, 계엄령의 철폐, 자유선거, 정당, 개헌 등을 요구한다. 정치적 시위가 커지면서 권위주의 정권은 정권유지에 위협을 느낄 때 자신의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민주화운동세력과 협상 및 타협의 과정을 이끈다. 민주화는 이 양자의 역학관계에 의하여 속도, 성격, 경과, 결과 등이 달라질 수 있다.[18] 권위주의 정권이 민주화운동의 요구에 정치적 대타협으로 응하면 민주화의 첫 관문인 정치적 자유화가 이루어진다. 반면 권위주의 정권이 무력적으로 민주화운동을 제압하면 더 강한 권위주의가 등장하거나 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면서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정치적 시위가 민주화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시위가 민주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회 역사 속에서 가장 조직적이며 가장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정치적 시위가 일상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권위주의 정권이 사회운동의 민주화 요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조차 느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국

모델, 근대화 이론, 경제위기 모델, 시민문화 모델 등이 있으나 한국의 사례와 같이 프로테스트 모델의 설명력을 따라가기 어렵다.

16) Berins, Ruth, and James Mahoney. 1997. "Adding Collective Actors to Collective Outcomes: Labor and Recent Democratization in South America and Southern Europe." Comparative Politics 29: 285-303; Lopez-Pintor, Rafael. 1987. "Mass and Elite Perspectives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to Democracy." In Comparing New Democracies: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in Mediterranean Europe and the Southern Cone, ed. Enrique A. Baloyra. Boulder: Westview Press; Mainwaring, Scott, Guillermo O'Donnell, and J. Samuel Valenzuela. 1992. Issues in Democratic Consolidation: The New South American Democrac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7) Bratton, Michael. 1997. "Deciphering Africa's Divergent Transitions." Political Scientific Quarterly 112: 67-93

18) Tarrow, Sidney. 1995. "Mass Mobilization and Elite Exchange: Democratization Episodes in Italy and Spain." Democratization 2: 221-245; Tarrow Sidney. 1996. "Social Movements in Contentious Politics: A Review Articl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0 (4, December): 874-883; Tarrow, Sidney. 1998. Power in Movement: Social Movements and Contentious Politics N. Y.: Cambridge University Press.

가의 수도나 산업화가 많이 진행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는 학생운동세력과 사회운동세력의 정치적 시위가 막을 오르면 짧게는 며칠 동안 길게는 몇 달 동안 정치적 시위가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위가 처음에 시작된 대도시에서 다른 대도시로 번져가면서 조직화된 민주화운동세력뿐 아니라 이들에 의해 조율되는 정치적 시위에 중산층이 합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권위주의 정권이 군부를 동원해서 운동세력을 진압하는 것이 더 비용이 적게 드는지 아니면 민주화운동세력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더 비용이 적게 드는지 정치적 계산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전의 상황이 다음의 상황을 규정해나가는 우연적인 요소(contingent)들이 많이 개입하게 된다.[19)]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에서는 이러한 내적인 환경과 더불어 외적인 분위기도 정치적 시위가 민주화로 연결되는데 일조한다. 예컨대 미국이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민주화운동세력의 정치적 요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 권위주의 정권이 군부를 동원하거나 민주화운동세력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미국의 선택의 변화는 정치적 시위가 해당 사회에서 최고조에 달했을 즈음에 이루어지는데 결국 그 사회 민주화의 경로에 큰 영향을 준다.

그리고 1986년 필리핀의 피플 파워에 의한 민주화도 한국의 6월 항쟁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한국의 6월 항쟁이 끝난 직후 7월에는 대만에서 계엄령을 해제하고 민주화를 시작했듯이 인접국의 민주화 운동이나 민주적 이행도 다른 나라의 정치적 시위의 발전과 민주화 이행에 도움이 된다. 소련과 동유럽에서 일순에 불었던 페레스트로이카의 바람은 유라시아 대륙의 거의 모든 일당체제의 민주화에 영향을 주었다. 하나의 큰 땅덩어리에 뭉쳐서 사는 아프리카 대륙이나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이러한 도미노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IV. 인천의 5·3 민주항쟁과 특징

1986년 5월 3일 인천의 주안역 앞 시민회관 사거리에서는 한국의 민주화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정치적 시위가 발생했다. 이 정치적 시위는 적어도 2월 12일, 즉 1985년 국회의원선거의 1주년이 되는 시점으로 되돌아가야 그 정치적 의미가 찾아진다. 1986년 2월 12일부터 당시 신민당과 민추협은 개헌을 위한 1천만 명 서명운동의 막을 올

19) Bellin, Eva. 2000. "Contingent Democrats: Industrialists, Labor, and Democratization in Late-Developing Countries." World Politics 52 (2, January): 175-205.

렸고 5월 3일은 그 뒤 전국을 순회하던 개헌추진위시도지부 결성대회가 인천에서 열렸던 날이다. 그리고 그 반대측에는 전두화 당시 대통령의 개헌논의에 대한 입장이 있었다. 국민적인 개헌요구에도 불구하고 1986년 1월 16일까지만 해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평화적인 정권교체와 88서울올림픽개최라는 목표가 달성될 1989년까지는 개헌논의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4월 30일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이민우 신민당 당총재 및 이만섭 국민당 당총재와 회담을 하면서 임기중에 개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회담에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가 개헌을 건의한다면 개헌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국민적인 개헌요구가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이에 답하지 않으면 자칫 임기 말과 88올림픽을 앞두고 정치적 불안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가 커졌을 것이다. 4월 30일 직후 당시 민정당은 이제 개헌논의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며칠 뒤로 예정되어 있던 개헌추진위 인천대회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동아일보 1986년 5월 1일자 1면).

이러한 정치적 배경에서 1986년 5월 3일 인천의 주안역 앞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발생했던 정치적 시위에 대하여 이 논문은 인천의 5·3 민주항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인천의 5·3 민주항쟁은 한국의 민주화라는 긴 여정에서 이어졌던 다양하고 장기적인 정치적 시위 가운데 하나로서 그 이듬해에 본격화될 6월 항쟁의 서곡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이해한다. 인천의 5·3 민주항쟁은 이에 따라 개헌논의, 1986년 5·3 민주항쟁, 1987년 6월 항쟁 등이 밀접하게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천의 5·3 민주항쟁은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과 떼어놓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천의 5·3 민주항쟁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날의 정치적 시위를 인천의 5·3 민주항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부각될 것이다. 첫 번째 특징은 우선 그 정치적 파급력이 매우 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인천의 5·3 민주항쟁이 불러일으킨 정치적 파급력은 다른 무엇보다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수에서 확인된다. 이날 정치적 시위는 수천 명의 대학생과 노동자의 참여와 수만 명의 일반시민이 참여한 상황에 같은 날 정오부터 밤늦게 이어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모두 319명이 연행되었지만 무려 129명씩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동아일보 1986년 5월 5일자 1면). 1987년 6월 10일 전국적인 민주화 시위에서 약 130여명이 구속영장을 받았다는 것을 감안하면(동아일보 1987년 6월 12일자 1면) 이보다 일 년 전에 발생했던 인천의 5·3 민주항쟁이 끼친 정치적 파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인천 5·3 민주항쟁의 정치적 파급력은 법적인 구속사유에 의하여 엿볼 수 있다. 5·3 민주항쟁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구속자의 숫자도 달라지고 수배자도 증가했을 뿐더러 혐의도 더 커졌다. 즉 인천의 5·3 민주항쟁에서는 5월 30일 현재 구

속된 170명 가운데 57명이 국가보안법위반죄, 소요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구속당했다(동아일보 1986년 5월 31일자 1면). 소요죄는 형법제정 이후에 불과 네 번째로 5·3 민주항쟁에 적용되었는데 그만큼 5·3 민주항쟁의 당시 정국에 미친 파급력이 중차대했던 것이다. 이날 주안역 앞에서 시작된 정치적 시위는 오후 5시 40분 경찰의 진압작전이 시작될 때까지 적어도 6시간 이상 지속되었다가 그 뒤에도 제물포, 도화, 동인천역 인근으로 옮겨졌다.

여기에서 인천의 5·3 민주항쟁이 갖는 정치적 파급력은 다른 도시의 개헌추진위시도지부 결성대회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된다. 이미 언급했듯이 당시 신민당은 개헌추진위시도지부 결성대회를 서울(3월 11일), 부산(3월 23일), 광주(3월 30일), 대구(4월 5일), 대전(4월 19일), 청주(4월 26일), 인천(5월 3일) 등의 순서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했다. 3월 11일 서울대회에서는 가두행진이 벌어졌지만 경찰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고 연행된 사람도 없었다(동아일보 1986년 3월 11일자 1면). 3월 23일 부산에서는 오후 2시부터 3시간 정도 개헌추진현판식이 진행된 뒤 신민당 인사들이 현장을 빠져나갔고 그 뒤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가두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자 약 30여분 만에 경찰에 의하여 모두 해산되었다(동아일보 1986년 3월 24일자 1면).

일련의 개헌대회 가운데 약간의 변화는 3월 30일 광주대회에서 일어났다. 이날 "결성대회가 3시간가량 진행되는 동안 광주시내 금남로 충장로 등 도심거리와 도청앞 광장 분수대로타리 등은 시민학생들로 꽉 들어찼"을 정도였다(동아일보 1986년 3월 31일자 1면). 이날에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가두시위와 연좌농성을 벌였고 경찰에게 돌을 던졌으며 도청앞 광장에서는 광주직할시승격기념탑을 쓰러뜨리고 불을 지르기까지 했다. 4월 5일 대구대회가 열리는 동안에도 대학생들은 연좌농성을 벌였고 대회가 끝난 뒤에는 가두행진과 시위를 벌였다(동아일보 1986년 4월 7일자 1면). 이날 대구에서는 141명이 연행되었는데 "대학생이 1백3명이며 회사원 3명 공원 5명 무직 18명 민통련 2명 기타 10명 등 일반인 38명"으로 집계되었다(동아일보 1986년 4월 7일자 1면).

4월 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대구대회에서는 대학생 약 300여명이 모여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개헌논의 중단 등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대회장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대회가 끝난 뒤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도로에서 연좌농성도 했으나 특별한 충돌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4월 5일 밤 대구시청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던 대학생 약 1500명이 시청을 점거하려고 시도했고 이에 경찰은 강제적으로 시위대를 해산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했던 인원 가운데 16명만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뿐이었다(동아일보 1986년 4월 7일자 11면).

4월 19일의 대전대회에서도 대학생들이 현판식이 끝난 뒤부터 가두시위를 벌이면서

경찰과 대치했고 24명이 연행되었다(동아일보 1986년 4월 21일자 11면). 4월 26일의 청주대회에서는 대학생들이 매우 조직적으로 시위를 벌였으나 현판식이 끝난 뒤 시위는 오래 가기 전에 경찰에 의하여 해산되었고 15명이 연행되었다(동아일보 1986년 4월 28일자 11면). 일련의 흐름을 보면 개헌대회 가운데 서울대회를 제외하고는 점차 신민당의 행사와 민통련 및 대학생들의 행사가 확연히 구분되어갔다. 신민당은 민통련 덕에 참가자도 증가하고 분위기도 고조된다고 보았으나 민통련이나 대학생들은 신민당이 차려놓은 집회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집회를 하는 식으로 바뀌어 나갔던 것이다.[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대회 이전의 개헌대회는 인천대회에 비하여 구속자 숫자, 혐의, 시위의 규모 등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인천의 5·3 민주항쟁의 특징은 또 비단 인천이라는 지리적 공간에 국한되었거나 대학생이라는 인적인 특성에 제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 당시 구속영장은 "대학생 90명, 무직 25명, 근로자 3명, 재수생 4명, 회사원 3명, 상업 2명, 신민당원 1명, 기타 1명"으로 대학생이 가장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동아일보 1986년 5월 5일자 2면). 그러나 그 외에도 근로자는 물론 상인 등 일반시민과 무직도 섞여 있었다. 또한 이날 구속영장이 떨어진 대학생 90명 가운데는 인하대 12명과 인천대 6명 등이 포함되었지만 서울지역 대학생(연대 12명, 서울대 10명, 장로교신학대 5명, 중앙대 4명,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성균관대, 숭전대, 한국외국어대, 서강대 각 3명, 홍익대 2명, 그 외 18명)들이 상당히 많았다.

인천의 5·3 민주항쟁의 또 다른 특징은 1985년 겨울과 1986년 봄 사이 학생운동권의 사상투쟁과 조직정비를 거친 뒤 마구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새로운 정치적 구호들이 다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날에는 당시 민통련과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인사연)과 인천노동운동연합(인노련) 및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은 물론 서울대의 자민투 및 민민투 등 이와 조직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유사한 조직은 거의 모두 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21] 여기에서는 개헌요구는 물론 각종 반정부 구호가 나온 것은 매우 기본적이었다.

이외에 5·3 민주항쟁에서는 야당도 여당과 마찬가지로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야당이 "매판 재벌 및 미제국주의 세력과 결탁한 사대적 기회주의집단"이라는 공세를 받았던 것이다(동아일보 1986년 5월 5일자 3면). 그 배경에는 인천의 5·3 민주항쟁 직전인 4월 30일 청와대에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수용하는 대신 당시 신민당은 개헌을 위한 가두서명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양보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세력으로부터 비판을

20) 조현연, 2006, 22.
21) 이우재, 2006.

피할 수 없었던 사실이 놓여있다. 당시 신민당 총재 이민우가 "소수이겠지만 좌익학생들을 단호히 다스려야 하며 민주화운동에 이런 사람들이 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22] 5월 1일 민통련은 보수대야합의 전조라고 신민당을 강력히 비판했고 서노련 및 인노련은 물론 학생운동권도 민통련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미제축출' 등 반미구호의 등장과 함께 벌어진 성조기 화형식은 미국의 3대 공중파 방송사의 전파를 타기도 했다(동아일보 1986년 5월 5일자 4면). 또한 단순한 개헌이 아니라 '파쇼타도'와 삼민(민족, 민주, 민중)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의회를 요구하는 구호도 확산되었다(동아일보 1986년 5월 5일자 4면). 그리고 인천을 '해방구'로 만들자는 구호도 등장했다. 김영곤에 의하면 이날 유인물은 약 50여 종 모두 10만 여 점에 달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이우재에 담겨 있다.[23]

이러한 측면에서 인천의 5·3 민주항쟁은 일반시민의 이해수준이나 수용범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대중노선에서 다소 벗어났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하겠다. 이날의 정치적 시위는 당시 준비되어 있던 역량을 훨씬 뛰어넘는 '해방구' 구호라든가 다양한 사상적 배경을 가지는 서로 다른 조직이나 단체가 백가쟁명식으로 서로 경쟁하듯이 외쳐지는 서로 다른 구호에서 보이듯이 전혀 통일되지 않았다.

이렇게 5·3 민주항쟁이 정세의 흐름에서 다소 벗어난 돌출적인 '전술'을 구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조직적인 준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래 전부터 5월 3일 인천대회는 예정되어 있었고 5월 2일에는 서울대를 포함한 각 대학에서는 5월 3일에 인천으로 집결할 것을 결의하는 집회가 열렸다(동아일보 1986년 5월 5일자 5면). 그리고 인천에는 각종 노동운동조직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시위를 준비할 수 있었다. 특히 인천에는 인사련, 인노련, 인천기독교노동운동연합(인기노련) 등 운동단체가 많았다. 심지어 서노련은 적어도 4월 23일부터 인천대회에 총집결할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다.[24]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인천대회가 그 이전의 개헌대회와 차이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인천대회가 수도권에서 열리는 개헌대회이기 때문에 정치적 비중이 사뭇 달라질 수 있었다.

실제로 인천의 5·3 민주항쟁이 끝난 뒤 배후조종 혐의로 수배를 받은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충분히 당시 분위기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의 5·3 민주항쟁 직후에는 열 명이 수배를 받았는데 인사련의 이호웅 의장과 이우재 집행국장, 한국노협인천지역협의회(인로협)의 양승조 대표와 홍성복을 포함하여 민통련의 장기표 전 사무처장, 조춘구 사무차장, 박계동 조직국장, 정동년 중앙위원, 심순봉, 안희대 등이었다(동아일보

22) 조현연, 2006, 25.
23) 김영곤, 2007, 333; 이우재, 2006, 90-92.
24) 김영곤, 2007, 320.

1986년 5월 5일자 1면). 그리고 이 수배자 명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50여명 내외로 바뀐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인천의 5·3 민주항쟁이 정국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당시 민정당은 5·3 민주항쟁을 "반미는 물론 북괴주장에 동조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폭력혁명노선의 급진좌경학생"에 의한 것으로 규정했고 1) 시국수습을 위한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개최를 제의, 2) 노태우 대표와 김영삼 고문과 회담추진, 3) 임시국회 조기소집 등을 제시했다(동아일보 1986년 5월 5일자 1면). 그리고 5·3 민주항쟁에서 거센 비판을 피하지 못했던 신민당도 "운동권학생들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는 한편 정부 여당의 강경대처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기로 했다(동아일보 1986년 5월 5일자 1면). 당시 신민당의 이민우 당 총재 김대중, 김영삼 사이의 3자회동을 갖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모색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1986년 인천의 5·3 민주항쟁은 1980년 이른바 '서울의 봄'과 광주항쟁 이후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정치적 시위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시위'뿐 아니라 인천의 5·3 민주항쟁은 '이념의 시위'이기도 했다. 특히 인천의 5·3 민주항쟁에서는 그 '이념의 시위'가 대학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선, 당시 몇 안 되는 사례일 것이다. 1980년 광주항쟁을 거치면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의 신제국주의적인 역할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되었고 1985년 겨울을 넘어서면서 이른바 자민투의 반미주의가 학생운동에 확산되었지만 일반시민이 참여한 정치적 시위에서 등장한 반미구호와 성조기 소각장면이 미국의 방송을 탄 것은 첫 사례로 꼽힐 것이다.[25] 바로 이러한 측면들에서 이 논문이 1986년 5월 3일 인천의 주안역 앞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발생했던 정치적 시위를 인천의 5·3 민주항쟁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V. 인천의 5·3 민주항쟁과 1987년 6월 항쟁

인천의 5·3 민주항쟁의 수배자를 찾는 과정에서 1986년 6월 4일 서울대학생 권인숙이 연행되었고 부천서에서 성고문을 당하는 처참한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14일 유성환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5·3 민주항쟁에서 나온 구호의 내용을 지지하면서 국시가 반공이 아니라는 발언을 했다.[26] 이 두 가지 사건은 인천의 5·3 민주항쟁

25) 이에 바로 며칠 앞선 1986년 4월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 4거리에서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전방입소반대시위에서 서울대생 김세진과 이재호가 분신하면서 "반전 반핵 양키 고홈"과 "미제의 용병교육 전방입소 결사반대"라는 구호를 외친 바 있다.

26) 김영곤, 2007.

과 1987년 6월 항쟁 사이의 연결점을 이루는 정치적 사건이다. 제3의 민주화 물결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인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프로테스트 모델의 대표 격인 정치적 시위가 인천의 5·3 민주항쟁과 1987년 6월 항쟁 사이에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주지하듯이 1987년 6월 항쟁은 같은 해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에 의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은폐하고 조작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분이 커져가는 상황에 의하여 촉발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에 국민적 참여라는 기름을 부은 것은 같은 해 4월 13일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약 일 년 전과 달리 개헌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이른바 '호헌선언'이었다. 이에 따라 1987년 6월 10일에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전국 22개 지역에서 박종철 고문살인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열었고 전국적으로는 수 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기에 이르렀다(동아일보 1987년 6월 11일자 1면). 그리고 6월 항쟁은 6월 9일 연세대학생 이한열의 부상과 6월 10일부터 15일 새벽까지 이어진 명동성당 농성 등에 영향을 입어 더욱 장기화되었다. 비록 명동성당 농성은 일단 6월 15일 새벽에 자발적으로 해산되었지만 바로 그날 저녁부터 명동성당은 시국미사와 촛불집회의 중심으로 남았다.

다음은 6월 항쟁이 시작된 10일부터 민주주의 이행에 있어서 첫 과정인 자유화를 알리는 6·29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 동아일보에 등장한 인천관련 기사를 전부 모은 것이다.

6월 10일(수): 오후 5시 50분부터 자정 경까지 시내곳곳에서 대학생 근로자들 산발적인 시위. 공단파출소 등 파출소 2개소 습격. 유리창 10장 경찰표시등 1개 파손. 오토바이 2대 탈취. 인하대생 등 2명이 최루탄에 부상. 경찰 24명 부상. 3백 47명 연행(동아일보 1987년 6월 11일자 5면).

6월 18일(목): 인하대 인천대생 3천5백5십 명(경찰추산)은 18일 밤 인천시내에서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후 6시반경 인천시 북구 부평동 부평역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인천지역 최루탄추방국민결의대회에 참석하려던 학생과 시민 2천7백여 명(연합통신보도)은 경찰이 대회장 출입을 봉쇄하자 오후 6시부터 시내곳곳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다 북구 산곡동-부평로-청천동 일대에서 이중 1천2백 명이 19일 새벽 3시 반까지 철야횃불시위를 했다. 이날 시위로 남구 주안동 한국수출6공단 앞 공단파출소가 돌과 화염병 습격을 받았으며 학생 8백여 명은 인하대 학생회관에서 철야농성을 했다(동아일보 1987년 6월 19일자 10면).

6월 19일(금): 인하대 인천대생 2천여 명은 19일 오후 2시와 3시 사이 각각 교내에

서 최루탄추방 인천지역 시민대회결과보고를 갖고 교내시위를 한 뒤 한 때 경찰과 대치했으나 시내로 진출하지는 못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19일 오전 7시 15분경 대학생과 공단근로자 등 50여명이 부평경찰서 청천파출소에 화염병 15개와 돌을 던져 집기 등을 부쉈다(동아일보 1987년 6월 20일자 6면).

6월 21일(일): 인하대생 등 인천지역 대학생 1백50명은 21일 오후 6시 10분경 동인천역 앞 중앙로에 모여 반정부 구호 등을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오후 7시경 해산했다. 학생들은 이날 대한서림 옆 골목 등에서 중앙로로 뛰어나오면서 반정부구호와 함께 유인물을 뿌리며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출동하자 부근에 모인 5천여 명의 시민들 사이로 흩어졌다(동아일보 1987년 6월 22일자 6면).

6월 22일(월): 인천대 인하대 부천 성심여대생 등 2천여 명은 22일 오후 각각 교내에서 출정식을 가진 뒤 오후 6시로 예정된 범인천시민대회 장소인 부평역광장 쪽으로 향했으나 경찰의 봉쇄로 대회를 갖지 못한 채 시내곳곳에서 1백-2백 명씩이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동아일보 1987년 6월 23일자 6면).

6월 25일(목): 인천기독노동자연맹과 인천기독청년협의회가 공동주관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25일 오후 7시 인천시 동구 만석동 동인교회에서 교인과 학생 등 2백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도회가 끝난 8시반경 인천지역인권선교위원회 소속 박경렬 목사(박종렬의 오타로 보임) 등 참석자들은 소형목재 십자가를 들고 교회에서 1백50여m 떨어진 인천극장 앞까지 나와 가두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저지되자 동구보건소 입구 오거리까지 물러나 밤 9시 50분경까지 연좌시위를 벌인 후 해산했다(동아일보 1987년 6월 26일자 6면).

6월 26일(금): 인천부천지역 대학생 시민 등 4천여 명은 경찰의 봉쇄로 예정된 행사가 무산되자 6시20분경부터 27일 새벽까지 부평로 등 시내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동아일보 1987년 6월 27일자 6면).

이러한 기록에 따르면 1987년 인천의 6월 항쟁은 대체로 인천대와 인하대 학생 및 노동자가 주축을 형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인천의 5·3 민주항쟁도 인사연이나 인노련과 학생운동 사이에 일정한 협의테이블에 의하여 준비되었듯이 인천의 6월 항쟁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천에서는 5·3 민주항쟁이 1987년 6월 항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6월 항쟁 기간 동안 벌어진 각 정치적 시위에서는 최소 약 150여명에서 최대 약 4천여 명의 인원이 집결했다. 또한 인천의 6월 항쟁에 있어서 중심지는 부평역 주변이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당시 부평역 앞 광장은

시위를 앞두고 번번이 봉쇄되었지만 부평역 앞 광장은 인천의 정치적 시위에 있어서 중심지가 되었다.

일단 6·29 선언이 나온 뒤 한국의 6월 항쟁은 소강국면으로 돌입했다. 그러나 7월 5일 연세대학생 이한열이 사고를 당한 뒤 20여일 만에 결국 사망했고 국민운동본부는 7월 9일 추도식과 살인정권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추도식에는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의 시민이 운집함으로써 6.10 국민대회와 6.26 평화대행진 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대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농활을 실시했고 제도정치권에서는 개헌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Ⅵ. 인천의 5·3 민주항쟁과 19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

익히 다 알고 있듯이 6·29 선언 이후 한국사회의 각 분야에서는 민주화가 확산되었다. 예컨대 노동계에서는 6·29 선언 이후 처음으로 7월 12일부터 "금융노련 산하 13개 단위노조간부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협의체 형식으로 노동조합민주화실천위원회를 결성"했다는 기사가 등장했다(동아일보 1987년 7월 13일자 11면). 그리고 "7월 들어 15일 동안 전국적으로 33개의 단위노조가 새로 결성"되었다(동아일보 1987년 7월 15일자 11면). 바로 이러한 노동계의 움직임이 6·29 선언 이후 학생이나 시민이 일상으로 돌아간 뒤 19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을 일으킨 서곡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1985년부터는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1985년에는 대우자동차에서 파업이 일어났고 구로지역 민주노조의 연대투쟁도 등장했다. 그리고 1986년에는 전국적으로 산재한 노동조합에서 임금인상투쟁도 확산되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제일피복 파업(2월 13일)과 한국광진자(3월 27일)의 임금인상투쟁 등이 발생했고 인천에서도 세진음향(3월 27일)과 경동산업(4월 23일)에서 임금인상투쟁이 일어났다. 그 외에도 이리의 후레아패션(4월 7일), 현대중전기(3월 18일), 현대자동차(4월 8일), 대우중공업(2월 26일), 시흥의 기아산업(4월 27일) 등에서도 경제적 시위가 발생했다.[27] 이러한 양적 변화가 축적되면서 1987년에 노동운동이 6·29 선언이후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대중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재벌기업의 제조업 분야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파업이 이루어진 것은 한국의 노동운동에 있어서 큰 변곡점이 되기에 충분했다. 가령 "현대엔진공업 노동자들이 7월 15일 회사 모르게 사외에서 전격적으로 노조결성

27)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노동사회사정 1987』, 1988, 14.

식"을 한 뒤 그 다음날 노조설립을 발표했다(동아일보 1987년 7월 17일자 6면). 그러나 현대미포조선에서는 7월 15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노조를 결성한 뒤 그 다음날 울산시청에 설립신고를 하던 중 관련서류를 괴한들에게 탈취를 당했다. 이에 현대미포조선 노동자 1600여명이 항의농성과 시위를 벌였고 이는 오히려 새로 설립한 노동조합의 가입자 숫자를 급격히 늘려주는 방향으로 기여했다(동아일보 1987년 7월 17일자 7면).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1980년 이후 모든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다양한 노동운동단체들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1987년 7월 노동계의 흐름에서는 동아일보에서 처음으로 인천관련기록이 등장했다. 7월 19일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성당에서도 해고노동자 650여명이 모여 복직을 위한 협의회를 결성하고 일주일 뒤인 26일 부천시 원미성당에서 개최되는 노동기본권쟁취대회에 참석할 것을 결의했다는 것이다(동아일보 1987년 7월 20일자 10면). 같은 날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 대강당에서는 "청계피복노조 한국기독노동자총연맹 등 민주헌법쟁취노동자공동위원회 소속 17개 단체회원과 해고노동자" 500여명이 노동기본권쟁취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최종 참석자가 2000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주목을 끄는 것은 무엇보다 태백의 통보광업소 파업이었다. 7월 20일 태백의 통보광업소에서는 광부 및 가족 600여명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동아일보 1987년 7월 21일자 7면).

1987년 7월 21일을 경과하면서 7·8·9월 노동자 대투쟁은 보다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7월 21일 하루에도 전국적으로 3개 사업장에서 새로운 노동자 시위가 벌어졌고 22일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노동자의 단체행동이 10여 건에 달했다(동아일보 1987년 7월 22일자 6면). 같은 날 인천에 소재한 신흥목재에서는 노동자 200여 명이 근로조건개선과 하계휴가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했다는 기록이 나온다(동아일보 1987년 7월 22일자 6면). 그러나 이후 남은 7월 동안 인천관련 기사는 찾아지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7·8·9월 노동자 대투쟁에 중요한 역할을 한 울산의 현대중공업 노동자 51명은 7월 21일 노조결성식을 가진 뒤 그 다음날 울산시청에 노조설립 신고를 마쳤다(동아일보 1987년 7월 22일자 6면). 그리고 7월 28일 드디어 울산의 현대중공업 노동자 1만여 명이 어용노조의 퇴진 등을 외치며 대규모 파업을 시작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7월 29일 현재 시위나 파업이 이어진 기업체는 "울산의 현대중공업 태광산업, 부산의 대한조선공사 국제상사 세신정밀공업 등이며 성남의 영진산업과 안양의 한국제지"에서는 28일까지 농성이 이어졌다가 노사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졌다(동아일보 1987년 7월 29일자 7면). 마침내 7월의 마지막 날에는 "노사분규"가 확산된다는 기사가 동아일보의 1면에 나올 정도로 1987년 7·8·9 노동자 대투쟁은 더욱 본격화되었다(동아일보 1987년 7월 31일자 1면).

다음은 1987년 7·8·9 노동자 대투쟁 가운데 가장 본격적이었던 8월 한 달 동안 동아일보에 등장한 인천관련 파업기사를 전부 모은 것이다.

8월 3일(월): 3일 오전 현재 근로자들의 농성 또는 작업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사업장은 ... 성진기업택시(인천) ... 등 (전국) 5개사에 이르고 있으나 그 인원이 40-80명 정도의 소규모 분규양상이다(동아일보 1987년 8월 3일자 11면).

8월 6일(목): 이날 오전 ... 영풍운수(인천) 등 12개 사업장에서 새로운 분규가 발생했다(동아일보 1987년 8월 6일자 7면).

8월 7일(금): 7일 낮 현재 .... 80여개 사업장에서 노사분규가 계속되고 있는 등 .... 또 대우중공업 인천공장 근로자 2천여 명이 이 회사 창원공장 근로자들의 농성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기본급 5만원 일률인상 등을 요구하며 철야농성(동아일보 1987년 8월 7일자 11면).

8월 8일(토): 8일 오전에도 ... 도계광업소와 장성광업소 등 9개 사업소장에서 ... 농성이 새로 발생 ... 이날 오전 현재 91개 사업장에서 노사분규가 계속되고 있다... 대우중공업 창원, 인천, 안양, 영등포 등 4개 공장근로자 5천여 명의 연대농성도 철야로 계속되었다(동아일보 1987년 8월 8일자 7면).

8월 10일(월): 한진인천지점 ... 등에서 노사간의 협상이 타결돼 근로자들이 정상조업에 복귀했다(동아일보 1987년 8월 10일자 1면).

8월 10일(월): 10일 대우자동차 인천 및 부평공장 근로자들이 농성에 돌입했다(동아일보 1987년 8월 11일자 화 1면).

8월 11일(화): 대우중공업 인천 ... 등 4개 공장의 노사분규가 11일 저녁 8시 일괄타결됐다(동아일보 1987년 8월 12일자 11면).

8월 13일(목): 13일 하루 중 인천의 코리아스파이서 대원음반기계 등 7개 사업장에서 새로 분규가 발생하는 등 경인지역에서만 25건의 분규가 새로 발생했다(동아일보 1987년 8월 14일자 1면).

8월 14일(금): (인천의) 산재근로자 400명 경인국도점거 농성 휴업급여 등 인상요구(동아일보 1987년 8월 15일자 7면).

8월 17일(월): 17일 서울에서는 ... 22개 사업장에서 새로운 노사분규가 발생했으며 인천(19개 사업장), 부천(9개 사업장) ... 등 수도권 지역에서 모두 78건의 노사분규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동아일보 1987년 8월 18일자 1면).

8월 19일(수): 19일 발생분규 중 52%인 77건은 서울(25), 인천(21), 안산(9), 부천(4) 등 ...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1987년 8월 20일자 1면).

8월 21일(금): 인천시내버스가 총파업일인 이날 선운행 후타결 방침에 노사가 합의, 9개 회사 중 5개 회사가 정상운행함으로써 ... (동아일보 1987년 8월 21일자 1면).
8월 22일(토): 인천은 완전타결 파업 하루 만에 풀어(동아일보 1987년 8월 22일자 1면).
8월 25일(화): 오전 현재 전국적 노사분규의 37%에 해당하는 2백12건은 서울(48건), 인천(53건) ... 등 수도권지역에서 계속 중이며 ... (동아일보 1987년 8월 25일자 1면).
8월 27일(목): 인천제철 철야농성 7백여 명 한때 크레인 몰고 도로점거 시위(동아일보 1987년 8월 28일자 10면).
8월 28일(금): 지난 26일 오후부터 현노조집행부의 퇴진과 직선제에 의한 민주노조 결성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민주노동쟁취위원회측 근로자 2백여 명은 28일 이 회사 본관건물을 검거한 채 3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동아일보 1987년 8월 28일자 10면).

19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은 거의 한 달이 넘을 동안 지속되어 8월 29일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의 장례식이 치러진 뒤 9월 4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자동차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강제해산이 이루어지면서 거의 막을 내렸다.[28] 당시 인천을 포함한 7·8·9월 노동자 파업의 특징을 살펴볼 것 같으면 가장 뚜렷한 것은 정치적 시위가 아닌 경제적 시위의 성격을 가졌다는 점이다. 7·8·9월 노동자 대투쟁은 대부분 임금인상, 체불임금지급, 유급휴가제 실시, 근로조건개선 등을 요구하는 경제파업의 성격을 가졌고 어용노조퇴진과 민주노조인정이나 노조결성방해중단 등을 구호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비하여 사회의 구조를 개혁하거나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정치적 시위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6월 항쟁으로 사회의 정치적 요구가 6·29 선언에 반영되었던 환경 탓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인천을 포함한 7·8·9월 노동자 대투쟁은 도미노와 같이 확산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경제적 시위가 울산, 부산, 창원과 같이 대규모 공단지역에서 밀집적으로 확산되었고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으로도 퍼졌던 것이다. 당시 제조업체에서 발생했던 시위가 18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업체(1265건)와 광업체(127건)가 뒤를 이었다.[29] 이는 시계열적으로도 7월에 경제적 시위가 약 85건 발생했다면 8월에는 무려 2577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 도미노 효과가 가속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28)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1988, 10.
29)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편, 1988, 15.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이듯이 1980년대 노동자의 파업이 점증했는데 1987년 전체 3749건 가운데 7·8·9월에만 약 2600건(약 70%)이 넘게 발생했던 것이다.

<표 1> 연도별 노동자 파업 건수

연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건수	186	88	98	113	265	276	3749

출처: 기사연리포트, 1988, 130.

1987년 인천의 7·8·9월 노동자 대투쟁도 전국적인 패턴과 대체로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에서 특기할 것은 인천에는 대학생출신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다. 당시 수도권의 학생운동출신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치적으로 비중이 큰 인천의 노동계에 투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로였다. 인천의 대규모 사업장은 물론 소규모 사업장마다 학생운동출신이 노조를 새로 결성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일으키는데 적지 않게 기여했다. 다른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인천에서도 자연발생적인 파업이 적지 않았지만 인천의 5·3 민주항쟁 이후 조직적인 재정비를 거쳐나간 다양한 노동조직의 영향력과 함께 조율을 거치면서 인천의 7·8·9월 노동자 대투쟁은 확산되어 나갔다.

Ⅶ.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인천의 5·3 민주항쟁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전 세계 정치학계의 민주화 이론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한국의 민주화에 적용해보았다. 그리고 프로테스트 모델에 입각하여 인천의 5·3 민주항쟁의 흐름과 특징을 조망한 뒤 인천 수준에서 5·3 민주항쟁과 1987년 6월 항쟁 및 7·8·9월 노동자 대투쟁의 흐름과 특징을 찾아보았다. 이 과정에서 이 논문은 1986년 5월 3일 인천의 주안역 앞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발생했던 정치적 시위의 위상을 재조명해보고 이를 인천의 5·3 민주항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인천의 5·3 민주항쟁의 인적이고 정신적인 전통이 인천의 1987년 6월 항쟁 및 7·8·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인천의 5·3 민주항쟁은 1986년 당시 개헌논의는 물론, 1987년 6월 항쟁 및 7·8·9월 노동자 대투쟁 등과 밀접하게 서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1987년 한국의 민주화와 떼어놓고 이해할 수 없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인천의 5·3 민주항쟁은 1980년 이른바 '서울의 봄'과 광주항쟁 이후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정치적 시위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1986년 5월 3일 인천의 주안역 앞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발생했던 정치적 시위는 그 이후 국내정치에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막대한 정치적 파급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5월 3일 인천의 개헌대회는 1986년 2월 이후 개최되었던 일련의 개헌대회 가운데 가장 대규모였고 이러한 정치적 시위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끄는 것이다. 또한 이 정치적 시위는 인천에서 발생했지만 비단 인천이라는 지리적 공간에 국한되었거나 대학생이라는 인적인 특성에 제한되지 않았다. 비록 인천의 5·3 민주항쟁이 대중적이지 않은 정치적 구호들로 얼룩졌고 돌출적인 행사였다는 비판을 받지만 조직적인 준비가 상당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과거 연구자들이나 기록가들이 제시한 인천의 5·3 민주항쟁에 대한 평가와 적지 않게 차이가 있다. 우선 5·3 민주항쟁을 '사태'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평가는 광주항쟁을 '광주사태'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다고 하겠다. 5·3 민주항쟁을 5·3 (소요)사태라고 평가하는 것은 1980년 광주항쟁을 광주(소요)사태라고 보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프레임과 다르지 않는 것이다.[30] 조희연이 발표한 "5·3인천사태와 급진적 민주주의정신"이라는 논문은 5·3 민주항쟁을 "급진적 민주주의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분출한" 사태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31] 이우재의 "5·3인천사태를 뒤돌아보며"에서도 "5·3사태는 전두환정권의 무자비한 폭력이 맹위를 떨치던 그 험한 80년대 중반에 압제의 사슬을 끊고 민주화를 외치며 들고일어난 민중항쟁"이었다고 상반된 평가를 한 문장에 사용하고 있다.[32]

그리고 예컨대 1980년 이후 수도권 최초의 최대 규모 정치적 시위인 인천의 5·3 민주항쟁은 이에 앞서 치러진 3월 30일 광주대회와 여러모로 비교된다. 특히 광주대회에 대한 광주인들의 평가가 그렇다고 하겠다. 광주대회에서 신민당의 공식집회가 끝난 뒤 오후 6시부터는 광주시민 약 30여만 명이 집결했다. "이 현장의 열기를 보고 전남지역 청년운동세력 사이에서 평가가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논의는 '3.30 광주민중투쟁선언'으로 정리되었"다.[33] 이날 광주에서는 69명이 연행되었는데 "대학생 12명, 무직 24명, 음식점종업원 12명, 운전사 등 근로자 4명, 상업 및 회사원 10명, 농민 7명"으로 구성되었다(동아일보 1986년 3월 31일 11면). 다시 말해 여기에서 인천의 5·3 민주항쟁보다

30) 조현연, 2006, 30.
31) 조희연, 2003.
32) 이우재, 2003, 17. 이러한 혼동은 "5·3인천사태"(민주화기념사업회, 2007, 350)라는 제목의 기록에 "5·3항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과 똑같다(민주화기념사업회, 2007, 353). 물론 이우재(2006)는 인천 5·3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식에서는 "5·3항쟁의 개요"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33) 조현연, 2006, 20.

정치적 파급력이 크다고 하기 어려운 광주대회에 대한 광주인들의 적극적인 해석과 평가가 주목을 끈다는 것이다.

'사태' 외에 현재까지 인천의 5·3 민주항쟁은 다양한 평가를 받을 뿐더러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다. 예를 들면 "5·3인천항쟁 20주년에 부쳐"라는 발간사(김병상 몬시뇰), 5·3민주화운동 기념사업추진위원회, 1986년 5·3인천투쟁 또는 5·3(인천)투쟁(조현연 2006, 31), "5·3운동의 역사적 재조명"(2003년 5월 2일 5·3민주화운동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최한 5·3인천항쟁 20주년에 행사), "5·3 인천민주화운동과 노동자의 역할"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평가의 다양성은 활발한 논의를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30년이 지나가는 긴 세월동안 인천의 5·3 민주항쟁의 빛을 바래고 있을뿐더러 심지어 "5·3에서 미래로"라는 식으로 정체성의 부재로 이어질 단점도 안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논문의 연구결과와 같이 1986년 5월 3일 현장을 기념하는 표지석에 담겨있듯이 "5·3인천민주항쟁을 기념"하며 "인천 5·3 민주항쟁 터"라는 것이 가장 생생하며 인천의 1986년 5월 3일의 의의를 가장 적합하게 담고 있다고 본다.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은 1986년 인천의 5·3 민주항쟁은 물론 1987년 6월 항쟁과 같은 정치적 시위(프로테스트)의 축적 결과 이루어졌다. 1987년 12월 대통령선거 이후 한국은 민주주의 공고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 과정은 매우 인내를 필요로 하는 길고 복잡한 과정이다. 세기가 바뀐 후에도 많은 학자들은 여전히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불균등한 발전이 민주주의 공고화의 냉정한 현실이며 또 현 단계 제3의 민주화 물결의 문제라고 이해한다. 따라서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두 영역의 균등적인 발전이 민주주의 공고화의 중요한 과제이다. 대표적으로 다이애몬드는 2001년 기준으로 전세계의 정치체제를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 애매모호한 정권(ambiguous regime), 경쟁적 권위주의(competitive authoritarianism), 패권적 선거권위주의(hegemonic electoral authoritarianism), 폐쇄적 권위주의(politically closed authoritarianism)로 민주주의 공고화의 수준에 따라 구분하고 여전히 많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애매모호한 정권 또는 잡종 정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분류하고 있다.[34] 한국의 공고화도 선거만 자유롭게 치러지는 민주주의나 애매모호한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준에서 멈돌고 있다. 앞으로 더 긴 세월동안 한국의 공고화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34) Diamond 2002.

<참고문헌>

김영곤, 「5·3 인천민주화운동과 노동자의 역할」, 『인천학연구』, 2007, 제6권, 313-354.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편, 『6월 항쟁을 기록하다: 한국민주화대장정 2』, 2007, 서울: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우재, 「5·3인천사태를 돌아보며」, 『5·3운동의 역사적 재조명(인천 5·3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최 토론회)』, 2003, 17-18.

이우재, 「5·3항쟁의 개요」, 『인천 5·3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식 자료집』, 2006.

조현연, 「5·3에서 미래로: 1986년 5·3인천투쟁과 '위기의 민주주의'」, 『인천 5·3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식 자료집』, 2006.

조희연, 「5·3인천사태와 급진적 민주주의」, 『5·3운동의 역사적 재조명(인천 5·3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최 토론회)』, 2003.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노동사회사정 1987』, 1988, 서울: 민중사.

Bellin, Eva. 2000. "Contingent Democrats: Industrialists, Labor, and Democratization in Late-Developing Countries." World Politics 52 (2, January): 175-205.

Berins, Ruth, and James Mahoney. 1997. "Adding Collective Actors to Collective Outcomes: Labor and Recent Democratization in South America and Southern Europe." Comparative Politics 29: 285-303.

Bratton, Michael. 1997. "Deciphering Africa's Divergent Transitions." Political Scientific Quarterly 112: 67-93.

Bratton, Michael, and Nicolas Van de Walle. 1992. "Popular Protest and Political Reform in Africa." Comparative Politics 24: 419-442.

Bratton, Michael, and Nicolas van de Wall. 1997. Democratic Experiments in Africa: Regime Transi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hl, Robert A. 1971.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Diamond, Larry. 2002. "Thinking about Hybrid Regimes." Journal of Democracy 13(2, April): 21-35.

Eckstein, Susan. ed. 1989. Power and Popular Protest: Latin American Social Movement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Huntington, Samuel P.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Karl, Terry Lynn. 1995. "The Hybrid Regimes of Central America." Journal of Democracy 6: 72-86.

Lee, Junhan. 2002. “Primary Causes of Asian Democratization: Dispelling Conventional Myths.” Asian Survey 42 (6, November/December): 821-837.

Linz, Juan J., and Alfred Stepan. 1996.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Lopez-Pintor, Rafael. 1987. "Mass and Elite Perspectives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to Democracy." In Comparing New Democracies: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in Mediterranean Europe and the Southern Cone, ed. Enrique A. Baloyra. Boulder: Westview Press.

Mainwaring, Scott, Guillermo O'Donnell, and J. Samuel Valenzuela. 1992. Issues in Democratic Consolidation: The New South American Democrac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O'Donnell, Guillermo, and Philippe. C. Schmitter. 1986.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rzeworski, Adam. 1991. Democracy and the Market: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 and Latin Americ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Tarrow, Sidney. 1995. "Mass Mobilization and Elite Exchange: Democratization Episodes in Italy and Spain." Democratization 2: 221-245.

Tarrow Sidney. 1996. "Social Movements in Contentious Politics: A Review Articl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0 (4, December): 874-883.

Tarrow, Sidney. 1998. Power in Movement: Social Movements and Contentious Politics N. Y.: Cambridge University Press.

Wood, Elisabeth Jean. 2001. "An Insurgent Path to Democracy: Popular Mobilization, Economic Interests, and Regime Transition in South Africa and El Salvador."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4 (8, October): 862-888.

토론문1

인천 5·3 항쟁과 민주·진보운동의 미래
-요구 주의 주장을 중심으로-

김영곤 (전 고려대학교 강사)

<토론문>

인천 5 · 3항쟁과 민주-진보운동의 미래
-요구 주의 주장을 중심으로-

Ⅰ 5·3항쟁은 우리 사회의 주의 주장이 모인 저수지며 파생한 수원지

한 지역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에서 종적 횡적으로 완결성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5·3항쟁에서 요구 주의 주장의 측면에서 당대의 문제가 모이고 이후 다시 한국사회로 파생한 특징이 있다. 5·3항쟁을 인천 나름으로 해석하고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이준한 교수는 발제문「인천의 5·3민주항쟁과 한국의 민주화」에서 세계 민주화운동의 추세에 비추어 한국은 민주주의 이행을 거쳤는데 앞으로 민주주의의 공고화 또는 실질적 민주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자[35]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의 앞날에 대한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해한다. 토론문에서는 인천지역 민주 진보 사회운동의 미래를 살펴보아 이 교수가 지적한 실질적 민주화의 내용을 구성한다.

유럽에서 19세기 초 노동조합이 합법화되었으나 오히려 임금이 줄고 일자리가 부족해져 무력감이 나타나자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사회주의를 주창하며 공산당선언(1848)이 나왔다.

베트남전쟁이 진행되는 시점에 서유럽에서는 피압박민족을 억압하는 베트남전쟁을 반대하고 일체의 권위를 부정하는 68운동이 일어났다. 미국에서는 흑백분리운동 반대, 히피, 뉴 레프트가 일어났다. 프랑스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업했으나 드골정권과 교사의 임금인상에 타협하고 싸움을 중단하자, 나머지 노동자와 학생이 투쟁을 계속하며 대학을 개혁하고 지식사회의 새 장을 열었다. 이것은 유럽 사회를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없는 좌익정당과 좌익노조의 부정이었다.

87년 6월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 한국은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이룩했다. 각자

35) 필자는 대우중공업 인천공장에서 해고된 뒤 5·3항쟁 당시 안산 (주)일진에서 노동자로 생활했다. 5·3집회에는 참가하지 못했고 경기남부지역에서 함께 활동하던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인천과 관련하여 「5·3인천민주화운동과 노동자의 역할」 『인천학연구』(2007, 제6권), 「인천지역 협동조합 생존의 흐름과 현안」 『인천학연구』(2014, 제20권)을 썼다.

가 자신이 속한 이익 공동체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 그 결과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기업도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치중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진보계열의 정의당 통합진보당 노동당 녹색당도 지지자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핵심 당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그런 오해를 받는다.

반면 IMF사태 이후 임금인상은 정체되거나 인하되고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고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졌다. 민주-진보운동은 전망을 제시하지 못했다.

2013년 12월 파업하는 철도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놔두고 우리는 안녕한가?, 결국 "우리의 운명이 된다" 며 전국의 대학 고등학교에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을 불어왔다. 이들은 나의 행복을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자유 공간 용기를 요구하고 표출했다. '안녕들'은 가족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 나와 직접 연결되는 공동체를 넘는 공동체를 상상했다. 이전에 정파로 나뉘었던 학생운동에 사물을 통합적으로 보려는 새로운 흐름이다.

세월호 사건에 고등학생까지 포함하여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라!"을 부정하며 "잊지 말자!" "함께 살자!"고 저항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혼자서는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가 5월 29일 특강에서 만난 경희대 학생들은 "지금까지는 나 혼자만 잘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잘 살려면 이웃도 잘 살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영남지역의 원전뿐만 아니라 중국 동부해안의 원전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큰 걱정이라고 했다. 이것은 우리 민주사회운동의 이후 과제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시사한다. 이러한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흐름은 6·4지방선거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유럽사회에서 나타났던 기존 좌익 노동조합과 좌익정당을 부정한 것과 현재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기존 민주-진보운동의 부정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기존의 사회운동이 정체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데 대한 부정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개념은 유럽에서는 1970년대에 나왔으나 한국에서는 1987년 이후에 일반화했다.

유럽에서 노동조합, 사회주의, 협동조합이 일어나고, 동유럽에서 사민주의, 역사적 사회주의가 전개되고, 서유럽에서 사민주의, 유러코뮤니즘, 공공부문, 선거를 통한 민주주

의를 거치고, 동유럽의 역사적 사회주의가 무너진 뒤 유럽 전체에서 공동체주의(community)가 등장했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2세기 이상이 걸렸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1960년대 이후 압축 성장을 겪으며 19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이후 불과 27년 사이에 이런 요소들의 거의 한꺼번에 분출했다. 이를 겪은 대중이나 사회운동 역시 이를 모두 소화해 대처하기가 벅차다. 무엇이 성공한 경험인지 실패한 경험인지를 구분하기 어렵고 그에 대해 대안을 세울 시간이 부족했다. 개인이 이것들을 경험하고 문제점을 알고 대안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지금 민주진보운동이 겪는 어려움은 이런 점에 온다.

5·3항쟁이 일어난 지 28년이 되었다. 2년이 지나면 30년이다. 민주진보운동은 5·3항쟁이 30년 지난 시점에서 평가하고 이후 30년의 장기전망을 세워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요구 주의 주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모순이 어떻게 5·3항쟁에 집중되었고, 5·3항쟁에서 백화제방의 꽃을 피웠고, 5·3항쟁 이후 30년 동안 어떻게 파생되었는가들 살핀다. 이어 나아가 이후 30년 동안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본다.

한국사회 전체를 먼저 살피고 이어 인천지역의 특성 과제를 살핀다.

Ⅱ 5·3항쟁의 뿌리 현장 현재 미래

1. 5·3항쟁으로 요구 주의 주장이 모이기까지

한국사회에서는 임오군란 이후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전개했다.

외국군대의 존재와 내정간섭 반대, 일제에 대한 민족해방운동, 미군과 전쟁 반대, 이승만 독재 반대, 4·19민주혁명, 6·3한일협정 반대, 개발독재 반대, 농업개방 반대, 부마항쟁과 광주항쟁 등이 일어났다. 이들은 5·3항쟁에서 여러 요구 주의 주장의 배경이 되었다.

지역적으로 한국사회, 수도권, 그리고 인천의 민중이 겪는 요구가 5·3항쟁에 집중되었다.

일제 강점의 식민지 사회를 거쳤고, 8·15 해방 뒤 식민지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한국사회는 식민지 이래 축적된 친일 유산의 모순이 지금도 심각하게 나타난다.

군사독재 반대 체육관의 간접선거를 반대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흐름이 있었다. 미국은 제3세계의 지배구조를 군사독재에서 자본으로 대체하는 문민화의 방향성을 가졌다. 이것은 전두환 정권이 추진하던 이원집정제와 대립했다.

1960년대 산업화를 겪으면서 농촌사회는 분해했고 노동자계급이 형성되었다. 5·3항쟁 직전에 산업화에 따른 노동자 계급의 형성은 수도권, 부산 마산 등에 집중되었다. 노동자의 불만은 임계점에 이르렀다.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으로 개항 이래의 항만산업이 발전하고, 개발독재를 거치며 경공업이 발전하고 노동자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5·3항쟁 시점에 경공업이 퇴조하고 중화학공업 전자공업이 대체했다. 동일방직 사건(1978), 대우자동차파업(1985)이 일어났다. 이런 배경 아래 인천지역은 노동자가 항쟁의 한 축을 이룬 5·3항쟁을 감당할 수 있었다.

부마항쟁은 민주화의 요구와 아울러 사양화한 부산의 고무, 마산의 섬유노동자, 그리고 학생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광주항쟁은 민주화의 요구가 강했다. 광주항쟁 이후에 정파 갈등이 표면화했다. 이 둘은 요구 주의 주장의 측면에서 5·3만큼 다양하지 않은 점이 다르다. 5·3항쟁 직전에 일어난 두 항쟁의 요구는 5·3항쟁이 계승하고 구체화하여 백화제방의 꽃을 피웠다.

2. 요구 주의 주장이 모인 5·3항쟁 + 0년

광주 학살을 거쳐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이원집정제를 통해 전두환의 권력을 연장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은 군사정권자본보다 자본이 우위에 서는 문민화를 지향하는 과정에 있었다.

5·3항쟁에서 이전 사회 모순을 응축하여 직선제 요구의 반독재 민주주의, 노동자의 권리, 민중연대, 민족자주, 미군철수의 요구가 등장했다.

첫째, 신민당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다.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역시 직선제를 요구했다.

둘째,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최저생계비, 8시간 노동제, 산재대책, 단결권 보장, 파업 시위의 자유 같이 노동자의 생활과 권익보장에 관한 요구, 노동해방,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 민중생존권보장, 삼민(민족·민권·민생)헌법 쟁취 등을 주장했다. 인천지역노동자연맹, 서울노동운동연합, 인천기독노동자연맹은 삼반정권 타도, 군사독재 타도, 제국주의 축출 등 민주보다는 민중의 생존과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되는 헌법 개정을 주장했다.

셋째, 노동자 학생들은 민민투는 삼민헌법, 자민투는 미일외세축출, 군부파쇼타도, 민주헌법쟁취를 주장했다.

넷째, 민중문화운동협의회는 양키문화 반대 민중문화를 주장했다. 그리고 시위대는 농산물개방을 반대했다.[36)]

당시 요구 주의 주장 가운데 온건한 것도 있었고 급진적 것도 있었다. 장단기 과제가 혼재되었다. 이들은 이 시점 한국사회의 요구, 수도권, 인천 지역의 요구를 응집한 것이다. 이러한 요구 주장은 현재는 물론 이후에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생태환경의 지속가능성 요구는 잠재해 있고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었지만 5·3항쟁 당시에는 아직 요구 주장으로 표면화하지는 못했다.

이들 요구가 시기적으로 정당하냐 표출방법이 적합하냐 하냐는 논쟁이 있었다.[37)] 이것들은 노동운동이나 민족민주운동의 연대체가 아직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왔다. 광주항쟁 이후 사회운동에서 1970년대 운동이 개량적이라고 비판했는데, 노동자 학생의 민통련 비판에는 이런 점도 작용했다.

조직도 청년학생의 연대조직인 민통련과 노동자 조직이 협력하지 못하면서 통일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경찰도 개입해 대회를 혼란스럽게 했다. 이후 여러 주체가 전국민족민주연합,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과 같은 연대체를 구성하면서 5·3항쟁 때 일어났던 참가 주체간의 혼돈은 집회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이들 요구는 19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의 기폭제[38)]가 되는 동시에 분화하여 시

36) 김영곤, 「5·3인천민주화운동과 노동자의 역할」 『인천학연구』(2007, 제6권)

37) 이호룡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통사를 정리하려면 한국 민주화운동사의 큰 흐름이라는 보편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라며 “민주화운동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파 간 갈등이 큰 만큼, 발간 전에 각 단체나 정파의 이의를 받아들여야한다”고 말했다.(인천민주화운동연구와 편찬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인천in.com』, 2013.11.22.)

38) 오유석 성공회대 교수는 “지역운동사 관점에서 살펴보면 1986년 5.3 인천항쟁은 6월 항쟁에 기폭제가 된 역사적

차를 두고 나타났다.

6월 민주항쟁에서 주된 요구는 직선제의 정치적 민주주의 요구였다. 6·29선언에서 전두환 정권이 직선제를 수용했다. 이후 약간의 합법적 공간이 형성되면서 노동자 대투쟁 폭발했다.

6,7,8월 노동자 대투쟁에서 생활임금 쟁취의 노동조건 개선,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존중,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의 노동자 계급의 해방 요구가 나왔다. 제헌의회 구성과 같은 급진적인 요구도 나왔다.

이런 점에서 5·3항쟁, 6월항쟁, 노동자대투쟁의 일련의 사건은 약간 넓은 의미에서 노동자의 요구를 포함한 민주화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 발생한 큰 사건이다. 5·3항쟁은 아래 그림1처럼 여러 가지 요구 주의 주장 사상이 모인 저수지이며, 이들이 다시 5·3 이후 여러 가지 사건으로 파생한 수원지다.

<그림1, 민주주의 이행과 실질적 민주주의의 요소>

<table>
<tr><th colspan="2"></th><th>민주-진보운동</th><th>국내</th><th>세계</th></tr>
<tr><td rowspan="3">5·3-30년</td><td></td><td>민족해방, 사회주의, 외군철수, 민족주의, 민주주의, 노동자 농민의 권리</td><td></td><td rowspan="3">전쟁, 냉전, 식민주의</td></tr>
<tr><td>부마항쟁</td><td>학생 노동자의 독재반대</td><td>독재반대</td></tr>
<tr><td>광주항쟁</td><td>학생 시민의 독재반대</td><td>독재반대(미군반대)</td></tr>
<tr><td rowspan="3">5·3+0년</td><td>5·3항쟁</td><td>반독재 민주주의, 노동자의 권리, 삼민, 민중연대, 민족, 미군철수, 반전 평화, 반핵</td><td rowspan="3">이원집정제 vs 직선제
노동계급의 복권</td><td rowspan="3">대처리즘
레이거니즘
신자유주의
지속가능성</td></tr>
<tr><td>6월항쟁</td><td>대통령 직선제</td></tr>
<tr><td>노동자대투쟁</td><td>노동자의 권리,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삼민헌법</td></tr>
<tr><td colspan="2">5·3+30년</td><td>평등사회(전노협), ‘국민과 함께하는’(민주노총), 임금인상 등 근로기준의 향상, 진보정당, 지속가능성</td><td>민주진보의 퇴화, 조합주의 경향</td><td>독재의 문민화
신자유주의</td></tr>
<tr><td colspan="2">5·3+60년</td><td>지역, 한국, 세계차원의 공동체 의식, 민주주의, 사회적 조합주의, 협동조합, 공공경제, 지속가능성 생태환경 원전폐기, 반전 평화, 통일,
초국적기업 노동문제, 세계연대</td><td>민주복지사회?
극심 격차사회?
낙후한 사회?</td><td>세계적 격차, 세계적 부유세, 지속가능성 위기, 인류위기, 세계정부</td></tr>
</table>

사건인데도 서울 중심적인 기술로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인천민주화운동연구와 편찬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인천in.com』, 2013.11.22.)

3. 내가 속한 이익공동체에 멈춘 5·3항쟁 + 30년

1) 2016년이면 5·3항쟁이 일어난 지 30년이 된다. 5·3항쟁 이후 3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진보했고 또 정체했는가를 살펴본다.

인천지역은 제조업 다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경기가 퇴조했다. 노동조건 개선의 속도가 지연되거나 후퇴하고 실업자가 늘고 비정규직의 비중이 커졌다. 금융자본의 재테크로 불로소득이 늘어나면서 노동자 민중의 삶이 악화됐다. 노동운동 사회운동 등 민주진보운동도 영향력이 줄었다.

민주 진보세력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세력은 보수화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지점에서 보면 민주적이나 지역이나 지지계층으로 들어가 보면 확실히 보수화했다. 지역이나 부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거의 토호수준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삼성을 거역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자 농민 민중을 대변하는 온전한 민주세력으로 볼 수 없다.

2) 대안으로 진보세력은 독립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조직을 만들었다.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1990)은 평등사회를 지향한다고 했다. 이 주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계승되지 못했다.

1995년 민주노총은 '국민과 함께하는'을 표방했으나 그것을 실천한 것은 아니다. 임금인상, 노동3권, 실업대책, 비정규직 철폐, 재벌해체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조합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1987년 이후 사회운동은 여러 사회운동 부문이 연대조직을 만들었다. 다른 나라 역사에서 나오는 정당이나 노동자단체 등의 외곽을 형성하는 민족민주전선과는 달리 상설공투체였다.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이 그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했다. 지금도 이런 단체가 있지만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시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금은 촛불, 횃불 등의 미조직 대중이 저항의 역할을 한다.

노동자들은 민주노동당 등을 만들어 합법적 대의정치 영역에 진출하여 대통령 후보를 냈고, 국회의원도 배출했고,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의원에 다수 진출했다.

진보정당이 합법화하며 민주노동당은 진보세력 전체를 대표했다. 그러나 현재는 정의당, NL계열의 통합진보당, 노동자 중심의 노동당, 지속가능성의 녹색당 등으로 나뉘었다. 진보정당은 대중의 이익의 정치영역에 수렴하기보다 정파가 필요한 사항을 대중에게 내리먹이기를 한다. 진보정당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진보성향의 유권자로서는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 선택하기가 어렵다. 차선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 투표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진보정당이 대중의 새로운 요구를 담지 못하는 상태다. 1980년 광주항쟁 이후 형성된 NLPDR의 이념 분할 구도와 정파의 틀을 넘지 못했다. 민주노총, 생활협동조합 등의 조합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집단이익을 대변하여 조합주의의 굴레에 머물고 심지어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기까지 한다.

사회는 민족 민주 민중을 넘어 평화 반전 반핵 지속가능성까지를 요구한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안전도 사회의 주요한 요구로 등장했다. 민주진보운동은 낡은 구도를 깨고 새로운 모델을 정립할 단계에 이르렀다.

4. 5·3항쟁 + 60년은 경쟁에서 협동하는 공동체로

1) 5·3항쟁 이후 60년의 사회는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를 넘어 좀 더 넓은 사회 공동체가 구성원의 행복을 함께 책임지는 상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희생당한 사람은 주로 반월공단지역 노동자들의 자녀들이었다. 만약 원전사고가 날 경우에 희생자는 계층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생각한 공동체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공동체의 개념 설정과 실현이 필요하다. 나 가족 학벌 지연 회사 노동조합 협동조합 정파의 조합주의를 넘은 움직임이 있다. '안녕들하십니까'(안녕들), '가만히 있어라! - 잊지 말자!'에서 나타난다. 지역사회, 한국사회, 지구사회 차원에서 집단지성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 공통 요구는 공동체(community) 사회의 요구이다.

2)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는 더욱 후퇴했다.

부가 극단적으로 집중됐다. 세계 차원의 빈부 격차가 극심하다. 신자유주의는 산업화의 주축인 노동자는 더욱 가난하게 하고 중산층을 분해했다.

계층은 일부의 최상층과 다수의 하층으로 분화했다. 다수의 하층은 저임노동자 비정규직 빈농 도시빈민 이주노동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에서 상위 1%가 버는 돈이 하위 40%의 소득과 맞먹는다. 소득 100만원 이하 소득계층 자녀의 대학진학율은 58.3%로 100만원 이상 소득계층의 82.6%보다 24%나 낮다. 소득격차가 교육 차별의 대물림으로 나타난다.(『경향신문』 2014.06.13.) 재벌과 초국적 기업은 골목상권까지 침투해 골목상인들이 저항했다.

자본은 공기업을 민영화해 공공재산을 개인에게 넘기고 또 비싼 요금을 통해 소비자를 유린한다. 의료 교육 부문에서 민영화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지속가능성 핵발전, 전쟁의 위험성이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스티븐 호킹은 "인구 증가와 자원 고갈로 지구환경이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는 1000년 뒤가 아닌 100년 뒤에 삼아남기 위해 대응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문화일보』, 2014.03.19.)

3) 실질적 민주주의 구성

실질적 민주주의를 두고 포괄적 통합적 실사구시의 접근 인식 실천이 필요하다. 노동자 민중은 남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각 부분에서 사회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운영해야 한다. 노동자-소비자는 노동조직 능력이 향상돼 조합주의를 넘는 사회적 조합주의로 나아갈 능력이 있다. 의지가 없을 뿐이다.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성 요소를 민주주의와 진보정치, 협동조합과 사회적 조합주의, 지속가능한 교육, 공공경제, 지속가능성, 자주 평화 통일, 세계연대의 7개로 나누었다. 이 요소들이 상호 순환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경우 생활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요소 가운데 임금과 같은 직접 소득이 비중이 컸던 상태에서 위에서 말한 실질적 민주주의 구성 요소의 비중과 역할이 커진다.

인천지역은 항만 항공 국제물류 교육의 중심지로,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 전자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송도를 중심으로 국제 교육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① 민주주의와 진보정치

가. 민주-진보정치의 성취와 둔화

민주주의로 이행한 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다. 조선시대 이래 민주-진보적 세력이 처음으로 집권했다는 평가도 있다.[39] 두 정권이 민주정권으로 시민들의 사고와 행동을 자유스럽게 했다. 그러나 초국적 기업과 재벌의 횡포를 막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는 삼성을 대처하기보다 오히려 의탁하기까지 했다.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새정치국민연합)은 '젊은 피를 수혈한다'며 진보적인 청년을 영입했다. 그러나 이들은 민주당의 보수적 기류에 곧 물들었다. 필자는 한국사회에서 3대 난제로 국가보안법 철폐, 삼성의 노동조합 인정, 대학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을 꼽는다. 김대중 정권시기에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당시 야당의 반대도 있었지만 정작 민주당(열린우리당) 내부 의원의 이탈로 실패했다. 진보정당도 합법화했으나 대중들에게 신뢰를 잃고 전망을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당(새정치국민연합)의 보수화, 진보정당의 약화는 거꾸로 새누리당이 개발독재 키운 파이를 나누지 않고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다. 진보정치가 자리 잡는다면 민주당은 덜 보수화하고 새누리당도 횡포를 덜 부리고 사회는 느리지만 민주-진보의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나. 진보정치

진보정치는 1987년 노동자계급의 복권을 거치고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거치면서 민주노동당을 결성했다. 민주노동당은 설립 당시 원내교섭단체의 구성은 물론 집권을 꿈꿨다.

그러나 진보정당이 합법화된지 20여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진보는 기존의 논리를 고수하고 지분 지키기에 안주하며 독선적이어 대중의 신뢰를 잃었다. 정파는 사상적으로 교조적이고 조직을 넘어서는 내부 비판이 없고 대중의 요구를 자신의 문제로 삼지 않는다.

보수세력은 생산 소비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점에서 사회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중도보수는 보수화해 입지가 약화되었다. 진보정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독자적인 가치 외에 중도정당을 건전하게 하고 보수정당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다.

39) 류승완, 당진에서 「동양철학의 현대적 해석」 강의, 2012.12. .

그러나 민주당이 반독재의 반사이익을 누리듯이 진보적인 표는 내 표라는 인식이 있다.

진보정당은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무려 세 차례에 걸쳐 분당 사태를 겪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진보신당과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으로의 분당이 그것이다.

2014. 6·4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통틀어 광역단체장 선거 17곳과 기초단체장 선거 226곳에서 단 한곳도 얻지 못했다. 광역의원은 지역 705석 중 1석, 비례 84석 중 3석을 얻는 데 그쳤다. 광역의회 의석점유율이 불과 0.5%인 것이다. 기초의원은 전체 2898석 중에서 단 51석을 얻었다. 의석점유율 1.76%다. 2010년 지방선거 때는 의석점유율이 광역의원은 4%, 기초의원은 5.6%였다. 이번 지방선거를 변곡점으로 진보정당들은 제3세력은커녕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2% 정당의 지위마저도 상실했다.

어느 대학의 경우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NL계열과 PD계열이 각기 후보를 내세워 표를 나누는 바람에 비운동권 후보가 2년 연거푸 당선됐다. 두 계열의 학생들에게 서로 협력해 후보를 해를 걸러 내라고 권고하면, 그러고 싶지만 각 정파가 전국 차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이런 현상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반복될 것이다.

사람이 전망일 잃고 지쳐 떨어져 나가거나 중도 보수정당에게 흡수되었다. 부유세, 상가임대차 보호법, 무상의료, 무상급식,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참신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지 너무도 오래다. 새로운 상황에 맞는 가치를 내놓지 못했다.[40] 진보정치가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재벌을 비판하지 않거나 기대는 것은 잘못이다. 거짓 진보이다. 진보세력이 단결하지 못해 입지가 약하다는 것은 단견이다.[41]

정권과 공안기관도 이들의 분열을 이용했다. 정권과 공안기관은 NL계열이 강해지면 이를 탄압하여 약화시키고 그 사이 PD계열은 커진다. PD계열이 커지면 이를 탄압하고 NL계열을 풀어주기를 반복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진보운동은 수십년이 지나도 독립

40) 고원, 『한겨레』, 2014.06.06.
41) 김학로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 2014.06.14.

적 정치세력으로 자리 잡기 어려웠다.

진보정당의 사상적 기초인 NL, PD, 지속가능성의 개별 사상은 각기 역사적 뿌리가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면 이들은 한 가지 사물의 여러 가지 성격이다. 그 자체가 독립된 사물이 아니다. 그동안 독립된 사물인양 생각했고 이것이 정파의 뿌리가 되었다.

이들 사상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강조하거나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42]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모순은 자본과 노동의 관계, 민족 자주의 문제, 생태환경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들을 통합적으로 사고할 때 원전 문제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사고는 진보정당의 통합이나 연대의 사상적 기초가 된다.

진보정치가 하나의 정당으로 모이는 방법도 있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법도 있다.[43]

진보정당은 최소한 원내교섭단체 정도는 되어야 한다.[44] 남북분단의 특수한 상황이 작용하여 어렵지만, 자본의 강함과 간교함을 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과정을 통해 장기전망을 세워야 한다.

정치는 생활과 전망이 결합한 결과이다.

"자본은 의회적 정치를 무시하고 초국적 금융시장을 이용한다. 자본이 이렇게 초의회적 정치행위를 펼친다면, 좌파 역시 마땅히 전방위적인 정치 전략을 구사했어야 한다 하지만 주류 좌파는 좀처럼 제도 정치 바깥으로 행동반경을 넓히지 못했다. 좌파에게 유리한 의회 밖 지형, 가령 노동 현장이나 지역사회의 대중운동들과 접속하려는 기획이 거의 없었다."[45]

필자는 이 글에서 제시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진보정당이 자기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선거의 경우도 정당과 후보가 선거 때 지지를 호소하는데 이를 넘어야 한다. 당선된 뒤에도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민주 진보운동의 투쟁과 조직적

---

42)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경우 개인이 사회변화에 입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선근은 서울지하철의 공공부문 노동자로, 노동조합의 간부로, 인천평화의료생협 이사, 지하철 안전 전문가로, 또 이 분야의 한일연대를 진행하며 자신의 역할을 변화시키며 산다

43) 김윤철, 「진보정당 부활의 경로」 『한겨레』, 2014.06.13.

44) 남재희, 「통합진보당 사태를 숙고한다」 『한겨레』, 2014.06.06.

45) 이스트번 메자로스, 「자본에 맞서는 정치를 발명하라」, 『장석준의 적록서재』, 뿌리와 이파리, 2013, 402쪽

활동의 결과를 선거 때의 투표로 수확해야 한다.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기대는 정당활동의 결과에서 오는 것이지 기대치에서 오지 않는다.

민주-진보정치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고 다가오는 새봄을 준비하는 것처럼 다시 기획해야 한다.

② 협동조합과 사회적 조합주의

가. 협동조합

현재 주식회사 등 사기업은 부가가치 가운데 임금을 준 나머지는 자본의 이윤이 된다. 임금은 적고 이윤은 많이 남기기 때문에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진다. 더욱이 현재 금융자본주의가 발달한 상태에서 일하기보다 금융이 돈을 벌거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의 하나가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 자주관리, 공동체자기고용[46], 아우토노미아(autonomia, 자율)[47], 사회적 경제[48]로 표현되는 영역이다. 협동조합은 생산-소비를 연결하고 일자리를 마련하며 지속가능성을 존중하며 잉여를 분배하거나 내부 축적한다. 협동조합은 노동자 생산자 소비자가 사회를 직접 운영하는 부문이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를 착하게 하고 사회주의에 활력을 주는 유력한 노동조직 형태이다. 협동조합은 자본의 초과착취, 금융의 수탈, 공기업의 민영화, 적어도 한국에서는 속임수에 불과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응책이다.[49]

한국에서는 1987년 이후 협동조합이 자리를 잡았다. IMF사태 이후 실업대책으로 나

---

46) 김영곤, 『한국의 공동체 자기고용』, 선인, 2009, 46쪽

47) 안토니오 네그리 외, 『다중』, 세종서적, 2008

48) 정태인, 「사회적 경제와 경제민주주의」,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 돌베개, 2013

49) 이것을 노동조직의 천이(遷移 Succession)에 비추어 설명한다. 흔히 노동조직은 노동조합을 말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 노동조직은 생활에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를 생산 유통 분배 소비하는 노동과정을 의미한다. 노동조직은 자영업, 사기업(주식회사), 협동조합, 정부 공기업, 세계기구 등으로 구성한다. 노동조직은 그림2처럼 천이과정을 거친다. 공기업의 민영화와 그 반대 현상인 사기업의 국영화 과정이 반복되기도 한다. 영국의 철도는 민영화했으나 민영화 뒤 인력 감축 등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하며 철도사고가 빈발하자 다시 국영화하기도 했다. 여기서 협동조합 공기업 정부 국제기구는 사회성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표방한다. 현재 한국의 노동조직은 Ⅱ를 지나 Ⅲ 또는 Ⅳ의 내실화를 포괄하는 단계를 지나고 있다.

<그림2, 노동조직의 천이>

사적	Ⅰ자영업	Ⅱ사기업	Ⅴ정부	Ⅵ국제기구
사회성, 공공성, 지속가능성	Ⅲ협동조합 NGO	Ⅳ공기업		

그림에서 Ⅰ 존속 힘들다. Ⅰ→Ⅱ 확률 2,3%. Ⅱ→Ⅲ 협업화. Ⅱ Ⅲ→Ⅳ 국유화 사회화. Ⅳ→Ⅱ 민영화 사유화 사영화. Ⅴ Ⅵ 공공성을 표방하나 사실은 관료와 관련 기업에 이익을 안겨준다

온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자활사업→ 사회적 기업을 전개했지만 효과적인 실업대책은 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해 협동조합이 확산 심화될 단계에 이르렀다.

넓은 의미의 협동조합 가운데 언론 부문은 기존 언론에 견줄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안정적인 위치를 형성했다. 생산자나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노동자협동조합은 초보단계이다. 인천에는 경동산업노동자가 부도난 회사를 인수해 키친아트라는 자주관리기업을 잘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분에 대안학교가 있으나 이들은 학벌사회에 안주하는 상태이다. 소상인들이 구성한 유통협동조합과 통신협동조합은 재벌에 대응해 독자적인 상권을 형성했다.

지역협동조합은 이탈리아 볼로냐, 캐나다 퀘벡, 일본에서 발달했다. 경남지역에서 노동조합 농민 주민이 협력하는 사회적 조합주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다. 인천지역 사회운동이 배울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이 발전하려면 복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대기업 노동자는 임금과 사내 복지를 받지만 비정규직은 그렇지 않다. 복지를 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 재원을 마련하는데 일반 노동자도 증세해야 하지만 대기업의 세율을 높이고 부자에게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50]

나. 사회적 조합주의

노동조합은 노동 가치를 존중하고, 임금을 인상하고, 미조직,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분을 향상시키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며, 지역과 전국 조직 차원에서 사회적 조합주의의 수용이 과제다. 노동조합 농민회 등이 87년 이후 형성된 조직원의 경제적 이익만 챙기고 서로 분절화한 조합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노동조합은 기업 내에서 임금인상을 비롯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려 한다. 그리고 산업별조합 단위로 넘어서려 하는데 이것의 진행 정도가 크지 않다. 나아가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부문과 조합하여 사회적 조합주의로 이행해야 한다.

사회적 조합주의는 노동조합이 협동조합이나 다른 부분, 지역공동체와 연대를 의미한

50) 김영곤, 「인천지역 협동조합 생존의 흐름과 현안」 『인천학연구』(2014, 제20권)

다. 노동조합은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자의 대중조직이라는 성격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조합주의 수용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단순한 협동조합의 확장이 아니다. 사회적 필요를 협동조합이 충족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51]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노동조합으로 전환할 때 노동조합은 다층적 사회적 조합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정규직인 조직된 노동자가 사회적 조합주의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협동조합은 오히려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는 89%의 노동자에게 더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아직 중앙차원에서 사회적 조합주의를 논의하지 않는다. 경남 부산지역이나 몇 개의 산별노조에서 협동조합에 참여할 뿐이다. 진보정당은 쿠바의 사회주의를 견학하지만 한국에서는 사회적 조합주의로 전환하지 못한다.

③ 지속가능한 교육

개발독재 시기에 노동자가 자본가가 될 수 있다는 '김우중 신화'는 당시에도 현실이 아니었고, 빈부격차가 고착된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교육부문에서 학벌에 기대는 풍조가 여전히 강하다.

학벌 체제에서 학부모들은 내 자식만큼은 루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52]고 했다. 그러나 우위의 소수의학생은 사회에 나가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는데 앞장서서 살아간다. 그러나 곧 45정이 되며 이런 삶을 회의한다. 열위의 다수 학생은 사회에 나가 저임, 비정규직, 실업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들은 생활의 어려움 속에 자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학벌을 탈피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하다. 이런 폐해를 없애고자 초중등학교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혁신학교를 운영한다. 6·4지방선거에서 민주-진보적 교육감을 다수 당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자녀를 이른바 일류대학에 보내 학벌에 편승시켜 신분을 상승시키고 소속 계급 계층을 이동하는데 모든 것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허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모순의 정점에 위치한 대학교육의 개혁에서 풀어야 한다.

대학 교사의 71%가 강사를 비롯한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교수는 고등교육법에서

51) 장대업,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 비판」『대안세계화운동의 이념』, 한울, 2010
52) 조희연, 대한문앞 세월호 추모 미사에서, 2014.06.16.

교원이 아니다. 1977년 박정희 정권이 종신집권에 필요한 우민화정책을 펴면서 고등교육법을 개악해 강사의 교원지위를 박탈했기 때문이다. 강사가 비판적인 강의 연구 학생지도를 했을 경우 바로 해고되기 때문에 자기검열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자기검열의 병목을 통과한 전임교수는 체제 순응하는 특권층을 형성한다. 전임교수는 사회문제는 더러 비판하지만 대학 내부는 고발하지 못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사회에 퍼지면서 사회에는 우민화가 만연해 있다. 학문의 내용도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교수 채용도 미국유학생 일변도이다.

학생들이 개인이나 가족을 넘어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행복한 가운데 자신도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방향 방법 일자리를 강의실에서 터득해야 한다. 비판의 권리가 있는 강사/교수가 법정학생수(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인문사회계열 25명, 자연예체능계열 20명, 치의한의학계열 8명) 이하의 강의실에서 절대평가를 하며 교수 학생이 쌍방향으로 토론 수업이 가능할 때 학생들은 대학과정에서 이런 삶을 배우고 학벌 출세 위주의 교육을 벗어날 수 있다.

대학이 이렇게 퇴로를 열어준다면 초중등학교 역시 입시 위주의 운영을 벗어날 수 있다. 학생들은 대입경쟁의 학습노예를 벗어나 공동체 지속가능성 등을 배울 수 있다.[53)]

지역사회 역시 지역사정을 반영하는 학문, 교수, 학생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선순환할 수 있다. 인천대학이 사립대학에서 국립법인으로 바뀌면서 인천지역에 기여하는 변화를 볼 수 있다. 현재 길병원은 길대학교의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 교육병원인데 대학의 교비를 아무 관련이 없는 협력병원 임상강사의 임금으로 지급한다. 법에서 규정한대로 길병원은 길대학교의 부속병원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것은 길병원이 영리병원이 합법화한 뒤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는 퇴로를 막는 것이다.

④ 공공부문 공공경제의 안정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책임성

사회에는 공공부문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은 협동조합보다 상위의 공동체이어야 한다. 그러나 공기업은 표방하는 바와 실체가 다르다. 공기업은 공공서비스를 빙자해 관료사기업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통로이다. 보수언론은 공공부문의 부패를 이유로 민영화

53) 송환웅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회장, 2014.06.05.

사영화 사유화 논리를 편다. 공기업에서 노동자의 책임성이 중요하다. 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되어 이 부문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철도노동자는 철도를 민영화하려는 시도를 파업으로 막았다. 공공경제의 버팀목이다. 영국은 철도 민영화 뒤 사고가 잦아지자 일부를 재국유화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 해외 한국인 교수들은 성명에서 "세월호 참사가 단순히 비도덕적인 선장과 선원들의 개인적 일탈 행위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규제 완화와 민영화, 정부의 무능력과 부패에서 비롯된 미비한 구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진행되는 무분별한 공적 규제 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철폐하고 안전 등 공익에 관한 규제 강화" 등을 요구했다.(『경향신문』, 2014.05.14.)

정권과 자본은 경영상태가 양호한 인천공항을 민영화하여 개인소유로 하려 한다.

⑤ 지속가능성 안전 평화의 문제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 한국은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는 사회다. 원전은 에너지 사용을 늘린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인다. 원전을 아예 폐기해야 한다.

1950년 3월 평화옹호 세계대회 위원회 대표자 죠리오 퀴리가 원자병기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스톡홀름 어필(Stockholm Appeal)을 제창했다. 6·25전쟁의 긴박한 상황에서도 전 세계에서 5억명, 일본에서 650만명이 서명했다. 세계 평화세력의 결집은 미국정부에게 더 이상 전쟁을 확대시키지 못하도록 했고, 트루만 미국 대통령은 맥아더 사령관을 해임시켜 전쟁 확대 계획을 포기했다.[54)]

중대 산업재해나 안전사고를 일으킨 기업에게 책임을 무겁게 부과하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

⑥ 자주 평화 통일

한반도의 특징인 분단이 장기화될 수도 있고 통일될 수도 있다. 남북 간의 평화적 교류를 늘려야 한다. 분단을 겪지 못한 세대에서 통일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인식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미국 군대가 없어지고 미국 및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한반도 통일을 내다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54) 김영곤, 『한국노동사와 미래』 1권, 선인, 2005, 518쪽

현실적으로 남북교류를 늘려 적대관계를 완화하고 평화를 심화해야 한다. 흔하디흔한 FTA를 남북 간에 맺어야 한다.

자주성을 높인다. 장기적으로 외국군을 철수시키고 통일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져야 한다. 북한과 인접한 인천지역 사회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⑦ 세계연대

조합주의 양상은 세계연대에서도 나타난다. 진보정당에는 세계연대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없다.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공동체의 의식은 지역사회, 한국사회, 세계차원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세계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시아에서는 초국적 기업의 노동, 이주노동, 중국의 농민공, 일본 한국 중국의 원전, 전쟁과 평화의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은 다른 나라의 피해를 바탕으로 살 산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필자가 2003년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기념품을 파는데 한국 사람을 비롯한 선진국 사람들에게는 비싸게 팔았다. 그만큼 부담을 더 하라는 의미였다. 한국인이 노동문제, 생태환경, 공정무역 등에서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자본계열 회사에서 일어나는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투자만 끌어들여올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역에 대한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미국 등에서 시행하는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을 전국 차원에서 입법하거나 지역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한다.

동시에 다른 나라에 진출한 한국계열 기업의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진조선은 국내 조선소보다 필리핀 수빅만에 있는 조선소의 생산량이 더 많다. 필리핀 조선소의 노동조건이 아주 열악하고 이것은 국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해고하게 하는 원인이다. 필리핀 조선소의 노동조건 개선 없이 국내 문제를 푸는데 한계가 있다. 캄보디아 봉제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해 파업했다. 한국기업인 NEPA 캄보디아 공장은 캄보디아군대를 공장안으로 끌어들여 유혈진압을 초래했다.

아울러 무려 2억5천만명이나 되는 중국의 농민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문제 해결 없이는 한국의 일자리, 저임, 비정규직 노동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정도로 비중이 크다.

아시아의 민주주의 평화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얀마의 군부가 석유 천연가스 자원을 판매한 돈으로 독재정치를 한다. 이 자원은 주로 중국 한국 인도 기업이 사온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얀마가 ASEAN에 들어오려면 독재정치를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동남아지역에 투자가 많은 일본은 인도네시아 등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들여 뒤로 물러섰다.

오큐파이(occupy) 운동은 초국적 금융시장을 거부하고 동네은행이나 협동조합은행 등에 내 계좌를 이동하는 것을 비롯한 대안을 실현한다. 토마 피케티는『21세기 자본론』에서 부의 세습이 빈부격차의 큰 원인이고, 세계를 소득 양극화 늪으로 몰아넣고 있는 주된 요인은 일해서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세습자본주의를 비판했다. 그는 최고 80%의 부자 과세인 글로벌 누진적 부유세 부과를 제안했다.(『매일경제』, 2014.5.26.)

세계정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다. 지금까지 세계정부 역할을 해 온 UN은 미국 등 강대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유네스코는 1국1표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의사결정에서 패권을 발휘하지 못한 미국이 부담금 납입 거부 등으로 비토하는 일이 있었다. 세계정부의 구성에서 시사하는 점이다.

Ⅲ 결론: 인천에서 세기에 걸친 노력이 필요

첫째, 인천의 5·3항쟁은 비록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다양하고 깊다. 인천이 한국의 페테스부르그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 5·3항쟁에서 나타난 요구 주의 주장은 지난 30년에도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화두였다. 이것은 앞으로 30년 즉 5·3항쟁이 일어난 지 60년이 되는 미래사회에서도 한국 사회를 민주적 복지사회로 이끌고 지구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이끄는데 사상의 수원지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전의 역사에서 선도적 역할을 했던 인천을 생각한다.

조선시대 사상계를 지배한 주자 성리학이 선지후행(先知後行)을 주장한 것과 달리 인천을 대표하는 사상가인 강화학파 이건창은 '지행합일(知行合一)' '자득(自得)'을 강조하

고 양명학의 학문 방법을 실행하며 현실 문제 접근 방법의 사상적 실마리를 제공하였다.[55]

인천 출신인 조봉암은 민족해방운동, 협동조합, 진보정당의 역사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그는 1945.12.26. 인천에서 인천지역 공장과 농민조합의 전 대표들이 참석해 개최된 협동조합 인천지부 제1회 대중 집회에서 조봉암은 만장일치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대표들은 모든 공산품과 농산물의 분배문제를 다룰 협동조합 안을 토의했다. 이 집회는 서울에 있는 조합본부에 파견할 55명의 인천지부 이사도 결정했다.[56] 조봉암은 1948년 5·10선거에서 제헌국회의원이 되었고, 이승만 정권의 초대 농림부장관이 되었다. 조봉암은 농촌 내의 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 조직을 추진했다. 이것이 1957년 농업협동조합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인천 대성목재노동조합이 1959년 소비조합 매장을 열었다. 노동조합 소비조합으로는 한국 최초이다.[57] 조봉암은 진보당을 창당하고 1952년 2대 대통령 후보로 나서 1위 이승만 74.6%에 이어 11.4%를 득표 2위를 해 이승만을 위협했다. 이승만 정권은 조봉암에게 간첩혐의를 씌워 사형 선고했다.[58]

이런 일화가 있다. 조봉암은 명절이면 쌀가마를 트럭에 싣고 동지들의 집집마나 한 가마씩 내려주었다. 조봉암이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 동지들이 떠나려하자 그들의 아내가 남편을 설득해 조봉암과 활동을 계속하라고 했다 한다.

실사구시의 자세로 대안을 찾고 실천하던 이들의 자세는 지금 민주-진보운동에게도 필요하다.

둘째, 인천은 항구와 공항이 있는 수도권의 관문이고, 북한과 인접해 있으며, 중국과 마주보는 지역이다. 이런 조건과 어울려 인천지역은 개발독재 시기에 노동운동을 비롯해 민주화운동이 활발했다. 앞으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역할을 기대한다. 이전의 역사 경험에 비추어 몇 가지를 제시한다.

인천지역은 노동조합이 발달했는데 이들이 산별노조를 넘어 사회적 조합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의료생협, 소비자생협, 통신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

55) 양윤모, 「강화학에서 인천학으로」, 『인천역사문화총서 10 인천역사』, 2004, 152쪽
56) 정태영 외, 『죽산 조봉암전집 2』, 세명서관, 1999, 79쪽
57) 김형미, 「한국 소비자 생협 운동의 흐름과 성격, 소비자운동에서의 역할」, 『한·일 협동조합 국제심포지엄』, 2013.07.04.
58) 박태균, 『조봉암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5

다. 이들이 지역사회의 생산-소비에서 책임적인 위치로 나아가야 한다. 협동조합과 공공부문 등이 어우러져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경제 부문을 발전시켜 시민이 안정적으로 일자리을 찾고 소득을 올리고 생산적인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천공항은 인천지역의 상징이며 수익성이 좋다. 민영화 움직임을 막고 공공성이 강한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인천은 북한과 인접해 있다. 북한과 경제 사회 생태환경 인적 등의 측면에서 교류를 늘려야 한다.

인천은 중국과 가깝다. 인천의 사회운동이 일본과는 인적 교류가 활발하다. 중국과도 인적 교류해 상호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토론해야 한다. 그러면서 중국의 핵발전소 안전 등의 문제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셋째, 유럽의 역사를 보면 노동조합의 역할이 줄어들고 사회주의와 협동조합이 대두한 시기가 1800년대 초중반이다. 이후 2세기에 걸친 노력 끝에 지금의 유럽 민주적인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이룩했다. 지금의 화두는 커뮤니티이다.

한국사회는 지금 노동조합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넘어 넓은 의미의 공동체를 살리는 대안이 무엇이냐 고민하는 중이다. 한국사회가 북유럽 같은 사회로 갈 것이냐, 일본이나 미국처럼 격차가 극심한 사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 같이 영락한 사회로 갈 것이냐는 갈림 길에 있다. 이런 고민은 '안녕들하십니까'의 대학생, 세월호 사건의 고등학생들의 저항을 겪으면서 표면화했다. 유럽과 비교한다면 적어도 2세기 이상의 시차가 있다.

자본주의가 임금노동자를 초과 착취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파괴해 인류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이후의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한다. 자본주의 역사가 길게는 10세기 짧게는 5세기로 본다면 이후의 현재와 같은 의미의 자본주의는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이를 개선하는데 세기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끝>

토론문2

인천 5·3항쟁과 노동자
김지선 (전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인천 5.3항쟁과 노동자

1. 1986년 5월 3일의 기억

신민당 개헌 현판식 행사가 시작되기 전인 1986년 5월 3일 12시 정각에 시민회관 앞으로 모일 것을 같이 활동하던 동지들과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며칠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민회관 주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고, 12시가 되자 순식간에 약 1천 여 명의 노동자들이 선전 선동 역할을 하는 소위 '야사'(야전사령관:시위지휘자)들을 중심으로 대오를 형성하였습니다.

당시 역할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화염병(당시는 '꽃병'이라고 했음) 운반책이 있었고, 연단을 만들 수 없어 리어카를 연단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김일섭이 맡았고 나는 전날 친구 엄마 집에 맡겨놓은 유인물을 현장으로 옮기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친구 엄마는 우리들이 뭘 하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옳은 일을 한다고 믿어주셨습니다. 5.3항쟁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경찰이 찾아왔을 때도 친구 엄마는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면서 경찰과 대항해 싸우셨고, 그 친구 오빠도 경찰에 연행돼 고초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방송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인노련 삼민투쟁위원장이었던 전희식과 서기화였습니다.

전희식과 서기화는 리어카로 만든 연단위로 올라가서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수백여 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하는 등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저질러 온 범죄행위를 폭로하였고, 특히 신민당과 민정당이 이원집정제로 타협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며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 건설과 삼민(민족 민주 민중)헌법의 쟁취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외쳤던 구호는 '민주정부 수립' '삼민헌법 쟁취' '노동해방' '생활임금 쟁취' 등이었는데. 활동가들과 일부 학생들 중에는 '제헌의회 소집' '미 제국주의를 몰아내자' '반전 반핵 양키 고 홈' 등 의 구호도 있었습니다.

12시 30분 경, 시민회관 앞 광장에서 민통련이 주관하는 집회가 별도로 열렸는데 이

집회에서는 수배 중인 장기표 민통련 집행위원장이 연설을 하였고, 5~6천여 명의 학생들은 자민투와 민민투로 나누어 주안역 방향과 석바위 쪽 방향에서 스크럼을 짜고 거대한 물결이 되어 시민회관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정도에는 시민회관 앞 사거리를 비롯한 인근 도로가 시민들로 꽉 메어졌습니다. 노동자, 학생, 시민 약 5만여명은 '민주헌법 쟁취',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며 그 함성이 하늘을 찔렀고 시위 참여자가 계속 늘자 경찰은 1시 반 경부터 최루탄을 발사하기 시작하였고 밀고 미리는 공방전이 계속되었습니다. 서울로 출 퇴근하는 시민들이 모이는 6시 경 시위는 절정에 달했고 전투경찰도 약 1만 여명의 병력이 진압에 동원되어 당시 시민회관 주변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5.3항쟁으로 현장에서 연행된 인원이 약 400여 명으로 130여 명이 소요죄와 집시법으로 구속되어 50여 명이 수배되었습니다. 이리하여 광주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구속자 수배자가 양산 되었습니다.

2. 노동자가 5.3항쟁에 참여하기까지

가. 70년대 인천지역 민주노조운동의 경험

개인적으로는 저는 백령도 인근 조그만 섬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자랐습니다. 송현동 산동네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고 아버지는 부두노동자였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 공장에 들어간 곳이 대성목재였는데 당시 나이가 어려 바로 위 언니 주민증으로 본의 아닌 위장취업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야근하다가 산업재해로 끔찍한 피해를 입은 동료언니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공장이 무서워 그만두었었습니다. 이후 서울청계천에서 시다 생활하면서 미싱자수를 배웠고 2년 고생하다가 '요꼬'라는 스웨터 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천으로 돌아와 1972년 취직한 곳이 부평 4공단에 있는 삼원섬유에 취업했고 거기서 유동우 선배를 만났습니다. 유동우 선배 따라 도시산업선교회 회원으로 활동한 것이 노동운동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삼원섬유 당시에는 임금투쟁이 아니었고 공임투쟁이었는데 만드는 물건이 바뀔 때 마다, 어떤 물건은 작업이 쉽고 어떤 물건은 작업이 까다로워 물건마다 공임을 얼마로 하느냐를 가지고 협상을 할 때였습니다. 삼원섬유 안에 소모임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열매클럽'이라는 모임에서 약 15여 명이 모여 노동조합이나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공부를 하거나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조화순 목사님의 교육도 받으며 다른 지역의 노동운동의 사례를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즈음 전태일 동지의 이야기도 처음 들었고 그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은 없어진 청천동의 광야교회(이후 백마교회)도 삼원섬유 등 지역의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자취방에서 예배도 보고 노동조합 관련 소모임도 하면서 노동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다가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73년 12월쯤 삼원섬유에서 전국에서 국가공단 안에 최초의 노동조합이 만들어 졌습니다. 청천동의 산곡교회에서 70~80여 명 정도가 회사와 경찰들의 감시망을 피해 비밀리에 모였고 꿈에 그리던 노동조합을 창립하였습니다.

그때는 노동자의 노동3권이 제약된 시절이었고 어용노조가 판치는 세상에

우리의 힘으로 민주노조를 창립하게된 것은 정말 가슴 뛰는 경험이었습니다. 이후 회사 노동자들 거의 전원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고(당시 유니온 샵) 분회장에 유동우 선배가, 나이 제일어린 저는 여성부장을 맡았습니다. 분회장의 열정과 조합원들의 활동으로 근로조건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큰 변화는 10 ~ 12시간 노동시간이 8시간으로 바뀌었으니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니 공무원이 된 기분으로 날아갈듯이 기뻤습니다. 시간에 여유가 생긴 조합원들은 못 다한 공부를 시작하거나 자신의 취미생활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저 역시 YMCA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 회사와 섬유노조 본조에서 탄압이 시작되었고 유동우 선배는 분회장에서 제명되었고 회사에서도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제2의 집행부를 꾸려 민주노조를 지켜내려 수많은 투쟁을 하였지만 회사는 결국 폐업을 감행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삼원섬유의 노동조합 설립으로 이후 공도산업, 삼연물산 등 같은 업종에서는 물론 반도상사에서도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우리노조도 지원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공순이'라고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노동자의 위치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해 활동하면서 노동자로서의 자부심을 크게 갖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노동자 하나하나가 사회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서 인간과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데 노선이나 이념 이런 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삼원섬유가 폐업한 이후 다른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요꼬'라는 기술은 취직하기가 쉬웠죠. 당시 유동우 선배가 '요꼬쟁이는 모가지가 아흔 아홉 개'라고 할 정도로 잘리면 또 취직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속칭 '블랙리스트')을 돌려 취직을 막기도 했었죠. 저만해도 수없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노동운동을 한 것은 동일방직 노동조합 '똥물투척 사건' 때문인데 이를 세상에 알리려고 동일방직, 삼원섬유, 남양나이론, 방림방적, 원풍모방 노동자들과 함께, 여의도 광장에서 50만 여명이 모여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린다

는 소식을 듣고 여의도 현장을 갔었죠. 우리 6명은 목사들이 설교하는 도중 연단으로 뛰어올라가 CBS마이크롤 잡고 '노동3권 보장하라' '동일방직 문제 해결하라"라고 외쳤고 이것이 생방송으로 전국에 나갔습니다. 바로 연행되어 예배방해와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영등포 구치소에서 공부하면서 정치의식이 생겼고 이제부터 제대로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나. 5.3전야 - 인천지역민주노동운동과 인노련

저는 1981년 구로공단에 있는 흥한섬유에 들어갔는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글모임도 하면서 노동조합결성을 준비하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인천지역 선배, 활동가들과 노동운동을 위한 모임(조직모색)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구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박태연(전YH 사무국장)이 전민노련 사건으로 수배중이었는데 피신하도록 도와주고 지원 한 것이 공안당국에 알려져 공장에서 일하다가 연행되었는데 잡혀간 곳이 남영동 대공분실 이었습니다. 박태연의 행방 대라고 두들겨 맞고 물고문 협박도 받았고 발가벗기겠다는 위협도 받았었죠. 밤이 되면 '아악'하는 비명 소리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신철영 선배와 유동우 선배 등은 이미 그곳에 잡혀 와있었고 밤마다 고문으로 인한 비명소리는 선배들의 목소리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1984년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가 만들어졌고 인천에도 85년에 인천노협이 만들어지면서 양승조 선배가 위원장을 하고 제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당시 대학에서는 유화국면이라고 하여 이전에 학생운동으로 구속되었던 학생들이 풀려나 복학되고 그랬지만 노동운동에서는 달랐습니다.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은 고사하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다 깨지곤 하였습니다. 인천에서도 85년 대우자동차 파업이 대규모로 일어났을 때나, 구로동맹 파업이 일어났을 때도 그랬고, 공안당국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박탈당한 채 거리로 내 몰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합법적인 노조활동만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었지요.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서울에서는 '서노련'이 창립되고 인천에서도 정치적 대중조직인 '인노련'이 창립되었지요. 당시는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싶어도 경찰의 감시를 받아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비합법 활동이 되어버린 것 입니다. 경찰의 조직 감시가 엄중하다보니 동지들끼리 약속시간이 5분 경과되면 '튀어야' 했었습니다. 회의할 곳이 없어 이집 저집을 전전하고 심지어 야산에서 회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조합조차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앞장서서 이런 상황을 알려나가는 소위 '선도투쟁'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운동을 했었지요. 그러다보니 공단이나 부평역 등지에서 가두투쟁을 하기도 하고 한미은행을 점거하기도 하고 그랬었지요.(아이러니 하게 '한미은행'은 미국자본으로 설립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 자 들어갔다고 점거투쟁을 했었죠) 이러한 경향의 투쟁이 다른 한편에서는 '비합법 노조' 또는 '혁명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5.3항쟁이 발생하기 전 인천에는 많은 활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인천은 노동운동의 메카 또는 한국의 상트페테르스부르크라고 불릴 정도로 노동운동이 강력하게 전개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는 '학출'이라는 용어는 학생운동 출신들을 반면 노동자 출신을 '노출'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정치적 입장에 따른 여러 정파들이 다양하게 있었고 이들의 활동 또한 다양하였습니다. 소위 '학출 활동가'들은 일에 대하여 아주 열정적이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나 이들이 지닌 철학과 태도는 대중적이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현장투쟁을 강조하면서도 대중적인 관점에 서있지 못하고 성과주의에 매몰되는 등의 문제도 일부 보였었습니다. 각기 자기 정파에서 '사상 통일사업'의 일환으로 또 '현 정세'를 파악한다고 하여 소위 '지하'에서 팜플랫도 많이 만들어졌고 무슨 '연합' '연맹' '투쟁위원회' 등으로 나누어져 활동을 했었습니다. 인노련 역시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소위 '전위조직'의 프락션 활동이 드러났는데 당시 실제 활동을 돌아보면 인노련 공식 지도부의 회의에서 결정을 해도 지도부 구성원중의 일부(프락션)가 과정을 끈질기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비공개 지도조직의 결정으로 상황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노련 내부는 전혀 몰랐던 상황이고 자신들 스스로 전위조직을 자처한 것입니다. 인노련 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정파의 조직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3. 반성과 평가 그리고 성찰

인천 5.3항쟁은 신민당을 비롯한 정당에서 헌법 개정 논의로 촉발되었고 민중운동 세력이 이에 대해 독자적인 대응을 모색해 왔던 상황에서 일어난 투쟁이었습니다. 당시 인노련에서는 삼민헌법(반민족, 반민중, 반민주세력에 대항한 민족 민주 민중 헌법)을 주장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5.3투쟁을 준비하면서 벌린 논쟁 당시에도 이러한 주장은 노동자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가

처참하게 짓밟히고, 농민, 도시빈민 등의 민중들의 삶이 파괴되어가는 그 당시 현실에서 노동자와 민중이 진정 주인이 되는 '노동해방'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때 깨어있는 노동자의 눈으로 바라본 야당(신민당), 재야

조차도 우리의 대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제정요구에 민중이 사회의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삼민헌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인천 5.3항쟁은 1986년 5월 3일 하루 동안에 있었던 투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로 이어지는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극심한 탄압 속에서 쓰러지면서도 확대되어 역량을 키워온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임금인상 같은 경제투쟁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성장한 노동자들이 정치적 각성과 더불어 정치투쟁에 전면으로 등장한 것이라고 봅니다.

5.3항쟁 이후 관제 언론(신문 방송 등)에서는 폭력적인 장면만을 모아 불순세력의 난동으로 몰아갔고 이를 빌미로 저희 인노련도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활동가들의 구속, 수배되었고 심지어 가족, 지인들까지 연행되거나 감시를 받고, 저 또한 야밤에 산에 끌려가 두건에 씌워져 수갑 채운채로 무자비한 폭행과 고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 조직 활동도 침체되었고 5.3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대중의 눈높이에서, 대중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한 투쟁이었다는 측면의 비판을 받아야 할 것도 있지만 당시 군사독재 정권의 억압적인 정치적 상황과 노동운동의 흐름에서 독자적인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했다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용면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부실했는지 모르지만 그 의의까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당시 인노련은 인천지역 노동운동에서 상징적이고 조직적인 역할을 했고 현장에서 다수의 활동가들이 곳곳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었고 이 분들은 어려운 조건에서 조직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인노련과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노련의 일부 투쟁노선과 안개지도부 문제 등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운동 발전에 기여한 측면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운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 없듯이, 이러한 기반 활동들이 있었기에 인천지역에서 87년 6월 항쟁과 87년 노동자 대투쟁에서 노동자들의 정치 경제적인 요구와 조직적인 진출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3

인천 5·3 항쟁에 대한 단상

이호룡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책임연구원)

인천5 · 3항쟁에 대한 단견

오늘 이 자리는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본 토론문에서는 편의상 5·3항쟁이라는 용어로 통일함)에 대해 28주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이를 뒤돌아보고 평가해보고자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인천지역에서 전개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5·3항쟁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토론문을 작성해달라는 주최 측의 요구에 따라서 평가와 관련해서 명칭과 의미에 대해서 몇 마디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5·3항쟁의 성격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5·3항쟁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명칭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5·3항쟁은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자이신 이준한 교수님은 '5·3민주항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가 펴낸『한국민주화운동사』는 '인천5·3항쟁', 조희연 교수님과 이우재님은 '5·3인천사태'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5·3민주화운동(5·3민주화운동기념사업추진위원회), 5·3인천민주화운동(김영곤), 5·3인천투쟁(조현연), 5·3인천항쟁(5·3인천항쟁 20주년 기념식), 5·3항쟁(이우재), 5·3운동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5·3항쟁의 명칭들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5·3항쟁을 민주화운동이나 사회변혁운동의 맥락 속에서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5·3항쟁을 '사태'로 규정할 경우 5·3항쟁은 민주화운동이나 사회변혁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기보다는 돌발적인 사건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3항쟁을 민주화운동으로 평가하는가 아니면 민주화운동을 넘어선 사회변혁운동으로 평가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민주화운동의 측면에서 평가할 경우 대체적으로 민주항쟁, 민주화운동 등 '민주'라는 단어를 명칭에 포함하고 있고, 민주화운동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볼 경우 항쟁, 투쟁 등의 용어로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3항쟁이 민주화운동이냐 그것을 넘어선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주화운동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먼저 구현한 서구에서는 민주화운동이란 용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화운동을 영어로 직역하면 'democratization movement'이지만, 대체적으로 서구에서는 'democracy movement'로 번역합니다. 'democracy movement'란 정치 부문을 포함한 사회 각 부문에서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가는 운동을 말합니다.

민주화운동의 개념규정은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화운동은 넓은

의미에서는 'democracy movement'와 같이 사회 각 부문에서 민주주의를 진작시켜나가는 운동으로 규정되고, 좁은 의미에서는 정치 부문에서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가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오늘 발제자이신 이준한 교수님은 민주화를 "비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교체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여기에서 비민주주의 사회란 대표적으로 권위주의 사회를 지칭하지만 일당체계, 군주제의 무정당 정치체계, 일인독재체제, 또는 군부독재체제 등도 모두 가리키며, 민주주의 사회란 사회구성원들이 정치영역에서 배제되지 않아 참여가 보장되고 정치적 권력이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분배되는 체제를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민주화운동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운동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민주화라는 용어는 사회 각 부문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어 가는 과정의 의미로 일제강점기부터 이미 사용되었지만, 민주화운동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동아일보』 1950년 6월 15일자가 1950년 일본의 공산주의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차이를 언급하면서부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는 동유럽을 비롯한 공산주의에서 일어난 자유주의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국내의 민주화운동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4월민주항쟁 이후부터로 보입니다. 즉 학원민주화운동, 교육계의 민주화운동, 영화계의 민주화운동 등의 용어가 4월민주항쟁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60~1970년대에도 학원민주화운동, 증권민주화운동, 경영민주화운동, 산업민주화운동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민주화운동이란 용어는 1950년 무렵부터 사용되었지만 사용빈도는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사용빈도는 1968년 동유럽의 자유화운동을 소개하면서 잠깐 많았던 것을 제외하면 1974년 말 개헌운동이 전개되면서부터 많아지기 시작하여 보편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사용된 민주화운동이란 용어의 의미는 민주주의를 신장시켜가는 운동이었지만, 대체적으로 정치 부문에서의 민주화를 지칭하였습니다. 다른 부문에서의 민주화를 언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부문을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아무런 수식어가 없을 경우는 협의의 정치적 민주화를 의미하였습니다. 민주화운동을 정치적 근대화로 규정한 김석규씨가 대표적입니다.(김석규,「난국 타개의 길」『경향신문』1967년 6월 28일자) 이를 종합해보면 1970년대까지는 민주화운동을 협의로 해석하여 정치 부문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운동을 지칭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자에 따라서는 민주화운동을 광의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김민하 교수님은 1970년 10월 14일 중앙대총학생회 주최로 개최된 강연회(주제 : 70년대 한국사회의 비죤)에서 1970년대를 "그동안 소홀했던 민주주의의 기초를 구축해야 하고, 이러한 민주

주의의 질서 위에 국민 대중으로부터 추앙받는 민주주의민족세력을 총집결 정리하여 조국통일에 대비해야 할 시대"로 규정하고, 정치적 측면에서의 민주화운동을 전개 확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경향신문』도 "우리가 조국을 민주주의적으로 통일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진정한 민주주의적 풍토를 건설하는 것인데, 남북대화를 앞에 두고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기타 생활 전반에 걸친 진정한 민주화라는 것이 오늘처럼 아쉬울 때가 없다"면서, "경향신문은 바로 이러한 민주화운동에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경향신문』 1971년 10월 8일자), 민주화운동을 광의로 해석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을 광의로 해석하는 것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 것은 제6공화국 출범 직후 국회에서 광주민중항쟁을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이후부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을 포함한 부문운동이 성장하면서 각 부문을 민주화 하고자 하는 운동이 전개되었고, 그에 따라 민주화운동을 광의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을 광의로 해석할 경우 사회변혁운동과의 차이가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을 민주주의운동과 동일시 할 경우 민주화운동의 특성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가 낙후된 지역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국가들을 비롯한 민주주의 훈련을 거치지 못한, 정치적 민주화가 지연된 국가에서 일어난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지칭합니다.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민주화운동사의 서술범위가 달라집니다. 민주화운동을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에 맞서 민주주의적 정치질서를 확립해가는 투쟁으로 해석한다면, 주로 학생들이나 야권 내지 재야 정치세력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이 주요한 서술대상이 될 것입니다. 부문운동을 다루더라도 각 부문에서 전개된 국가권력에 대한 투쟁만 다룰 뿐, 부문 자체 내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 즉 광의의 민주화운동은 서술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5·3항쟁에 대한 평가는 협의의 민주화운동으로서의 5·3항쟁에 대한 평가와 광의의 민주화운동 곧 민주주의운동 내지 사회변혁운동으로서의 5·3항쟁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5·3항쟁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명칭과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 5·3항쟁의 의미에 대한 평가는 민주화운동인지 사회변혁운동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한국사회운동사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항쟁으로 보는 시각과 급진분자들의 망동으로 보는 부정적 시각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조희연 교수님은 2003년 5월 2일 5·3민주화운동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최한 학술토론회(주제 : 5·3운동의 역사적 재조명)에서 발표한 「5·3인천사태와 급진적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논문에서 이

항쟁을 급진적 사태요 사건으로 보면서 '5·3인천사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우재님 역시 「5·3인천사태를 뒤돌아보며」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이 항쟁을 '사태'로 규정하면서 "5·3인천사태는 80년대의 여러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들 중에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컸던, 따라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건"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우재님은 '자중지란'과 '꼴불견', '추태', '관념적인 모험주의와 소아병주의' 등의 다소 격한 용어까지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현연 선생님과 김영곤 선생님은 5·3항쟁을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3항쟁이 신민당의 개헌현판식을 독재 권력과 타협의 길을 모색하는 신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반독재민주화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면 5·3항쟁은 협의의 민주화운동의 범주 내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5·3항쟁을 각 정파들이 자신의 입장을 선전하는 투쟁으로 이해한다면 5·3항쟁은 사회변혁운동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5·3항쟁을 민주화운동의 측면에서 보면 조희연 교수님이나 이우재님처럼 처참하게 실패한 투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변혁운동의 측면에서 본다면 대중과의 괴리를 초래했다는 비판은 받을지는 몰라도 그 정도는 민주화운동 측면에서의 평가보다는 덜할 것입니다.

토론문4

인천 5·3항쟁의 영향

이우재(온고재 대표)

5.3인천민주항쟁이 이후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5.3인천민주항쟁(5.3항쟁)이 일어난 지도 어언 30년이 다 되어간다. 그간 우리 사회는 1987년 6.29선언 이후 형식적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는 얼핏 제도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금번 박근혜의 경우처럼, 어용 방송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등 아직도 민주화의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하물며 5.3항쟁을 비롯하여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노동자 등 민중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즉 민중이 해방되는 사회는 아직도 꿈길처럼 요원하기만 하다. 1980년대, 1990년대는 비록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이었다고는 하나, 일자리는 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비정규직이라는 해괴한 제도의 등장으로 인하여 1년마다 실업의 악몽에 잠 못 이루고 뒤척여야 하며, 같은 일터에서 같은 작업에 종사하는데 임금의 격차가 배 이상 나는 비정상적인 일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는 물론 신자유주의라는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 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의 실패라는 점에서 볼 때 우리 민주화운동 진영의 잘못 또한 묵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하는 지난 30년간의 우리 민주화운동진영의 잘못을 반성해 보는 첫 단계로 우선 5.3항쟁이 이후 민주화운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럼으로써 5.3항쟁이 지금의 이 답답한 현실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냉정히 살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1, 5.3항쟁을 계기로 주체사상 그룹이 운동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민주화운동에서 자생적인 주체사상 그룹이 형성된 것은 1986년 3월 29일 서울대 자연대 22동 건물에서 서울대생 70여 명이 모여 비공개로 결성한 구국학생연맹이 최초다. 서울대생 김영환 등이 주도하여 결성한 이 단체는 한국 사회를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반봉건사회로 규정하고 당면 투쟁 목표를 미제식민주의와 파쇼통치체제 분쇄로 내걸었다. 그러면서 김영환 등은 구국학생연맹의 지도 이념으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받아 들였다. 이는 그동안 자생성을 유지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왔던, 그리고

북한과의 연계를 어떻게든 기피해 왔던 기존의 운동 관점에서 볼 때 거의 파천황의 행동이었다. 김영환은 강철서신이라는 팸플릿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전파했다.

이들은 그동안 반미 구호를 거의 금기시하고 있었던 기존 운동권(광주학살을 방조했다는 점에서만 미국의 책임을 물어 왔다)과는 달리 반미를 투쟁의 중심 슬로건으로 삼았다. 그해 4월에 결성한 자민투의 정식 명칭이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라는 면만 보아도 이들의 면면은 여실하다. 그리고 그해 4월 28일에는 이재호, 김세진 두 학생이 당시 대학생들에게 실시되던 전방입소교육을 미제의 용병 교육으로 규정하면서 미제의 용병교육 결사반대라는 구호를 내걸고 분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온 국민을 놀라게 하였다. 이들은 5.3항쟁 당시에도 반미 구호를 전면에 내걸고 한 분파를 이루어 참가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국민은 고사하고 운동권에게도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미 운동권은 사회주의적 이념으로 깊이 무장하기 시작하였으나, 반미를 전면에 내거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자주 독립 국가는 군사독재를 타도한 이후의 문제라는 견해가 다수였던 것이다. 하물며 강철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주체사상은 어림도 없는 소리였다.

그러나 5.3항쟁을 겪으면서 상황은 반전하기 시작했다. 5.3항쟁에서 드러난 운동권의 종파주의, 좌익소아병주의, 모험주의적 경향은 활동가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활동가들은 운동 이전에 사람이 되라는 강철서신에서 말하는 이른바 품성론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또 무엇보다 대동단결을 우선시하는 데 지지를 보냈다. 강철서신은 활동가라면 한 번은 읽어야 하는 필독서가 되기 시작했고, 5.3항쟁이 반면교사가 되어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활동가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 물론 주체사상이 영향력을 급속히 확장하는 데는 5.3항쟁의 여파로 서노련과 인노련, 민통련과 인사련 등 기존 단체의 활동가들이 대거 구속되거나 수배된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운동권의 종파주의, 분열주의, 소아병주의에 신물이 난 활동가들에게 강철서신이 준 신선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은 총을 들고 왜놈과 싸운 항일유격대 출신이었고, 남한의 지도자 박정희 등은 왜놈 군대 출신이었다는 것들도 또한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게다가 분단 조국의 아픔에서 나온 순박한 통일에 대한 갈망이 또한 일조를 가했다.

어찌되었던 86년 5.3항쟁을 거치면서 서울대 일부 그룹의 지도 이념이었던 주체사상은 대학가로 급속히 번져 나갔고, 노동 현장의 활동가들도 그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87년 6월 항쟁의 국면에서는 대학가에서는 이미 주체사상이 대세가 되었고, 노동현장이나 공개단체 운동에서도 뚜렷이 한 분파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그 여파는 지금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운동의 한 분파로 잔존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2, 진보운동과 양김씨 등 민주당 세력과의 차별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1970년대 후반 유신과 반대하여 싸울 때부터 민주화운동 진영은 양김 씨로 대표되는 민주당과 묘한 갈등관계에 있었다. 양 김씨는 민주화운동진영이 내세우는 민중과 민족을 좌파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고, 민주화운동진영은 양 김씨가 대권욕에 사로잡힌 형식적인 민주주의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심은 80년 민주화의 봄이 좌절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진영은 정치적 구심이 없었고, 양 김씨는 민주화운동진영의 헌신적 투쟁을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간의 의심은 표면화되지 못하고 잠재적인 상태로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5.3항쟁을 통하여 이러한 양 집단 간의 갈등이 전면적으로 드러났다. 4월 28일 김세진과 이재호의 분신에 놀란 양 김씨는 4월 29일 소위 민국련(민주화를 위한 국민연락기구) 회의를 열고 "소수 학생들의 반미, 용공, 과격 시위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어 4월 30일에는 신민당 총재 이민우가 청와대에서 전두환과 만나 "여야가 국회 내에서 헌법개정안을 비롯한 정치일정에 합의하여 건의하면 반대할 생각이 없다"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민주화운동 진영을 제외한 보수대타협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민주화운동 진영은 이에 크게 반발하였다. 5월 1일 민통련은 신민당이 "보수야당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며, 보수대연합의 기도 또는 보수대야합의 전조"라고 비난하면서 민국련으로부터 탈퇴함과 동시에 의장단 총사퇴를 결정하였다.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과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 등 노동운동세력들과 동료의 죽음으로 흥분 상태에 있던 학생들도 신민당이 정권과 타협하려 한다면서 5월 3일 인천에서 거행될 신민당 개헌현판식 대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5월 3일 인천대회는 이런 양 집단 간의 모순이 첨예하게 드러난 자리였다. 민주화운동세력들은 신민당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비난하면서 김영삼이 대회장으로 들어가려는 것조차 막았다. 40여 종 가까이 뿌려진 유인물의 대부분의 내용은 "반미, 반독재, 보수대연합 성토"였다. 인노련, 서노련은 신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데 주안을 두어 신민당의 직선제 개헌과 차별되는 삼민헌법을 쟁취할 것을 주장하였다.

온갖 구호가 난무한 이날 5.3현장의 가장 큰 특징은 신민당과 구별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였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는 반유신 투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민주화운동진영이 질과 양, 양면에 걸쳐 성숙, 발전한 결과였다. 민

중당,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의 뿌리는 바로 여기서 나왔다.

3, 5.3항쟁에 대한 반성의 결과, 대동단결이 우선시되어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비록 제한적이었지만 6.29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민주화운동진영의 비타협성, 독자성을 유감없이 드러냈지만, 5.3항쟁의 후유증은 컸다. 5월 3일 저녁부터 KBS를 비롯한 어용방송들은 5.3항쟁을 좌경용공세력에 의한 체제전복기도로 몰아가며 대대적인 여론 사냥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대대적인 검거 선풍이 불어 닥쳤다. 5,3항쟁의 결과 129명이 형법 115조 소요죄로 구속되었고, 60여 명이 지명수배 되었다. 민통련과 인사련, 서노련, 인노련 등 민주화운동 조직들은 거의 와해 상태에 이르렀다. 전두환 정권은 신민당과 민주화운동세력을 분열시켜, 신민당은 체제 내로 유도하는 한편, 민주화운동세력은 좌경폭력세력으로 고립시켜 대대적인 탄압을 가했다. 그러는 와중에 권인숙 성고문 사건 같은 만행도 저질러졌다.

전두환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에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면서 민주화운동진영 내부에서 새로운 반성의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주체사상의 영향도 있었지만, 누가 보아도 5.3항쟁이 소아병 주의적이고, 모험주의적이었다는 것은 명백했다. 신민당과의 차별성도 중요했지만, 아직은 군부독재타도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하여 함께 어깨 걸고 나아가야 할 동지였다. 전경이 진압을 시작한 지 한 시간도 못 되어 해산되어 버린 당시의 역량으로 "인천을 해방구로"라고 하는 구호는 차라리 코미디였다. 대중은 이해도 못하는 삼민헌법이라는 개념은 운동의 경직된 관념성만을 보여 줄 뿐이었다. 그에 대한 반성이 여기저기서 모색되고 있던 차에 박종철 고문 사건이 터졌다. 무고한 젊은이의 죽음에 온 국민이 분노하였고, 그러한 대중의 호응에 발 맞춰 민주화운동도 변해가기 시작했다.

87년 5월 27일 결성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는 그러한 변화의 산물이었다. 아직도 일각에는 신민당과의 차별성을 더 강조하는 제헌의회 그룹 같은 부류도 있었으나, 민주화운동진영의 대부분은 전두환 군사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차이는 잠시 접어두고 우선 뭉쳐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바로 전년도에 있었던 5.3항쟁이 바로 반면교사였던 셈이다. 그리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함성이 바로 그러한 차이를 묻어 버리고 말았다. 대오는 하나가 되었고, 마침내 그 하나가 된 대오가 6.29라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얻어내고 말았다. 5.3항쟁은 비록 반면교사였지만, 6월 항

쟁의 밑거름이 되었던 셈이다.

그러나 5.3항쟁이 좌편향이었다면 6월 항쟁의 대동단결론은 우편향이었다. 민주화운동진영은 87년 대선 국면에서 양김 씨의 분열이라는 재앙 앞에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김영삼이냐 김대중이냐로 분열되고 말았다. 이는 민주화운동진영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대동단결만을 앞세운 우편향이 초래한 결과였다.

이상 86년 5.3항쟁이 그 후 민주화운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보았다. 문제는 이들 영향들이 아직도 현존하는 문제라는 점이다. 주체사상의 문제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에서 보더라도 우리 운동 내에 아직 명백히 현존하는 문제이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는 형국으로 그렇다고 하늘이 가려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자칫 대재앙으로 변할 위험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다. 주체사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어야 하는가 정녕 어려운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신민당과의 차별성의 문제도 선거 때마다 선거연합이니 독자 출마니 하면서 매번 되풀이되고 있다. 진보정당의 독자성이라는 원칙과 새누리당이라는 꼴 보수 정당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는 원칙은 매번 충돌하고 있다. 전자를 강조하면 친일파로 거슬러 올라가는 꼴 보수들이 집권하고, 그렇다고 매번 선거연합에 치중하다 보면 진보의 꿈은 멀어져만 갈 뿐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28년 전의 5.3항쟁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토론문5

인천 5·3민주항쟁에 대한 소고

권오광(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5.3민주항쟁에 대한 해고노동자의 소고(小考)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회피태도가 높은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다. 인간이 가지는 12가지 태도(휴먼시너지스틱사의 LSI 진단표)중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높게 쓰는 태도중의 하나가 회피태도이다.

따라서 정치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집권자들은 사건에 대한 원인 진상규명이나 책임을 지지 않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사건을 조작, 은폐하여 진실을 덮으려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의 기억에서 멀리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실제로 KAL 858기 사건, 천안함 사건 등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정치적 사건 등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 가고 있다. 세월호 사건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에 "잊지 않겠다"는 구호를 외치고 600여 단체의 대책위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그러면 인천 5.3 민주항쟁은 나에게 28년 전의 정치적 사건으로 잊혀져 있었는가?

"인천 5.3 민주항쟁과 민주화" 토론회의 토론자로 제안을 받으면서 들었던 생각이다.

아마 5.3동지회(인천구치소에 구속된 사람들의 친목모임)의 회원이고, 당시 해고노동자로서 현장에 있었다가 수배되어 구속되었기 때문에 토론자로 제안 받았지만, 사실 5.3민주항쟁에 대해서는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는 너무나 힘든 사건이었고, 인천지역을 떠나서 지낸 시간이 많았기에 잊어버린 사건이었다.

제주 4.3 민주항쟁이나 5.18 광주민주항쟁의 경우에는 투쟁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항쟁의 의미를 되살리고 현재의 민주화 투쟁으로 이어가는 노력이 있었기에 민주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당시 투쟁의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그 때의 투쟁의 의미를 잊혀지지 않게 지속적으로 밝혀내고 알려왔는지 반성되면서 과연 토론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자문하게 된다.

그러나 주최 측(인천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이 제공한 자료들을 보게 되면서 부분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잊혀졌던 당시의 기억들이 떠올라 토론회에 작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 참여하게 되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나는 대로 자료에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한다.

시간이 오래되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은 부분은 바로 잡아주었으면 좋겠다.

준비과정

1. 4.30 가두투쟁

1986년 3월 부천의 (주)동양피스톤(권인숙 동지가 다니던 공장의 옆 공장)에서 해고되면서 인천노동운동연합(인노련)의 부천해고자투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 당시 인노련에는 동인천, 주안, 부평, 부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마다 해고자투쟁위원회(해투위)와 현장조직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현장조직과는 달리 해투위는 상호연대와 함께 선전, 선동훈련을 하면서 서울지역, 특히 구로지역의 가두투쟁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가두투쟁에 대한 자심감이 높아지면서 4월 30일에는 부평역전 가두투쟁이 기획되었다. 역전 우체국 공사장에서 3명의 해고자가 횃불을 들고 선동하면서 200여명의 해고노동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1시간 이상을 대치하면서 투석전을 전개하였다. 사전정보를 입수하고 배치된 1000여명의 전경들이 최루탄을 쏘면서 대응했지만, 당시 부평역은 공사 중이라 공사자재로 바리케이드를 친 채 한 치도 물러나지 않고 싸웠다. 이런 투쟁으로 자신감이 넘친 해고노동자들과 이에 고무된 현장조직들이 5월 3일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 현장기획모임

5.3 민주화투쟁을 준비하는 총괄적 기획은 인노련 중앙조직(안개조직)에서 주도했겠지만 당일현장투쟁을 준비하는 모임은 중앙조직 2인, 해투위 위원장, 그리고 4개 지역의 현장조직책(당시 부천 현장조직책으로 결합)들이 모여 2차례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 때 논의된 내용 중에는 연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투쟁에 대한 준비는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시민회관 앞 집회는 공동으로 진행하고,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방구를 설정하여 점거농성을 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지만, 자민투와 민민투는 가두행진을 계속하여 동인천까지 가는 것으로 하거나 석바위로 진출하는 입장을 밝혀서 결국 함께 공동 집회를 갖는 것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인노련은 사거리 중앙에 리어카를 이용하여 무대를 만들어 집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사전에 근처골목 벽에 화염병을 준비하여 벽에 세워놓았다가 당일 11시경에 사거리에 무대를 꾸미고 신기천 방향에서 경찰과 대치하면서 정류장 지붕을 넘어뜨려서 방어벽을 만들었다. 한 가지 웃지 못 할 일은 논의 중에 화염병에 대하여 불을 붙이지 않고도 던지면 불이 붙는 화염병 제조법이 있다고 제안해서 만들었지만 당일 던

져보니 하나도 불이 붙지 않았다.

당일 이해되지 않는 현장상황

이후 합동 재판과정에서도 구속자들이 문제제기했지만 두 가지 납득하지 못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오후 5시 이후 경찰들의 총공세에 빌미를 주는 계기가 있었다.

물론 당시 참여했던 대오들이 자민투는 자민투대로, 민민투는 민민투대로, 인사련은 인사련대로, 인노련은 인노련대로 각기 다르게 행동하면서 오후 시간이 지나갈수록 시민회관 사거리 인원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은 페퍼포그 차량이 신기천 방향에서 전경 몇몇을 뒤에 달고 군중 안으로 무조건 쳐들어온 모습이었다. 그리고는 멈춰 서 있었다.

놀라서 피했던 군중들이 모여들면서 격분하여 차를 뒤집어 버리고, 전경들을 때리는 과정이 있었다. 이 때 일부 시민들이 전경들을 때리는 사람들을 제지하고 전경들을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마치 의도적으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폭도로 몰고, 전경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조작극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일이 있고나서 곧바로 주안역방향에서 최루탄 공급 트럭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 차량이 탈취되면서 트럭에 올라탄 사람들이 경적을 울리면서 시민회관 사거리 방향으로 행진하였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대대적으로 경찰들이 진압작전을 수행하여 마구잡이로 연행하면서 구타하기 시작하였다.

나중에 인천구치소에는 70명이 넘는 구속자가 한 사동(5사)에 몰려 있었는데, 아무도 트럭에 관련된 사람도 없고, 트럭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다.

구속자들의 활동

5월 3일 당일 사거리에서 신기천 방향 시위대 앞에서 투석전을 하다가 최루탄(직격탄)에 발을 맞아서 엄지발가락이 걷지 못할 정도로 시퍼렇게 물들어 골목에서 쉬고 있다가 대대적인 연행과정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함께 참여했던 부천지역 해고자가 붙잡히면서 고문을 당하게 되어 수배되었다가 5월 8일 인천서 정보과 형사들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조사과정에서 많이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유치장에 들어가면서 깜짝 놀랐다.

당일 연행된 구속자들이 한결같이 얼굴들이 보름달처럼 부어올라 있었다.

경찰들이 많이 다치면서 연행과정에서 조사를 받을 때 까지 보복차원에서 엄청 맞았던 것이다. 그래서 고문과정에서 강압적인 진술을 요구받고 사실이 아닌 진술을 통해 억울하게 구속된 학생들도 많았다.

인천구치소로 넘어가면서 기소유예로 절반 이상이 나가고, 수배자들이 잡혀오면서 40여명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

5사 사동 아래층에 집단적으로 수용이 되었는데, 사동주변에는 담을 싸서 격리된 채로 수감생활을 하였다.

이때부터는 감옥이 투쟁의 최일선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소내투쟁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라는 내용과 5.3투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5.3투쟁은 다양한 정파가 각기 다른 입장과 구호를 내세웠지만 전두환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직선제 쟁취를 통해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민중항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생, 노동자, 지역시민들의 연대투쟁의 포문을 연 것이고, 단일한 주장과 공동투쟁의 장을 만들어 내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향후 우리나라 민중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만든 민중항쟁이었다.

그리고 운동의 성숙하지 못한 초기 조직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도적 투쟁의 성격을 보임으로써 지역 시민들의 광범위한 조직과 공감대를 만들어 내지 못한 한계를 보인 점은 향후투쟁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등의 의견들로 모아지면서 소내 일상투쟁과 재판투쟁을 통해 5.3민중항쟁의 정당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결의하였다. 논의에 참여한 구속자들의 면면을 보면, 해고노동자, 자민투 지도부, 민민투 지도부, 당원, 학생, 시민 등 다양했지만 토론을 통해 하나의 전선을 만들어 갔던 과정은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 때 터진 사건이 권인숙성고문 사건이었다. 소지를 통하여 여사에서 전달된 내용을 접하면서 전면적인 투쟁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우선 가족들을 통해 밖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안에서는 단식투쟁, 그리고 면회거절 및 면회 시 사동에 안 들어오기. 병사점거농성, 문짝 계속 두드리기 등의 다양한 전술을 통해 투쟁의 일치된 단결력을 보였다.

투쟁하는 중에 독방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식기에 변을 가득 담아 뿌리면 각 방으로 교도관들이 되받아 뿌려서 옷과 이불에 변이 묻은 채 일주일동안 생활하기도 하였다. 나중에는 방배정도 사동 대표들이 하고, 추석 때는 복도에 다 모여서 합동차례를 지내고, 전체가 참여하는 체육대회도 할 만큼 자유로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나중에 두 번째로 서대문형무소에 갔을 때 만난 교도관이 알아보고, "30년 동안 교도관 생활하면서 인천 5.3 구속자들과 그 가족들이 가장 지긋지긋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내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는 처음에는 재판거부투쟁을 전개하다가 나중에 5.3민중항쟁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재판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투쟁의 주요 동력들이 출소한 후 인천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5.3민주투쟁의 연속성을 담아내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쉽다.

그리고 당시 구속자 중에 인사련 활동을 한 사람이 없던 점도 이후 인천지역과의 연계성을 갖지 못한 한계로 작용한 것 같다.

그러나 일부 해고자들과 인하대, 인천대 학생들은 지역에서 활동을 이어갔으나 합법적인 영역에서 활동하지 않다 보니 지역운동에 투신하지 못했다.

90년대 운동권의 변화와 함께 대부분 인천지역을 떠나게 되면서 "5.3동지회"라는 친목모임으로 일 년에 세 번 정도 모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5.3 동지회를 대신해서 인천 민주화계승사업회와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에서 이런 토론회 자리를 만들어서 5.3민주화 항쟁의 역사성과 연속성을 만들어 가는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싶다.

참고자료

인천 5·3민주화운동과 노동자의 역할

김영곤(전 고려대학교 강사)

5·3인천민주화운동과 노동자의 역할

김영곤(고려대 강사, 전 대우중공업노조 사무국장)

Ⅰ 머리말
Ⅱ 제도권 야당과 노동운동의 조우
Ⅲ 5.3운동에서 노동자의 역할
Ⅳ 5.3운동이 1980년대 후반 노동운동에 미친 영향
Ⅴ 맺음말

Ⅰ 머리말

5.3인천민주화운동(5.3운동)이 일어난 지 21년이 지났지만 5.3운동에서 노동자의 역할은 아직 체계적으로 연구 정리하지 못했다. 인천의 일반 시민은 5.3운동은 민통련 학생 신민당이 일으킨 사건으로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참가한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59]

이렇게 된 이유는 첫째 인천지역 민주화운동과 5.3운동의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며, 둘째 인천지역 노동운동사 연구가 부진하며, 셋째 5.3운동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정리하고 싶어도 연구능력이나 생계비 문제가 있어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60]

연구자의 5.3운동의 연구도 많지 않다. 부마항쟁 광주민중항쟁 87년 6월민주항쟁 노동자 대투쟁의 연구에 비해 아주 적은 편이다.

5.3운동연구에서 개설은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이우재, 조현연(성공회대 교수)의 연구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소책자[61] 등 있다. 2003년 2006년 열린 5.3운동을 기념하는 토론회에서도 개설이 중심이었다. 연구에서 조현연은 "5.3운동을 통해 민중운동을 보수야당으로부터 명백히 분화되고 독자적인 실체로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62]고 평

59) 양재덕의 증언, 2007년 1월 14일, 인천.

60) 역시 5·3운동에 참여한 정동근(인노련, 동보전기)은 스스로 이 주제를 정리하려고 「5·3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립을 위하여」(2004)라는 시론의 글을 썼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에게 '5·3운동에서 노동자의 역할'의 정리 연구를 주문했다. 그의 글이 이 논문 기본틀 작성에 큰 도움을 주었다.

6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다시보는 5·3인천항쟁』(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이 소책자는 민통련의 입장을 반영했다.

가하고, 이우재는 "5.3사태가 없었다면 87년 6월항쟁도 없었을 것"[63]이라 하고, 조희연은 "체제안정화적 타협을 거부하면서 보다 급진적 민주주의의 전망을 요구하며 싸운 5.3정신의 현재적 부활을 생각해보자"[64]고 했다.

1980년대 후반에 나온 노동운동에 관한 저술에서는 5.3항쟁에서 노동자 시위를 주도한 서.인노련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 김장한 외는 "5.3투쟁은 대중의 정서에 맞게 전개되지 못하면서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폭동.소요로 규정되면서 탄압의 계기를 제공했다"[65]고 평가했다.

이에 비해 5.3시위에 참여했던 정동근, 김지선(인노련 사무국장)[66]이나 노동소설가 방현석(노동소설가)[67]이 쓴 글은 5.3운동이 이후 노동운동에 미친 영향까지 살피면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점 두 측면을 찾으려 했다.

5.3운동의 범주는 1986년 5월 3일 있었던 시위를 비롯해 5.3시위에서 파생한 권인숙 사건과 유성환 의원에게서 비롯한 국시논쟁까지로 잡았다.

이 연구에서 당시 현장에 배포한 선전물, 신문 잡지, 논문 저서 등을 참고하며, 5.3운동에 직접 참가했던 노동자들의 증언[68]을 기본 자료로 5.3운동에서 제도권 야당과 노동자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우선 제도권 야당과 노동운동이 어떻게 만나 결합할 수 있었나를 살피고, 이어 5.3시위의 전개과정과 그 가운데 노동자의 역할을 살피고 나아가 5.3운동이 이후 노동운동에게 미친 영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제도권 야당과 노동운동의 조우

1. 제도 야당의 현판식 개최 목적

62) 조현연, 「한국정치변동의 동학과 민중운동: 1980년에서 1987년까지」(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2), 116쪽.
63) 이우재, 「5·3인천사태를 돌아보며」『5·3운동의 역사적 재조명』(인천: 5·3민주화운동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최 토론회, 2003. 5. 2), 20쪽.
64) 조희연, 「5·3인천사태와 급진적 민주주의」『5·3운동의 역사적 재조명』(인천: 5·3민주화운동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최 토론회, 2003. 5. 2), 6쪽.
65) 김장한 외,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서울: 조국, 1989), 104쪽.
66) 김지선, 「80년대 초반의 노동운동과 5·3인천항쟁」『이론과 실천』 2002년 6월호(서울: 민주노동당).
67) 방현석, 「인천 5·3항쟁 1986년 5월」 『아름다운 저항』(서울: 일하는 사람들의 작은 책, 1999).
68) 양재덕(5·3 당시 학생운동 출신 해태음료 노동자), 정동근(당시 인노련 회원, 동보전기 해고자), 박육남(당시 인노련 회원, 한일도루코 해고자), 정한식(당시 인천목회자 협회 서기), 최성곤(현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무국장)이 2006년 10월 25일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사무실에서 이 논문의 초고를 놓고 토론했다.

1986년 들어서 전두환 정권은 이원집정제를 추진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이 한국에서 군부를 통한 지배를 문민지배로 전환해 반미 자주화의 흐름을 약화시키려는 신개입주의 정책, 개발독재 과정에서 성장한 자본이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독자화 하려는 경향, 그리고 문민화로 취약한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전두환 정권의 요구가 있었다. 그리고 신한민주당(신민당)의 이민우 총재가 이를 받아들였다.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는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흐름이 좀 더 강했다. 2.12총선 1주년을 맞아 신민당과 민추협(공동의장 김영삼 김대중)은 2월 12일 '직선제 개헌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전국 시도별로 개헌추진위원회 결성대회를 열어 개헌 분위기를 고취시킬 계획을 세웠다. 이 대회는 3월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3월 23일 부산에서 20만 명 광주에서 35만 명이 모였고, 신민당은 이 열기를 수도권에서 이어가고 가고 싶었고 인천이 그 출발점이었다.

야당 신민당은 대통령 선거제도를 변경하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한편으로 독재정권과 타협하고 다른 한 편으로 대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학생 대중의 힘이 필요했다.

3월 17일에는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 김영삼, 김대중,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1985. 3) 문익환 의장, 박형규(기독교), 이돈명(천주교) 등이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락기구'(민국련)을 구성해 개헌투쟁에 보조를 맞추어 개헌 투쟁을 열기를 띠었다. 4월 28일에는 서울대에서 전방 입소훈련 거부투쟁 과정에서 김세진 이재호가 "양키 고 홈" "반전반핵"을 외치며 분신했고, 격앙된 학생들은 미국에게 분노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자 4월 29일 민국련회의에서 김대중이 학생들의 '반미' '반핵' '해방' 등의 과격한 주장을 지지하지 못한다고 선언했다. 전두환은 4월 30일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를 만나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건의하면 재임기간 중에도 개헌할 용의가 있다"면서 신민당에게 학생과 단절하고 국회로 들어와 개헌논의를 하자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렇게 신민당이 보수대연합 쪽으로 기울자 민통련은 5월 1일 민국련을 탈퇴했다.

민정당의 보수대연합, 이원집정제나 내각제 추진에 신민당 역시 개헌을 주장하는 데 반해 재야와 노동자 학생 일각에서는 개헌 아닌 제헌을 요구했다. 이런 개헌 논의의 이원화는 서울 대구 대전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5.3시위는 신민당의 조직동원 수가 적고 노동자 학생 재야의 동원수가 많으면서 직선제 개헌과 민중생존권의 문제를 강하게 표출하는 대회가 됐다.

노동자 대중의 힘과 협력이 필요한 신민당은 이런 배경 아래 5.3시위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조우했다.

2. 노동자 도시 인천지역 노동운동의 성장

1) 인천 지역 노동자의 상태

먼저 인천지역의 산업과 고용상태를 알아본다.

한국의 산업은 1970년대 섬유 전자 등의 저임노동에서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으로 중심이 이동했다. 인천 역시 섬유 중심에서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등으로 중심이 이동했다. 기업규모별 노동자 구성에서도 300인 이상의 기업체에 고용된 노동자가 절반가량이고, 재벌기업의 대규모 중화학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것은 1980년대 노동운동이 생산직 노동자가 밀집한 재벌기업의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조건을 제공했다.[69]

인천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의 39만 1천명 52.9%에서 1986년 51만 9천명 52.0%, 1990년 76만 3천명 60.5%로 증가했다. 이 수치의 증가속도가 완만한 것은 1978년 공업배치법에 따라 인천지역이 제한정비권역에 포함돼 신규 입지를 제한하고 기존 시설의 신, 증설을 제약했기 때문이다.

실업률은 경기호전에 따라 1980년 16.4%에서 1986년 5.2%로 낮아졌다. 1980년대 이후 인천지역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3차 산업으로 중심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제조업 취업자는 1980년 47.0%에서 1985년 44.2%로 줄었다. 직업별 구조로 보면 생산운수 단순노무직은 1980년 53.4%에서 1985년 48.4%로 줄고, 그 다음이 판매직, 사무직의 순이었다.

종사상의 지위별로 보면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가 각기 1980년 4.0%, 17.7%, 3.7%, 74.6%, 1983년 2.1%, 19.1%, 5.0%, 73.5%, 1986년 3.3%, 17.7%, 5.3%, 73.5%이었다.[70] 임금노동자의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3/4 수준이었는데 이것은 당시 전 국민 가운데 노동자 계급의 비율이 1980년 39.7%, 1990년 46.6%였던 것에 비해 갑절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노동자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갑절 가까이 높고

69)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서울: 역사비평사, 1992), 408쪽.

70)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경제활동인구연보』, 『인구주택총조사』, 『고용구조특별조사』 각 연도판 및 인천광역시, 『시정연보』, 『인천경제백서』, 각연도판. 인천광역시사 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사』 제4권(인천: 인천광역시, 2002. 8), 591쪽에서 재인용.

노동자수가 38만 1천여 명인 노동자도시로서 인천지역은 노동운동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인천지역에서 성별 취업자의 추이는 전체 취업자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각기 1980년 70.7%, 29.3%에서 1985년 72.5%, 27.5%로 변화해 남성 취업자가 늘고 여성 취업자가 줄었다.

다음으로 인천지역 노동자의 상태를 알아본다.

1979년 말의 제2차 석유파동에 따른 경제위기와 10.26사태 이후 정치정세의 격변을 거치면서 한국 경제는 침체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노동운동 탄압으로 실질임금은 1980년 -4.2%, 1981년 -0.5%로 두 해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러나 1983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고 물가가 안정되면서 실질임금 상승률이 플러스(1985년 6.7%, 1986년 5.3%)로 돌아섰다.

인천지역의 임금수준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나 1990년대 초 전국 평균에 접근했다. 월간 임금은 전국과 인천지역이 1982년 244,819원, 240,184원(전국 대비 98.1%), 1985년 314,213원, 289,099원(전국 대비 92.0%)이었다.[71] 인천지역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1989년 56.4시간이었다.[72]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1985년 한국이 53.8시간으로 일본 41.5시간, 대만 47.3시간보다 길었다. 산업재해율은 국제적으로 가장 높았고, 1986년 전국에서 14만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다. 특히 인천은 중대 산업재해가 많아 심각했지만 아직 산재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천지역은 산업이 제조업 중심에서 3차 산업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제조업에서도 경공업에서 자동차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에너지의 중화학공업으로 중심이 이동했다. 5.3운동 당시 노동자수는 38만 1천여 명이지만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노동자의 비중이 3/4이나 돼 전국 평균의 갑절 정도로 매우 높았다. 노동자 가운데 남자가 3/4 정도로 매우 높았다. 노동시간은 세계적으로 길었고 산재 발생도 많았다. 임금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았다. 노동자의 주거도 대부분 공단지역에 밀집해 있었다.

71) 노동부, 『직종별임금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판 참조. 인천광역시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594쪽에서 재인용.
72)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특별조사결과보고』, 각 년도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판 참조. 인천광역시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596쪽에서 재인용.

이런 조건은 1980년대 노동운동이 중공업 남성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조건을 충족했다. 또 노동운동의 파급력에서 인천지역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대공장이 많아 전국적 파급력이 컸다.

2) 인천지역 노동운동의 뒷받침

인천은 노동자 도시답게 역사적으로 노동운동의 경험이 풍부한 지역이다. 전통적인 부두 운송노조, 1970년대 말의 민주노조를 지킨 동일방직 반도상사 노동자의 투쟁, 1980년대에 들어와 해고노동자들의 블랙리스트 철폐 요구 싸움, 학생 출신 노동자가 기존 노조를 배제하고 임금을 인상시킨 대우자동차 파업, 한국노총을 점거 농성하고 70명이 해고당한 대한마이크로전자(1985. 9), 이전대책을 요구하며 농성한 대림자동차(1985. 10), 4공단 상임 이사실을 점거 농성하고 2명이 구속된 동보전기 파업(1985. 10) 등이 있었다.

광주민중항쟁 뒤 학생들이 노동현장에 많이 들어갔는데, 인천은 그런 노동자가 1천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들과 기존의 노조 활동가들이 결합해 인천의 노동운동은 강한 조직력을 갖추었다.

1986년 들어 3월 10일 인천지역 임투전진대회를 계양산에서 열려 했으나 경찰의 봉쇄에 밀리고 밀려 결국 강화도 전등사에서 5백 명이 모여 대회를 열었다. 4월 12일 해고자가 부평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서울에서 4월 13일 전국노동자임투위 대회를 열었다. 5.3전야에 노동자가 투쟁하려는 기운이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5.3운동에서 노동자 시위를 서.인노련이 주도했다. 서.인노련은 '대중정치조직(MPO)'이라는 조직노선을 표방해 정치노선은 삼민(민족.민주.민중) 사회를 지향하는 노동자조직이었다. 당시 학생운동 출신 노동자의 투쟁력이 강한 반면 기존 한국노총은 정부나 기업에게 협조하는 노선을 걷는 상태 아래 전두환 정권의 강한 노동운동 탄압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이런 조직형태와 선도투쟁론(선도투)이 나왔다.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위원장 민종덕, 1985. 8. 25 결성)은 지역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던 현장모임이 연대해 지역모임을 운영하는 지역운동론을 주장했다. 서노련은 서

울에서 청계피복노동조합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구로지역노조민주화추진연합 서울노동자연대투쟁연합이 연합해 결성했다.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노복, 1984. 3. 10 결성)처럼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 출신의 활동가들이 조직해 한국노총 민주화를 주장하던 인천지역노동자복지협의회(인천노복, 1984. 11 결성, 의장 양승조)가 스스로 해체하고 서노련과 노선을 같이하던 노동3권쟁취위원회(1985. 9. 7 결성)와 결합해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 1986. 2. 7 결성)을 결성했다.

인노련은 조직원이 5, 6백~1천명이었는데, 회원수 집계가 신축적인 것은 조직이 공개비공개의 이원 조직이어서 노동자 스스로가 인노련 회원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노련은 선진노동자 중심으로 움직여 소모임이 지역에게 프락션을 하며 지역 대중조직을 일방적으로 지도하는 활동을 했다. 이런 흐름은 선진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상호 침투하는 노동운동의 전형과는 달랐다.

3) 인천지역 노동자의 요구

1986년 초 노동자가 파업과 시위에서 제기한 요구는 회사 안에서는 임금인상, 노동자 일당과 상여금 인상(한양공영), 체불임금 지급, 해고반대 복직, 어용노조 반대 등이었고, 회사 밖에서 노동자들은 공동행동에서 생활임금 지불, 탄압반대, 해고자 복직, 블랙리스트 철폐, 단결권 보장, 한국노총 반대, 지역 노동자의 단결 등이었다.

이런 사실을 보면 당시 노동자의 요구와 주장은 체불임금을 받아내고 임금 상여금을 높여 생활임금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노조의 요구 등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비록 경제적인 요구이지만 단결권을 억제하는 정부의 노동정책,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경제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정치적 성격을 함께 지녔다.

한편 필리핀 2월혁명(1986. 2)에서 민중의 힘으로 독재자 마르코스를 물러나게 한 것은 시민운동에게 대중의 힘으로 독재정권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또 노동자들은 폴란드 그다니스크 조선소에서 일어난 독립노조 '연대'의 조직을 보고 민주노조와 노동자 권력의 전망을 보았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 아래 노동자들은 집회를 하려면 비밀리에 어느 장소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옥외에서 집회를 하려면 기습적으로 집회를 열고 주장을 외치고 바로 흩어졌다. 아니면 화염병을 던져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거리를 두고 십여 분이나 길을

경우 몇 십 분 정도 시위를 한 뒤 해산했다.

이렇게 시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도 대놓고 탄압하지 않는 신민당의 개헌 현판식은 노동자가 야당이 독재를 연장하는 이원집정제를 지지하는 것을 막고 아울러 자신의 주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런 배경에서 신민당은 노동자의 힘이 필요하고, 노동자는 신민당이 만든 합법적인 공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해서 보수적인 제도야당 신민당과 1980년 이후 민주주의와 사회변화를 요구하며 성장한 지하의 노동자 세력이 수면위로 올라와 5.3운동의 현장인 인천에서 조우했다.

Ⅲ 5.3운동에서 노동자의 역할

1. 노동자의 5.3시위 참가 준비

노동자들은 5월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경기.인천지부(지부장 노승환) 결성대회 및 현판식을 독재반대 민주주의, 신민당의 기회주의를 경계, 노동자 생존권과 민중권력을 선전하는 기회로 삼았다. 인천 부천을 비롯해 서울 안양 안산 등의 수도권 노동자 조직을 총동원했다. 안산지역에서도 현장 노동자가 참석했다. 인천지역의 공해공장을 안산으로 대거 이전하는 데 따라 안산에는 인천출신 노동자와 선진노동자가 많이 와 있었다.

서노련은 대검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4월 23일 김문수 지도위원, 이옥순 부위원장, 이봉우 사무국장이 만나 인천집회에 결합하기로 정하고 경인지역 18개 산업체 노동자를 동원하기로 정했다.[73]

인천의 노동자들은 오래 전부터 시위를 준비했다. 노동자 학생은 각기 시위에서 쓸 선전물 확성기는 물론 화염병도 준비했다. 인노련은 화염병을 준비해 시위 전날 인천시민회관 근처에 있는 주안1동 성당을 비롯해 몇몇 곳에 미리 숨겼다.[74] 민통련은 평화적 시위를 하되 5월 3일 저녁부터 주안1동 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기로 계획했다.

---

73) 『한국일보』 1986년 5월 20일.
74) 김지선, 앞의 글, 참조.

2. 5.3시위와 노동자 조직

1) 5.3시위에서 노동자의 참가 비중

5.3시위 참가자는 모두 5만 명[75]이었다. 이 숫자는 인천에 앞서 3월 23일 개헌추진지부 현판식을 가진 부산의 20만 명, 광주의 35만 명 그리고 5월 10일 마산의 20만 명에 비해 적은 수였다. 광주에서는 직선제 개헌을 향한 열기가 아주 높아 대회가 끝난 뒤에도 밤늦게까지 시위를 하고 32명이 구속됐다. 마산에서는 연행자 42명(노동자 7명)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 인천대회는 수도권에서 처음 갖은 집회이며 대규모 공장이 밀집한 지역이어 이후 민주화운동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고비였다. 그런데도 5만명에 그친 것은 5.3현판식 직전인 4월 28일 서울대생 김세진 이재호가 반미 구호를 외치며 분신하고 5월 1일 인천의 삼한택시 노동자 변형진이 분신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 5.3대회가 단순한 개헌 현판식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 학생의 반신민당 기류가 강할 것이라고 판단한 신민당이 당원 동원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

인천의 5만명 가운데 조직한 수가 1만여 명이었다. 신민당원 2천명, 학생 4천명, 민통련 인사연 1천명, 노동자 2천명 등이었다. 노동자 가운데 1천명이 서.인노련이고 나머지 1천명이 JOC, 기노련, 수도권 지역에서 참가한 노동자들이었다.[76]

인노련은 인천 안에 3개 지구가 있었고 조직력은 5, 6백 명이었다. 노동자 출신으로 양승조(위원장), 김지선(사무국장, 삼원섬유 해고자), 정동근, 전희식(대우자동차) 등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인노련에는 학생출신 노동자가 많았는데 그것은 인천지역에 대학생 출신으로 노동운동에 투신한 사람이 1천여 명을 추정할 정도로 많았기 때문이다.

1986년 인천지역 기관장 회의자료에 따르면 신원을 확인한 인천지역 '위장취업자'만도 246명으로 서울 181명, 경기 178명, 부산 40명, 광주 20명, 대구 15명에 비해 훨씬 많았다.[77] 이들은 공장 안팎에서 노조 결정이나 노조의 민주적 변화나 각종 소모임을 조직해 노동운동의 저변을 넓혔고 노학연대 활동을 했다. 이것은 5.3운동에 노동자들을 적극적인 참여하게 하는 조건이었다.

인천기독노동자연맹(기노련, 1985. 12), JOC(가톨릭노동자회), 도시산업선교회 등에 소속한 노동자들도 참여했다.

서 . 인노련에 속하지 않은 활동가들도 회사 동료나 소모임원을 안내해 시위에 참가

75) 『동아일보』 1986년 5월 5일.
76) 앞의 토론모임.
77)『인천신문』2006년 11월 16일.

했다. 양재덕은 해태음료에 다니며 회사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것은 시위에 참여하는 원래의 목적 외에 노동자를 정치 사회적으로 훈련시키려는 목적에서였다고 했다.[78)]

이렇게 해서 모인 노동자가 모두 2천명으로 조직적으로 참가한 1만 명의 20%이었다.

2) 5.3시위의 전개와 노동자

5.3시위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오전부터 개헌 현판식을 열 예정이던 오후 2시 사이에 노동자 학생 민통련은 각기 집회를 갖고 민정당사를 불 지르는 첫 단계, 신민당이 개헌 현판식이 무산되고 이를 공식 발표하는 5시 30분까지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있던 두 번째 단계, 이후 주안역 동인천역을 비롯한 시내 곳곳에서 산발 시위를 한 셋째 단계다.

첫 번째 단계는 오전부터 신민당의 지도부가 시민회관 앞에 도착했을 때까지이다.

5월 3일 아침 일찍부터 인천시민회관에서 열리는 개헌 현판식을 알리는 신민당의 가두방송이 인천 시내에 울려 퍼졌다. 오후 2시로 예정한 신민당의 현판식을 앞두고 오전 11시 무렵부터 청년들이 몰려들기 시작해 정오 무렵에는 주안역과 시민회관 사거리 일대에 3천여명이 모였다. 경찰은 이날 주안역이나 대회장 주변에서 검문하지 않았다.

서 . 인노련은 주안역 앞에 집결해 주안역 앞 대로에서 주안사거리 쪽에 인노련, 주안역 쪽에 서노련이 대열을 지었다. 주안역에서 출발한 노동자 2백여명이 주안사거리에 이르러 1천여 명을 늘었다. 그 뒤 노동자들은 주안사거리에서 주안역 사이 6차선 대로를 꽉 메웠다. 조직 참여 노동자는 거리에,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은 인도 위에 서서 시위를 지켜보고 때로는 시위 대열과 합류했다.

주안1동 성당에 모였던 민통련에 속한 500여 명이 주안사거리에 도착했을 때는 시위대가 5천여 명으로 늘었다. 민통련 시위대는 시민회관 앞에서 주안1동 성당 사이에 인사연 민청련 민불련 순으로 대열을 지었다. 정동근에 따르면 철거민을 중심으로 한 도시빈민이 민통련과 연계하여 시위에 참가했다. 철거민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준비한다며 주거를 철거당한 이들로 목동(1985)과 같은 철거현장에서 시위를 했지만

78) 양재덕의 증언, 2007년 1월 14일, 인천.

아직 철거민이나 노점상이 전국빈민연합(1989)과 같은 조직을 결성하지 않은 상태였다.

학생들은 반제 반파쇼 민족민주투쟁위원회(민민투)가 시민회관 앞에 집결하고, 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투쟁위원회(자민투)가 중앙극장 쪽 시외버스정류장 앞 대로에 자리 잡고, 전국 반제.반파쇼 민족민주투쟁학생연맹(민민학련)은 신기촌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

신민당원들은 시민회관 앞에 자리 잡았다.

노동자, 학생, 민통련은 각기 시위에 참여하는 입장이나 전술이 달랐고 집회도 따로 따로 열었다. 민통련은 평화적 연좌집회가 주된 전술이었고, 학생은 전투대오를 구성하고 경찰과 대치해 화염병을 썼다. 노동자는 시위행진에 주력하며 소수가 전투대오에 참가해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졌다.

서.인노련 등 노동자단체는 주안사거리 중앙에 연단을 설치하고, '삼반정권타도 및 삼민헌법 쟁취 실천대회'를 개최했다. 김문수 전희식 서기화 등이 합판을 깐 리어카 위에 올라가 삼반정권의 억압과 폭력성을 말하고 '노동자 해방투쟁'을 선언하고, 선언서를 길가에서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민통련은 시민회관 앞 사거리에서 인사연이 주관해 농악을 울리고 사물놀이를 하며 '민주화촉진 인천시민대회'를 열었다. 이호웅 인사연 의장과 수배중인 민통련의 장기표, 안희대, 광주항쟁 관련자 정동년 등이 '군사독재 타도하고 민중민주정부를 수립하자'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을 물러가라'며 연설했다. 이들은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광주학살 책임지고 미국은 사죄하라! 저임금, 실업 강요하는 재벌정권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연좌해 즉석 '민주화대토론회'를 가졌다.[79]

이렇다보니 노동자 학생 민통련은 "민주화라는 대의 앞에 서로 유대감 없이 각기 자신들이 계획한 집회만 고집하고" 따로 따로 행동해 시위에 질서가 없고 매우 혼란스러웠다.[80] 오후 3시가 넘어 서.인노련을 대표한 김문수 지도위원(한일도루코 해고자)와 민통련을 대표한 장기표 정책연구실장이 만나 공동으로 연좌집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통련이 노동자 대오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었으나 노동자들은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 이런 합의가 제대로 시위 대중에게 전달되지도 않았고 또 일부 노동자들은 연좌농성이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방법으로는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해 수긍하지 않

79) 『중앙일보』 1986년 5월 5일.
80) 이우재, 앞의 글, 18쪽.

고 시위를 계속했기 때문이다.

시위대들은 석바위 방향과 귀빈예식장 방향의 두 곳에서 전투경찰과 대치선을 형성했다. 오후 1시 15분 10여 명의 시위대가 귀빈예식장 앞의 민정당 인천 제1지구당사에 돌을 던지며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쏜 최루탄이 우박처럼 쏟아졌다. 민정당 지구당사에서 검은 연기와 화염이 치솟으며 불탔다.

시위대는 경찰과 공방을 벌이면서 전투대오, 행진대오, 연좌대오의 셋으로 갈라졌다. 전투 대오는 학생이 중심이고, 노동자들은 시위를 계속하고 민통련은 연좌시위를 했다. 시위대는 버스안내 표지판 휴지통 등으로 석바위 방향과 신기촌 방향 두 곳에 바리케이드를 쳤다. 전투 대오는 화염병과 보도블록을 깨서 던져 경찰이 시위대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다수가 학생이고 소수의 노동자가 합세했다.

1시 45분 시위대는 시민회관 앞에서 신민당 깃발을 단 승용차를 전소시켰다. 주안로 경인로 일대의 상가는 완전 철시했다.

두 번째 단계는 시위가 본격화하여 시위대와 경찰의 공방이 치열했다.

이날 오전 인천에 도착한 이민우 총재, 김영삼 고문 (김대중은 가택연금) 등 신민당 지도부 차량 50여대가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시내를 돌며 직선제 개헌 추진과 이날의 개헌 현판식을 알리는 카퍼레이드를 하고 오후 1시 50분 무렵 대회를 열 예정이었던 인천시민회관 앞에 도착했다. 시민회관 벽에는 신민당의 "개헌 없이 민주 없고 민주 없이 안정 없다" "못 참겠다 군부독재 개헌하여 갈아치자!"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그러나 이미 시위대와 경찰의 공방이 치열하고 최루탄 가스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다. 신민당 지도부는 경찰의 최루탄 난사에 밀려 후퇴한 인파에 막힌데다 노동자 학생들이 길을 터주지 않아 대회장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노동자 학생들은 "신민당은 각성하라" "이원집정제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신민당 지도부는 대회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1.5km를 걸어 주안역 뒤쪽에 있는 명화섭 의원 사무실로 퇴각해 거기서 대회를 당분간 연기하기로 정했다.[81)]

1시 50분부터 시위가 본격화했고, 시위대 5천여 명과 경찰 1만여 명이 5시간 반동안 공방전을 벌였다. 연도의 시민들도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았다.[82)]

---

81) 정동근,「5·3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립을 위하여」(인천: 2004), 2~3쪽.
82) 『중앙일보』 1986년 5월 5일.

신민당 지도부가 퇴각한 사실을 모르는 신민당원과 시민 2천여 명이 시민회관 안에서 대회가 열리기를 계속 기다렸다. 시위대는 1만여 명으로 불어난 시위대원과 이를 지켜보는 4만여 명을 합쳐 5만여 명이었다. 시위대는 오후 5시 30분 신민당이 대회연기를 공표할 때까지 대치선에서 경찰과 전투조의 팽팽한 공방전의 소강상태 속에서 주안지역 일대에 시위 공간을 확보하고 시위를 계속했다. 최루탄 투석 각목 구타로 양측이 다수 부상당했다.

오후 3시 반 시위대는 '성조기와 군사독재 화형식'을 열었다. 3시 40분 경찰 가스차 1대가 시위 군중 깊숙이 들어왔다가 포위당해 경찰 4명과 사복경찰 1명이 각목으로 얻어맞았다.

4시 20분 시위대가 경찰 1백여 명을 가두고 최루탄을 실은 트럭을 빼앗아 최루탄 10박스 1,500개를 빼앗고 차량을 불 지르고, 가스차를 포위해 못 움직이게 했다.

그리고 일부 노동자와 학생들은 동인천 제물포 등 시내 중심가로 진출해 시가행진을 시작했다.

세 번째 단계는 경찰이 시위대 해산에 나선 이후의 상황이다.

신민당의 대회 연기 공식발표가 있은 뒤 5시 40분, 경찰은 본격적으로 시위대 해산 작전에 나섰다. 경찰은 수천발의 최루탄을 시민회관을 포함한 주안 일대에 난사했다. 경찰은 시위대를 석바위, 신기촌, 중앙극방 방향에서 주안4거리, 또 주안역 쪽을 몰았다. 30분 만에 주안역 쪽으로 밀린 노동자 학생 시위대가 주안역 담을 밀어 부수었다.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담도 수백 명이 한꺼번에 밀자 무너졌다. 그리고 그 틈으로 시위대가 주안역 구내 철로로 들어가는 바람에 열차가 운행을 중지하자 놀란 승객들은 열차에서 내리고 일부가 시위에 합류했다. 주안역 구내의 공방을 끝으로 시위대는 작게 쪼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분산해 시내에서 시위를 계속했다.

주안지역에서 해산한 뒤 시위대의 행적을 보면, 저녁 7시 50분 무렵 주안역에서 제물포방향으로 이동하던 2백여 명의 시위대가 형사기동대 차량을 전소시켰고, 9시 30분 무렵까지 동인천역 3백여 명 연좌시위, 용덕마루 시위대 3백여 명과 경찰의 투석전, 화평교 근처 2백여 명 시위, 축현 국민학교에서 50여 명 시위가 있었다. 오후 10시 무렵 석바위에서 2백 명의 마지막 해산 집회를 끝으로 11시간에 걸친 5.3시위가 모두 끝났다.

이날 경찰은 주안1동 성당과 신기촌 방향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시위대와 대치했다. 교보생명 건물에 본부를 설치하고 시위대를 교란하고 때로는 과격한 행동을 유발했다. 신민당 개헌추진본부의 「인천사태(고문) 보고서(1차)」도 특수부대가 시위를 교란시키려고 시위대열을 와해시키는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83] 검찰은 경찰관 공무원 105명이 부상당하고 경찰과 일반차량 3대가 방화 또는 탈취 당했다고 발표했다.[84]

언론은 저녁 7시부터 시위대를 좌경 폭력세력의 매도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보도지침'에 따라 이날 저녁 7시부터 KBS TV를 비롯한 방송들은 화염에 휩싸인 민정당 지구당사와 거리에 가득한 최루탄 분말, 깨진 보도블록과 전경을 구타하는 장면을 반복해 방송하며 5.3시위를 '폭력 난동'이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시위대의 반미 주장 등을 문제삼아 5.3시위를 좌경 용공세력의 체제전복 기도라고 매도했다.

신문들도 5.3시위를 "격렬 구호 충돌 시가 수라장" "인천 시위 조종.주동 32명 수배"(『동아일보』 1986. 5. 4), "인천 사태 민민투.민통련이 주도" "급진학생 과격 재야가 소요유도" "인천사태 민민투.민통련이 주도, 민중봉기 유발 노려"(『한국일보』 1986. 5. 20~23)[85],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것도"(『중앙일보』 1986. 5. 5)라고 보도했다.

3) 노동자 시위대의 주장

노동자들은 여야가 준비 중인 개헌협상을 미국의 사주에 의한 야합으로 규정하면서 '민중헌법 제정을 위한 국민회의'를 통해 삼민헌법제정을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시위를 하며 "속지말자 신민당 몰아내자 양키놈!" "군사독재 타도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생활임금 쟁취하자!" "8시간 노동제 쟁취하자!" "파업자유 쟁취하자!" "박영진의 원수 갚자!" "폭력경찰 때려잡자!" "노동해방 쟁취하자!" "노동자의 손으로 삼반정권 타도하자!" "노동자가 주인 되는 삼민헌법 쟁취!" "인천을 해방구로"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노련 인노련 기노련 등이 낸 선전물에 나온 구호는 '삼반정권 타도만이 우리의 살길이다'(인천지역노동자연맹), '삼반정권과 야합하여 이 땅의 노동자.농민.빈민의 투쟁을 외면하고 개헌을 사리사욕적 집권 놀음에 악용하는 신민당에게 민중의 이름으로 고한

83) 신민당 개헌추진본부 인천지부, 「인천사태(고문)보고서(1차)」(인천: 1986. 6. 13).
84) 『중앙일보』 1986년 5월 5일.
85) 윤덕한, 「전두환 정권하의 언론」『한국언론 바로보기 100년』(서울: 다섯수레, 2000), 514쪽.

다'(인천지역노동자연맹 서울노동운동연합 인천기독노동자연맹), '전국의 일천만 노동자여 미 제국주의 축출과 예속군부정권 타도의 하나된 것으로 총집결하자' '삼반정권과 신민당의 타협을 배후조종하는 미제국주의 몰아내자'(전국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학생연맹 반제반파쇼노동자투쟁위원회 서노련 인노련) 등이다. 마지막 두 개의 구호는 서. 인노련과 민민투 공통의 구호다.

민통련 인사연은 '직선제 개헌', '보수대타협 분쇄', '신민당 각성', '군부독재 타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독재정권 지원하는 미국 사죄하라!'며 주장해 직선제 개헌 주장에 주력했다. 또 "저임금, 실업 강요하는 재벌정권 타도하자!" "노동자 억압하는 독재정권 물러가라!" "농가부채 탕감하고 농축산물 구입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 문제를 지지해 연대의 의사도 표시했다.

학생은 민민투가 삼민헌법 제정을 강조해 '삼반정권과 신민당의 타협을 배후조종하는 미제국주의 몰아내자'라고 했다. 자민투는 자주 통일을 강조해 '미일외세축출, 군부파쇼 타도, 민주헌법쟁취'를 중심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현 정세는 미제국주의가 권력재편을 통해서 진보 보수 양자에게 권력을 분산시키고, 그 각자를 미제국주의가 지배하려는 국면이다'(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라고 했다. 인천민주학생일동은 "불황.실업 강요하는 미일외세 물러가라"고 했다.[86]

그밖에 민중문화운동협의회는 "사대굴종 강요하는 양키문화 몰아내고 민족자주 바탕되는 민중문화 쳐들이자!"라고 했다.

노동자들의 선전물과 구호를 분석해보면,
첫째 민주주의에 관한 요구는 군사독재 타도, 직선제 개헌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단결, 파업의 자유 등이었다. 독재의 내각제 개헌을 통한 영구집권을 경계하는 구호도 나왔다.

둘째, 생활임금 쟁취, 최저생계비, 8시간 노동제, 산업재해 대책, 파업.시위의 자유, 단결권 보장과 같이 노동자의 생활과 권익 보장에 관한 요구가 나왔다.
그리고 민중생존권 보장, 삼민헌법 쟁취처럼 민중의 진보정치를 주장하는 내용도 나

86) 서울노동운동연합·인천지역노동자연맹, 「일천만 노동자의 손으로 군사독재정권 타도하고 삼민헌법 쟁취하자!」(1986. 5. 3); 필자미상, 「5·3 인천 유인물 분석」(1986) 등 참조.

왔다.

셋째, 미 . 일 외세와 자본 그리고 미국의 철수를 요구하는 반미 자주의 주장이었다. 미국에 전두환 정권에게 개방을 요구했고,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를 요구한 것을 반대하는 지적이다. 이런 내용은 신군부의 광주민중 학살의 배후에 미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생긴 변화이었다.

이와 관련한 구호는 "노동자 피땀 짜는 미제국주의자 몰아내자!" "반미 반제 양키 고홈" "노동자의 철천지 원수 미국놈들 몰아내자" "속지말자 신민당 몰아내자 양키 고홈" "미일외세 몰아내고 민중정권 수립하자"와 "외세압력 물리치고 민족자존 수호하자!"(민통련), "군사독재 조종하고 수입 개방 압력으로 민중생활 파탄시키는 미제국주의 몰아내자!"(인노련), "군사독재 앞장세워 광주민중 학살하고, 노동자 민중 피땀 짜는 미국놈을 몰아내자"(서노련 . 인노련), "광주학살의 교사범 미제국주의 물러가라! 이원집정제 강요하는 미국은 물러가라! 불황 실업 강요하는 미일자본 물러가라! 핵기지 철수하고 작전지휘권 이양하라!"(자민투 . 서노련 . 인노련) 등이었다.

넷째, 노동자는 농산물 개방 반대를 주장했다. 이것은 개방과 이농정책의 고통 때문에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소의 배를 칼로 찌르고 농약을 먹고 죽는"[87] 농민에게 연대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것은 민중생존권 보장과 같은 민중 일반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다.

표1은 노동자 학생 민통련 신민당의 주장 가운데 입장이 일치하는 부문이나 반대되는 부문을 표시한 것이다. 자민투는 미일외세 축출에 적극적이고 직선제 개헌, 삼민헌법 민중권력 쟁취에는 소극적이었다.

신민당은 이원집정제와 직선제 개헌 사이에서 동요했고 노동자 학생 민통련은 시위를 해서 이것을 막으려 했다. 민통련은 직선제 개헌에 적극적인 반면 미일외세 축출에 소극적이고 노동자 민중에게는 생존대책을 세우라는 선에 그쳤다. 노동자는 삼민헌법 민중권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직선제 개헌은 소극적으로 표현했다. 서.인노련과 민민투는 삼반세력을 물리치고 삼민헌법을 제정해 민중권력 창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직선제 개헌과 미일외세 축출에는 소극적이었다. 자민투와 노동자는 미.일외세 축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87) 『한국일보』 1986년 5월 23일.

이런 노동자의 주장은 한국 사회가 담고 있는 현실과 모순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이전에 찾기 어려운 현상으로 주장의 백화제방이었다.

조현연은 5.3시위에서 나온 주장은 이전의 부산이나 대구 광주대회와는 그 성격이나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차이가 ① 그동안 일정한 정치적 연대관계를 맺어오던 보수야당과 민중운동단체들의 시국관과 정치적 지향성이 명백하게 다르다는 사실이 민국련 사건과 4.30타협에 즈음해 명확하게 드러났고, ② 그동안 꾸준하게 성장한 민중운동세력의 역량을 배경으로 한 '민중항쟁의 결정적 계기'가 도래했다는 인식과 함께, ③ 노동자가 40만 명이 넘는 인천지역의 특수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았다.[88]

표1, 5.3시위 참가한 각 단위의 입장

	이원집정제	직선제 개헌	미일외세축출	노동자 농민 생존권	삼민헌법 민중권력
신민당	○	○	×		×
민통련	×	◎	○	○	
서인노 노동	×	○	◎	◎	◎
민민투	×	○	○	◎	◎
자민투	×	○	◎	○	○

◎ : 적극 주장, ○ : 소극 주장, × : 반대

이런 배경에서 인천지역 노동운동이 이후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노동자 사상의 원천 역할을 했다고 본다.

4) 구속노동자의 저항과 가족의 활동

5.3시위 과정에서 모두 400여 명이 연행되고 133명이 구속되었다. 국가보안법, 소요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였다. 민통련 인사연 서.인노련 간부 10여명을 포함해 50명이 수배됐다.[89] 5월 2일에는 서노련 관계자들이 민간인인데도 국군보안사령부에 연행됐다.

학생이 경찰과 대치하고 화염병을 던지면서 많은 수가 연행되면서 구속자 가운데 학생이 가장 많았다. 노동자는 시가행진을 중심으로 시위했기 때문에 연행자도 구속자도 비교적 적었다.

88) 조현연, 앞의 논문, 114쪽.
89)『인천신문』2006년 11월 16일.

5월 5일 현재 연행자 319명 가운데 학생이 129명(구속 90명)으로 가장 많았고 노동자는 근로자 36명(구속 3명) 회사원 11명(구속 3명)[90]에 나중에 노동자로 밝혀진 황언구(무직)을 합쳐 48명이어 전체의 15.0%였다. 노동자는 무직으로 분류한 47명을 세분할 경우 더 늘어날 것이다.

노동자 가운데 구속자는 서노련 김문수(서노련, 3년 징역형), 이춘식(경신공업 해고노동자, 2년 6월), 박병무(이천전기 해고자, 징역 1년 6월), 국승보(운전사, 징역 1년), 강권구(동양피스톤 해고자, 징역 1년), 김영미(신성무역 해고자) 온태희 정창용 심재림 김동범 김재효 정영현 김주행 조은옥(구속 방침) 등이었다. 서노련 관련 구속자는 15명이었다.[91]

그리고 인노련과 인천지역 노동운동 관계자 양승조, 김지선(인노련 사무국장), 김일섭(진도 해고자), 황광우, 양성호(인노련), 이완용, 김중성, 황강희 등이 수배 당했다.

구속된 시위자 일부는 경찰 대공분실에 끌려가 심한 고문을 당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주먹 야구방망이 당구봉 등으로 폭행, 통닭구이, 물고문, 전자봉을 이용한 전기고문, 헤드럭, 성고문 등의 수법으로 고문해 구속자들에게 경찰이 미리 짠 각본에 따라 허위자백하도록 강요했다.

인하대생 이용주는 고문에 못 이겨 민정당 지구당사를 자신이 방화했다고 허위 자백했다.

신민당 개헌추진본부의 「인천사태(고문)보고서(1차)는 인천교도소(소장 강경초)에 수감된 황언구(연세대 졸업, 위장취업 1년 뒤 해고된 노동자, 26세), 박종문(인하대 4년, 22세), 이상명(인하대 4년, 22세), 은태희(신민당 동작구 지구당원, 39세 운송업), 박병무, 한휘석, 왕주연, 전미영(여대생, 석방)의 고문 실태를 조사 보고했다.

전미영에게는 30여세 된 조사관이 조사하면서 바지를 반쯤 벗어 내리고 자기의 팬티를 보여주며 여자의 수치심을 자극해 환멸감에 빠져 모든 것을 묻는 대로 답변하도록 하는 자포자기 심리를 유발했다.[92]

수배자를 찾는 과정에서 부천경찰서가 서울대 여학생 권인숙을 연행했다. 권인숙은 1년 전 부천의 주식회사 성신에 허명숙이라는 가명으로 취업했으나 주민등록증을 위조

90) 『한국일보』 1986년 5월 6일.
91) 5월 27일 구속된 서노련 관련자는 김문수(지도위원) 최한배(집행위원) 노정래(평가위원) 손세환 서혜경 유시주 유인혜 윤혜숙 박정애 송재섭 김진태 이은홍 김순천 이준복 임병주이다.(『한국일보』 1986년 5월 28일)
92) 신민당 개헌추진본부 인천지부, 앞의 보고서, 참조.

했다는 혐의로 부천서에 연행됐다. 부천서에서 문귀동이 권인숙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성고문 했다. 이것은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이 자초한 것으로 권력의 도덕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함께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산층 위주이던 여성운동이 여성노동자를 포함하고 그 내용이 젠더(gender) 문제로 심화했다.[93] 1970, 80년대 여성노동자는 회사에서는 기업주 관리자 자본에게 차별받고 사회에서는 권력의 탄압을 받고 가정에서는 남자 형제를 학교에 보내고 자신을 돈을 벌어 학비를 대는 경우가 허다했다.[94] 이런 여성노동자의 복합적인 열악한 사회적 지위가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났으며 이것은 이후 여성노동운동 발전을 뒷받침했다.

구속자들은 감옥과 법정에서 싸움을 계속했다. 황언구 등 인천교도소에 50여명이 수감됐는데, 그들은 법정과 교도소에서 "노동해방 쟁취하자" "강간 고문 자행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쳐 법정 소란죄를 추가했다. 강릉에서는 권순필 등 7명이 옥중투쟁위원회를 만들었다.[95] 또 5.3시위의 구속자가족협의회와 해고노동자복직투쟁위원회 소속 여성들은 간난 아기를 업고 부천 중부서 등에 가서 성고문 사건에 항의하고 경찰서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항의 과정에서 더러는 유치장에서 구류를 살았다.[96]

3. 5.3시위와 노동자 영역의 구축

5.3시위에서 노동자는 학생 민통련과 함께 보수대연합을 떨치지 못한 신민당의 개헌 현판식을 저지했다.

당일 신민당 지도부는 노동자 학생 민통련의 격렬한 시위와 최루탄 가스 그리고 시위대의 비난 때문에 개헌 현판식을 열지 못했다. 그 뒤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가 미국의 보수대연합안을 수용하여 '선민주화 후내각책임제 협상'을 핵심으로 하는 '이민우 구상'을 추진했지만 1987년 4월 8일 김영삼이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면서 신민당 의원 90명 가운데 74명이 탈당해 통일민주당(약칭 민주당)을 창당하면서 야당 안의 보수대연합 호응은 막을 내리고[97] 직선제 개헌의 방향이 자리 잡았다.[98] 민주세력은 결국

93) 이상록, 「시민을 성폭행하는 민주국가, 대한민국: 1986년 부천서 문귀동 성고문 사건」, 여성사 연구모임 길밖세상, 『20세기 여성 사건사: 근대 여성교육의 시작에서 사이버 페미니즘까지』(서울: 여성신문사, 2001), 237쪽.
94) YH사건에서 희생한 김경숙도 남동생 학비를 댄 경우였다.(전YH노동조합·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YH노동조합사, 서울: 형성사, 1984, 217~218쪽)
95) 인천지역노동자연맹, 「감방에서 타오르는 해방투쟁의 횃불」(1986), 참조.
96) 박육남, 앞의 토론모임.
97) 「제동걸린 '보수대연합'」 『말』 제6호(서울: 민주언론운동협의회, 1986년 5월 20일), 4쪽.
98) 박세길,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3』(서울: 돌베개, 1992), 171~172쪽.

다음해 6월항쟁을 거쳐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다. 이렇게 사태가 진전하기까지 5.3운동에서 노동자 시위의 컸다.

5.3시위에서 노동자는 2천여 명이 조직적으로 참가했다. 노동자 도시라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일반 노동자의 참여도 많았다. 이들이 모인 성격은 5.3이전에 노동조합의 파업과 그에 따른 연대집회에 모였던 노동자들과 달리 민주주의와 사회의 변화를 요구한 점에 차이가 있다. 노동자들이 5.3운동을 통해 조직의 규모와 성격에 비추어 하나의 독자적인 사회운동 영역으로 발돋움했다.

노동자들의 주장은 선진적이었다. 노동자가 주장하는 단결권, 생활임금, 민중생존권, 삼민헌법 등은 5.3이전은 물론 5.3이후에도 노동자에게 필요한 민주주의의, 노동해방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노동자는 국회 내 보수대연합을 통한 개헌이 아닌 '헌법제정 민중회의' 구성을 통한 3민헌법 제정을 목표로 삼았다. 서노련은 이 점을 강조해 5.3시위의 성격을 "5.3인천에서의 삼민헌법쟁취투쟁"으로 규정했다.[99] 이런 노동자의 주장은 이후 민주 자주 통일 노동자 권력이라는 사상이론 형태로 정형화했다.

5.3시위에 참가한 선진노동자가 아닌 다수의 노동자들은 명확한 노동자 의식이 없이 고립되고 노동운동에 관한 견문이 거의 없이 지내다가 화염병은 던지지 않았지만 노동자 시위에 참가했다. 이들은 이 날 시위에서 야당 재야 경찰의 탄압과 언론의 흑색선전을 보면서 공장과 사회에서 자신들이 처한 위치를 좀 더 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뒤 사회과학지식을 접하면서 시야가 넓어졌다. 이들은 이런 변화를 겪으며 1986년 파업 시위,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때 노동자가 과감하게 파업 시위에 참가할 수 있었다.[100]

노동자는 5.3시위에서 선전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의 민중운동단체들이 총집결하다시피 한 5.3시위 현장에 뿌린 선전물은 50여 종 10만 여장을 배포했는데, 인천 서울지역 노동자단체가 10여 종, 민통련 인사연 민청련 등 재야단체가 10여 종, 학생운동 단체가 15종 이상이었다. 시위대는 수백 개의 플래카드와 피켓을 보였다.[101] 이것은 운동단체들이 독재의 언론탄압과 기존 매체가 현실과 떨어지거

99) 서울노동운동연합, 「5·3 인천 민중집회 진상규명에 관하여 신민당에 보내는 '서노련'의 결의」(1986. 5. 26), 참조.
100) 김지선, 앞의 글, 참조.
101) 정동근, 앞의 글, 1쪽.

나 때로는 거짓을 퍼뜨리는 것을 거부하는 각기 자신의 주장을 선전하는 행위였다.

5.3운동에서 노동자 시위대는 미국과 전두환 정권의 유착을 비판하고 미제국주의 타도와 미일자본 축출을 주장했다. 이후 노동운동에서 반미 자주화의 주장은 더 이상 금기가 아니었다. 유성환 의원은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5.3운동에서 나온 반외세자주화의 내용을 지지 옹호하고 국시가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해 국시논쟁을 일으키고 구속됐다.

그러나 5.3시위에서 서 . 인노련이 보여준 시위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5.3시위 집회장에서도 서 . 인노련을 대표한 김문수와 민통련을 대표한 장기표가 공동으로 연좌 집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민통련이 노동자 대오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었으나 노동자들은 그냥 지나쳤다. 이는 5.3시위에서 노동자 학생 시민의 연대 행동을 거부하는 행위였다.[102)]

5.3시위에서 노동자들은 위에서 말한 특징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보수야당과 다르며 민통련과 같은 기존의 재야와 차이가 있으며 노동 현실의 당면 요구와 정치적 과제를 제기하며 또 수적으로 독자의 조직을 갖추면서 노동운동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사회운동 영역을 구축했다. 이것이 5.3운동에서 노동자가 한 역할의 역사적 의미이다.

IV 5.3운동이 1980년대 후반 노동운동에게 미친 영향

1. 인노련의 조직 운영과 영향

인노련은 대중정치조직을 표방하고 공개 비공개 이원조직 체계를 구성했다.

서.인노련은 대중정치조직(MPO)을 표방했다. 이 노선은 민중생존권과 민중의 정치세력화의 주장에 중점을 두었다. 노동조합과 같은 대중조직에 대해 노동자 정치를 강조하는 정치주의 경향을 띠었다.

인노련의 조직은 공개조직, 해고자투쟁위원회, 현장조직의 3개 틀로 구성했다.

공개조직인 인노련은 위원장과 조직 홍보 등 실무부서로 구성했다. 대표는 대외적으

102) 앞의 토론모임.

로 공개했다. 비공개 지도부인 '안개'라고 부른 일종의 전위조직이 조직 지도를 담당했다.

현장조직은 주안 부평 하인천 3개 지구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의도에서 짠 체계이다. 노동운동이 현장에 뿌리를 두고 경제투쟁도 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했다.

해고자투쟁위원회(해투위)는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노동자로 구성해 해고자의 복직 뿐만 아니라 합동생활을 하며 언제라도 사업장 투쟁 지원과 시위에 나갈 수 있도록 대비한 상시 투쟁체였다. 해투위는 4~6명이 조를 이룬 8개조로 구성했다.[103]

먼저 인노련의 조직운영은 선진노동자와 현장 노동자가 상호 침투하는 상을 설정했지만, 실제는 하향식으로 일방적으로 지도 피지도 관계가 기계적으로 작용했다.

이것은 서인노련과 노동조합 사이에도 나타났다. 정치투쟁 위주의 조직운영은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조직을 경시하는 풍조를 낳아 정치투쟁을 위해 노동조합 조직 자체를 붕괴시켜도 좋다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생겨났다.[104] 더구나 경제투쟁의 독자적 의의와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제투쟁을 정치투쟁을 하기 위한 계기만으로 협소화 시켜 스스로 대중과 고립되는 정치주의 편향을 드러냈다.

다음으로 공개조직과 비공개 지도조직의 이원화는 노동운동을 극심하게 탄압하는 상황에서 조직의 보위를 고려한 조직방식이다. 그 전제는 이원 조직 상호간에 의견을 수렴하고 비상한 상황에서 비공개 지도 조직이 공개 조직을 지도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전제이다. 그런 실제에서는 이런 여건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했다.

인노련에서 활동은 인노련의 이름으로 이뤄지지만 사실 비공개 지도부가 이미 결정해 공개지도부에 전달하고 관철하는 방식으로 전개했다. 공개 지도부에서 토론과 설득을 해 무슨 결정을 하면 비공개 지도부의 방침이라고 해서 다음 회의에서 내용을 바꾸는 일이 있었다. 양측 모두 다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춰 공개지도부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 성과주의와 결합할 때 더욱 심각했다.[105]

이런 조직형식주의는 조직운영에서 지도부는 개인주의에 빠져 있으면서 조직원 개개인에게는 운동의 주체가 아닌 수단으로 파악해 수동화시키는 전체주의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조직내 민주주의는 실종하고 복종이 미덕이 되었으며 분파주의와 관료주의가 만연했다는 평가다.[106]

---

103) 정동근의 증언, 2007년 1월 16일, 인천.
104) 전태일 기념사업회, 『한국노동운동 20년의 결산과 전망』(서울: 세계, 1991), 90쪽.
105) 김지선, 앞의 글, 참조.

또 서 . 인노련의 조직운영은 선도투쟁을 하는 조건과 맞물렸다. 노동운동의 전개과정에서 피아간에 모순이 첨예해질수록 탄압은 강해지고 또 다음 단계로 나가려면 희생이 불가피하다. 서 . 인노련이 무리한 선도투쟁을 해서 "대중과 떨어진 투쟁"[107]이었고, 탄압의 빌미를 주고 공안정국을 초래했다는 이우재의 지적[108]은 5.3시위 자체만 본다면 일리가 있지만 노동운동 민중운동의 발전을 고려하면 일면적인 평가다.

마찬가지로 선도투가 대중과 결합하지 못하고 공안정국을 앞당긴 측면은 있겠지만, 공안정국은 성장한 노동자의 요구와 이를 수용하는데 한계를 가진 정권의 정치 경제정책이 극단적으로 충돌하면서 조성된 배경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서 . 인노련의 조직운영에서 나타난 문제는 역설적으로 지도와 대중의 결합이라는 원칙을 확인했다. 이후 노동운동에서 민주성과 지도성을, 정치적 변혁적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노동자 일반의 상호침투와 협력을 고민하게 했다. 이런 바탕위에 노동조합의 전국조직을 결성하고 노동자의 정치를 추진하고 또 1989년 동유럽의 현실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노동운동 안에서 전위라는 조직 방식을 거의 사라지고 선진노동자와 노동자 대중의 구분이 나타났다.

5.3시위가 끝나고 공안정국 아래 서.인노련이 대대적인 탄압을 받으면서 서.인노련 조직과 운영방식이 비판받았다. 서.인노련의 정치노선은 민족해방 민중민주의 양측에서 비판받았고 또 지도부의 검거가 맞물려 1986년 말 해산했다.

5.3운동 이후 인노련과 5.3시위를 거치며 성장한 인천지역의 선진노동자들은 이전에 나타난 조직사상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며 선진노동자 조직을 발전시켰다.

먼저 선진노동자의 조직은, PD계는 인천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정태윤 등), NL계는 인천부천노동자회(안재환 고남석 등) 그리고 인천노동자해방동맹(사회주의 표방, 김건호 등) 비공개 조직으로 분화했다.

PD계 활동가들이 소련의 1985년 페레스트로이카의 개혁 개방 정책 이후 사회주의혁명의 전망을 상당히 잃고 동요했다. 전위조직을 주장하던 급진 활동가들이 더 그랬는데 상당수가 전위조직론을 청산하고 의회주의로 선회했다.

106)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대전집 -경제개발기의 노동운동/1961~1987』(서울: 지식마당, 2004), 730~731쪽.
107) 김지선, 앞의 글, 참조.
108) 이우재, 앞의 글, 18쪽.

인민노련에서 나온 민족민주주의(NL)계가 인천부천노동자회를 조직했다.

그리고 인민노련, 인부노회, 해고자복직협의회(해협), 인천노동자해방동맹, 한노협 인천지부, JOC 등은 다시 선진노동자 조직의 협의체인 인천노동운동단체협의회 그리고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를 구성했다.

노동자 대중조직과 관련해, 5.3시위 현장에서 나와 시위대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노동자 학생 재야, 야당의 모습, 정부와 경찰 공권력 행사, 그것을 보도하는 제도언론의 모습을 한눈에 보았다. 이들은 이제까지 생산 현장에서 보았던 기업 자본의 모습에 이것들을 더하면서 크게 각성했다. 계급 조직 단결의 사상 등이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각성과 힘을 바탕으로 지역 조직과 전국 조직을 추진했다. 노조는 노동자 대항쟁 때 파업 농성 시위 등을 경험한 3,700여 노조 가운데 자주성이 강한 민주노조가 나왔다. 이것이 인천지역노조협의회 등 지역노조협의회를 조직하고 모여 전국노동조합협의회(1990)을 결성했다.

2. 노동자의 사상, 투쟁, 연대에 미친 영향

첫째 노동자 사상에 미친 영향이다.

서노련과 인노련은 사상노선으로 민족 민주 민중의 삼민을 표방했다. 손문의 민족 민권 민생의 삼민주의의 형식을 따왔다고 한다. 삼민에서 민족과 민중은 주체이고 민주는 목표를 표현했다.[109)]

그러나 인노련에 뒤늦게 합류한 민족민주주의(NL)계는 삼민노선이 민중민주의(PD) 중심의 노선이며 민족자주의 문제는 경시하며 그 원인은 삼민의 민족이 목적과 주체를 혼동했기 때문이라며 노선 폐기를 주장했다.[110)]

한편 5.3운동에서 서인노련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제기한 주장은 민중민주주의의 문제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미국이 이원집정제를 추진해 민주주의가 지연되며 미일자본의 압력으로 농민의 고통과 노동자의 실업이 증가한다며 민생문제와 미국 미군 제국주의의 축출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구호와 행동을 통해 보여주었다. 물론 5.3운동에 앞서 광주민중항쟁에서 미국과 민족자주의 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냈다.

109) 정동근의 증언, 2007년 1월 16일, 인천.
110) 정동근의 증언, 2007년 1월 16일, 인천.

인노련 내부에서 삼민노선에 민족자주의 문제를 더할 것을 비판적으로 요구했는데, 이것은 이미 5.3시위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선행한 것을 조직 내부에 체화하려는 문제 제기였다.

이런 이유와 공안 탄압 때문에 서노련과 인노련은 해산했지만, 이후 1987년 대변혁을 거치면서 민중운동의 사상은 민주 자주 통일 민중의 사상으로 정형화했다. 그리고 이것은 전민련, 전국연합, 진보정당에서 사상이론의 내용을 구성했다.

이런 점에서 서인노련의 삼민 노선을 민중문제의 본질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 5.3운동을 통해 민족자주의 문제와 합류하면서 이후 민중운동에서 사상이론을 한층 발전시킨 점에 의의가 있다.[111]

둘째 노동자의 투쟁에 미친 영향이다.

5.3시위를 겪은 노동자 선진노동자들은 정치투쟁은 노동자 대중의 생존권 투쟁과 함께 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비판적 경험을 얻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지만 5.3운동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으로 각성하고 성장한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이후 인천지역 투쟁에서 주축 역할을 했다.

1986년 하반기에서 1987년 전반기에 노동자 투쟁이 활발했다. 사업장에서는 합법적인 파업이 어려워 비합법 파업이 많았고, 또 노동자의 단결권을 요구하고 탄압 중지를 요구하는 집회와 거리 시위가 자주 일어났다.

6월 민주항쟁에서 교사 사무직 노동자 등의 '넥타이 부대'의 등장을 강조하지만, 시위의 기본 동력은 블루칼라 노동자들과 학생이 제공했다. 인천지역에서도 5.3운동을 겪은 노동자들이 6월 민주항쟁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때도 마찬가지였다. 5.3운동을 겪은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파업 임금인상 투쟁 노조 결성을 이끌고, 다른 사업장 투쟁과 노조 결성을 지원하고, 대중 집회와 시위를 조직했다. 특히 많은 사업장에서 어용노조 민주화의 요구가 나왔는데 이를 뒷받침했다. 이렇게 해 조합원의 뜻을 반영하는 민주적 집행부를 탄생시킨 노조와 신규 노조 가운데 민주노조를 만들고 인천지역노조협의회를 조직하도록 지원했

111) 그런데 5·3운동에서 노동자가 선도투를 하며 학생 재야를 넘어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던 것과 비슷한 행동양식을 현재 산업노동자 중심의 조합주의에서 발견한다. 이런 행동양식의 원인이 맑시즘에서 말하는 프롤레타리아가 19세기 초 맑스 시대의 주력이 산업노동자인 점을 현대 사회에 직접 대입해 사고하는 데서 왔으며, 이것은 잉여가치를 1,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식물도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데서 비롯한다.(김영곤, 『노동의 역사 노동의 미래』, 서울: 선인, 2006, 46쪽)

다.

이렇게 인천지역 노동자들은 5.3운동을 겪으며 외적으로 대대적인 탄압을 받고 내적으로는 조직 내부의 대중, 노동 현장의 대중 사이에서 괴리감을 겪은 선진노동자들이 1986년 하반기~1987년 상반기 노동자 투쟁, 1987년 6월민주항쟁, 노동자 대투쟁을 겪으며 극복했다.[112)]

셋째, 노동자 민중의 연대에 미친 영향이다.

5.3운동에서 노동자는 노선을 같이하는 학생들과 연대했으나 민통련과는 원천적으로 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자는 구호와 선전물에서 농민 빈민과 연대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5.3운동 당시 이미 영국의 대처리즘이나 미국의 레이거니즘과 같이 초기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이 일으킨 농민 문제와 사양산업의 퇴출이 실업자를 발생시켰다. 서노련은「노동자 . 농민 하나 되어 농축산물 수입개방 저지하자!」라는 선전물에서 "홍수처럼 밀려드는 미국소와 미국쌀, 고추, 양파" 때문에 "똥값된 농산물이, 공장에 돈벌러간 자식들 임금 낮추는 구실이 되니 얼마나 기막힌 노릇인가!"[113)]하며 노동자 농민이 연대해야 할 근거를 지적했다.

그렇지만 시위 현장에서 민통련 노동자 학생은 따로따로 행동해 시위는 혼란스러웠고 이를 막으려고 서노련과 민통련 사이에 공동 연좌집회를 하기로 합의했다. 비록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이런 합의는 민중 내부에서 연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했음을 말한다.

Ⅴ 결론

5.3시위에 조직적으로 참여한 노동자는 2천여 명으로 조직 참여 시위대 1만 명의 20%를 차지해 노동운동의 새로운 기원을 열었다.

노동자는 5.3시위에 참여해 신민당에게 미국과 전두환 정권이 추진하는 이원집정제를 거부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민추협의 김영삼 김대중이 민주당을 결성하고 직선제 개헌의 방향을 분명하게 하는데 기여했다.

---

112) 정동근의 증언, 2007년 1월 16일, 인천.
113) 서울노동운동연합, 「노동자·농민 하나되어 농축산물 수입개방 저지하자」(1986), 참조.

5.3시위에서 노동자들은 광주의 배후이면서 농축산물 개방을 강요하고 의사 문민화를 요구하는 미국을 비판하고 미군과 미국의 철수를 주장했다. 이것은 반미 문제를 공론화하고 자주의 문제를 노동자 농민 등의 민생문제와 결합한 것이다. 이것은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쳐 유성환 의원은 국회에서 국시를 반공이 아니라 통일로 해야한다는 주장해 국시논쟁을 일으켰다.

5.3시위와 관련해 일어난 부천경찰서의 권인숙 성고문 사건은 젠더문제로 심화해, 여성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공론화하고 여성운동, 여성노동자운동의 방향을 제기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문제와 관련해 임금인상, 8시간 노동제 확립, 생활임금 보장과 같은 경제적 요구와 아울러 민중생존권 보장, 삼민헌법, 민중권력과 같은 노동해방의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5.3시위 과정에서도 선도투를 주장하며 노학연대를 넘는 연대 시위를 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5.3운동에서 노동자 시위를 주도한 서 . 인노련은 정치적 대중노선을 표방해 정치노선에서 민중민주주의 일변도이고 민족자주문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내부평가를 받았다. 또 선도투는 선진노동자의 정치투쟁을 통해 대중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키고 대중을 정치투쟁에 참여시키겠다는 취지와 달리 급진주의적 편향으로 대중과 괴리되면서 계급투쟁의 한 기둥인 경제투쟁의 독자적 의의를 부정했다.[114] 공개 비공개의 이원조직은 극심한 탄압 상황에 대처해 구성했지만 조직의 내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민주집중제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내부 평가를 받았다. 인노련은 공안 탄압이 겹쳐 간부 다수가 구속 수배되면서 해산했다.

그러나 인노련을 비롯해 5.3운동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은 5.3운동에서 나타난 문제를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시켰다. 그들은 인천지역에서 6월 민주항쟁과 87년 노동자 대투쟁 때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둘째, 현재 노조운동과 진보정당은 5.3운동 이후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의 자양분을 흡수해 현재의 지점에 이르렀다.

현재 노조운동은 정규직 남성 대기업 조직노동자를 중심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점에서 비판받는다. 비정규 노동자, 여성노동자, 3D 업종의 이주노동자, 도시빈민 일

114) 김장한 외, 앞의 책, 106쪽.

용노동자, 빈농 가족농, 생태환경 피해자, 소수자 등은 아예 노동조합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5.3운동 이후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며 형성한 노동계급의 개념이 이제 현실에서 존재하는 지 의문이다. 마찬가지로 세계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노동자 국제주의도 소홀히 한다.

진보정당도 이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진보정당은 대중이 겪는 고통을 보면 그 문제에 개입하기에 앞서 그것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냐를 먼저 따진다.

5.3운동에서 노동자들은 극심한 탄압과 현장 노동자의 조직 사상 투쟁의 준비가 아직 미숙했지만, 노동 현장 문제의 해결, 민중생존권과 민중 헌법, 민중권력의 문제를 제기했다. 물론 이중조직, 선도투, 일방적 지도라는 문제를 낳았다. 그러나 현재에는 이런 과감한 문제 제기를 노동운동이나 진보정당 운동에서 찾기 어렵다.

이런 5.3운동에서 노동자가 보여준 조희연이 말하는 급진적 민주주의의 저항은 현 시점에서 소외된 노동자 민중이 재현할 가치가 있다.[115]

셋째, 부마항쟁, 광주민중항쟁, 인천5.3민주화운동, 87년 6월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연계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부마항쟁은 실업자가 다수 참가하고, 광주민중항쟁은 선진노동자가 최후의 지도부를 담당했고,[116] 인천은 오랜 노동운동의 전통이 뒷받침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1980년대에 일어난 민주화-노동운동-민중운동-민족자주화운동의 시계열의 완성하고, 5.3운동에서 보인 노동자의 역할에 전국적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끝>

<참고문헌>

■ 사료

서울노동운동연합, 「노동자·농민 하나되어 농축산물 수입개방 저지하자」(1986).

서울노동운동연합, 「5·3 인천 민중집회 진상규명에 관하여 신민당에 보내는 '서노련'의 결의」(1986. 5. 26).

서울노동운동연합·인천지역노동자연맹, 「일천만 노동자의 손으로 군사독재정권 타도하고 삼민헌법 쟁취하자!」(1986. 5. 3).

인천지역노동자연맹, 「감방에서 타오르는 해방투쟁의 횃불」(1986).

115) 조희연, 앞의 논문, 16쪽.

116) 김영곤, 『한국노동사와 미래』 제2권(서울: 선인, 2005), 258~259쪽.

「제동걸린 '보수대연합'」 『말』 제6호(서울: 민주언론운동협의회, 1986년 5월 20일)
필자미상, 「5·3 인천 유인물 분석」(1986).

■ 논문, 단행본
김영곤, 『노동의 역사 노동의 미래』(서울: 선인, 2006).
김영곤, 『한국노동사와 미래』 제2권(서울: 선인, 2005).
김지선, 「80년대 초반의 노동운동과 5·3인천항쟁」『이론과 실천』 2002년 6월호(서울: 민주노동당).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다시보는 5·3인천항쟁』(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박세길,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3』(서울: 돌베개, 1992).
방현석, 「인천 5·3항쟁 1986년 5월」 『아름다운 저항』(서울: 일하는 사람들의 작은 책, 1999).
신민당 개헌추진본부 인천지부, 「인천사태(고문)보고서(1차)」(인천: 1986. 6. 13).
5·3민주화운동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최 토론회 자료집, 『5·3운동의 역사적 재조명』(인천: 2003. 5. 2).
윤덕한, 「전두환 정권하의 언론」『한국언론 바로보기 100년』(서울: 다섯수레, 2000).
이상록, 「시민을 성폭행하는 민주국가, 대한민국: 1986년 부천서 문귀동 성고문 사건」, 여성사연구모임 길밖세상, 『20세기 여성 사건사: 근대 여성교육의 시작에서 사이버 페미니즘까지』(서울: 여성신문사, 2001).
이우재, 「5·3인천사태를 돌아보며」『5·3운동의 역사적 재조명』(인천: 5·3민주화운동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최 토론회, 2003. 5. 2).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대전집 -경제개발기의 노동운동/1961~1987』(서울: 지식마당, 2004), 730~731쪽.
인천광역시사 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사』 제4권(인천: 인천광역시, 2002. 8).
전YH노동조합·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YH노동조합사』(서울: 형성사, 1984).
전태일 기념사업회, 『한국노동운동 20년의 결산과 전망』(서울: 세계, 1991).
정동근, 「5·3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립을 위하여」(인천: 2004).
조현연, 「한국정치변동의 동학과 민중운동: 1980년에서 1987년까지」(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2).
조희연, 「5·3인천사태와 급진적 민주주의」『5·3운동의 역사적 재조명』(인천: 5·3민주화운동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최 토론회, 2003. 5. 2).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서울: 역사비평사, 1992).

한글 초록

1986년 5월 3일 노동자도시 인천에서 일어난 5·3민주화운동(5·3운동)은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의의가 큰 사건이다.

산업화 이래 성장한 노동자계급은 1980년대 초 생활임금 단결권 등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며 이를 단결권 제한과 폭력으로 막으려는 정부 자본과 대우자동차파업이나 구로지역 노동자 연대 파업에서 보듯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전두환 정권이 미국과 자본의 문민화전략과 맞물려 이원집정제의 의사문민화를 추진하고 신민당은 보수대연합과 직선제 개헌 사이에서 동요하며 개헌추진위원회 인천지부 현판식을 계획했다. 노동운동 학생운동 재야는 이 현판식을 계기로 직선제 개헌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자신의 주장을 펼치려고 조직역량을 총동원했다.

이 5·3시위에서 참가자 5만명 가운데 1만 명이 조직 대중이고 그 가운데 2천명이 수도권에서 모인 노동자였다. 이들은 독재반대, 생활임금 쟁취, 단결권 보장, 민중(삼민)헌법 제정을 요구 주장했다. 이런 노동자의 역할은 조직으로 1946년 9월 총파업 이후 최대의 참가이며, 이후 노동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큰 사건이었다.

이를 주도한 서·인노련은 선도투쟁을 강조한 나머지 대중과 함께 가는 것을 간과하고 정부 경찰이 탄압이 겹쳐 해산했다. 그러나 5·3운동이 제기한 민주주의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직선제 개헌 쟁취로, 노동자 권리는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크게 진전했다. 5·3운동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노동자들이 이 두 투쟁에서 중심 역할을 했다.

5·3운동에서 노동자가 보여준 진취적인 모습은 조합원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다수의 노동자 민중이 겪는 고통을 자신의 문제로 삼지 않는 현재의 노동운동이 배울만한 가치가 있다.

Abstract

The May 3rd Democratization Movement at Incheon and Workers' Role by Kim Youngkon

The May 3rd Democratization Movement at Incheon organized in 1986 is great movement of the history of Korean labor movement.

The Korean working class who grown during the era of industrialization wanted the living wages, the right to unite and organized the strikes at Daewoo Motor Co. and Kuro Industrial complex.

At this time the Jeon Doowhan government promoted the dualistic cabinet system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with the want of the America and the capital. But the oppositional Sinmindang Party scheduled a plate hanging ceremony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to elect president directly in Incheon City.

Also the workers, students, democratic civil movement planned big rally at this time to tighten the way of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o say their own slogan.
50 thousands people gathered at this rally. The 2 thousands workers were pre-organized and they were 20% of pre-organized 10 thousands demonstrators.
They are came from the Incheon City and near Seoul Metropolitan urban area.
The workers took rally and shouted "Democracy!" "Anti-Dictatorship!" "Anti- America!" and "Living Wages!" "Rights to Unite!" "Establish the constitution for people!"
By the organizational viewpoint this was the greatest accident after Korean War.
This worker's rally was hosted by the Seoul Labor Movement Federation & the Incheon Democratic Workers Confederation. But they neglected the people's line and oppressed by government, so disorganized after the 5·3 movement.

After then the people won the democracy and constitution at the Democratic Revoke of June 1987 and elected the president by direct vote of people. The rights of workers developed at the Great Workers' Strike 1987.
And widened the stream of anti-America. Sexual harassment to the woman student Miss. Kwon Insook by police made the women's movement closed to gender issue.
The progressive attitude shown by the 5·3 Movement will be good discipline for the nowadays labor movement who went the way of economic benefit-oriented unionism and neglected the living of working class & workers' internationalism.

주제어
5·3인천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노동조합, 서노련, 인노련, 생활임금, 삼민헌법, 직선제개헌, 반미자주화, 젠더.

Keyword
May 3rd Democratization Movement in Incheon, labor movement, trade union, Seoul Labor Movement Federation, Incheon Democratic Workers Confederation, living wages, constitution for people, constitutional amendment to elect president directly, independent by anti-America, gender.<끝>

부록

사료[117]

「감방에서 타오르는 해방투쟁의 횃불」(인천지역노동자연맹, 1986)
「고문 폭력정권 타도를 위한 인천지역 민중투쟁대회(1986.7.7)」 안내 선전물.
「광주학살원흉 군부** * 제국주의 처* 및 헌법제정민중회의 쟁취를 위한 ******에 부쳐」(전국반제반파쇼민족민주학생연맹, 반제반파쇼노동자투쟁위원회, 서울노동운동연합, 인천지역노동자연맹, 인천기독노동자연맹, 1986. 5. 3).
「노동자·농민 하나되어 농축산물 수입개방 저지하자!」(서울노동운동연합, 1986).
「노동자신문」(서울노동운동연합, 1986. 8).
「노동자의 피에 굶주린 살인정권의 만행을 보라!」(인천지역노동자연맹, 1986).
「노동자의 투쟁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어라!」(한국노협인천지역협의회, 인천사회운동연합, 한국노동선교협의회, 기독교청년협의회 카톨릭학생청년연합회, 1985. 10. 18).
『다시보는 5·3인천항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민주화는 민족의 비극을 치유하는 오직 한 길입니다」(천주교인천교구사제단, 1986. 5. 15).
「민주·통일민중운동선언」(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1985. 5. 10).
「박살내자! 노동자를 구속·고문·강간하는 군부독재 정권을! 천만노동자의 조직적 단결과 투쟁으로」(인천지역노동자연맹, 1986).
「보라! 군사독재정권의 폭력적 만행을!」(인천지역노동자연맹, 1986).
「삼반정권 타도하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새세상을 만들자!」(인천지역노동자연맹, 1987. 5. 3).
「서노에 대한 역사적 평가」(필자미상, 1986).
「서문 -5·3투쟁을 생각하며」(필자미상, 1986).
「서울노동운동연합 창립선언」(1985. 8. 25).
「성명서」(한국기독교노동선교협의회, 1986. 2. 26).
「어둠의 땅을 밝히는 청년들」『국민운동전남본부신문』(전남민주주의청년연합회, 1988. 4).
「예속군부독재의 장기집권음모 분쇄투쟁에 총집결하자!」(장기집권음모 분쇄를 위한 인천지역공동대책위원회, 1986. 11. 24).
「5·3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립을 위하여」(정동근, 2004).
「5·3인천민중집회 진상규명에 관항 신민당에 보내는 서노련의 결의」(서울노동운동연합, 1986. 5. 26).
「'5·3인천민중항쟁'을 왜곡하지 말라」(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1986. 5. 19).
「5·3인천시위 구속자 가족의 호소문」(1986. 6. 12).
「5·3인천유인물 분석」(필자미상, 1986).
「5·3인천투쟁을 운동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한다」(필자미상, 1986).
「우리는 왜 미문화원에 들어가야만 했나」(전국학생총연합 광주학살원흉처단투쟁위원회, 1985. 5. 23).

117) 사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http://saryo.kdemocracy.or.kr/kh_pic/main.jsp)의 소장 자료를 기초 자료로 삼았다.

「6월 연대투쟁 계승 및 서노련탄압규탄대회」 자료집(6월연대투쟁동지회 서울노동운동연합 인천지역노동자연합, 1986. 6. 29).
「2003 인천지역 민족민주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 자료집(2003. 4. 28).
「인노련의 상반기 활동평가 보고서」(1986).
「인천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정관」(2005. 11. 3).
「인천사태 (고문) 보고서(1차)」(신한민주당 개헌추진본부 인천지부, 1986. 6. 13).
「인천지역 노동조합 운동 개괄」(필자미상, 1992).
「일천만 노동자의 손으로 군사독재정권 타도하고 삼민헌법 쟁취하자」(서울노동운동연합·인천지역노동자연맹, 1986. 5. 1).
「전국반제반파쇼민족민주학생연맹 투쟁선언 –전국반제반파쇼민족민주학생연맹 창립에 부처」(1986. 4. 29).
「집결하자! 장기집권 저지 민주연합전선으로...」(인천지역노동자연맹, 1986. 4).
「85년 인천지역 노동운동 평가와 인노협의 자기비판」(인천지역노동자협의회, 1985).
「투쟁속보」(인천지역기독노동자연맹, 노동자권익실현투쟁위원회, 1986. 4. 8).
「화보특집 민중의 소리」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1986. 5. 10).

표1, 1980~1990년대 인천지역 경제활동인구 추이(단위: 천명, %)

■표1	인구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1980	1,084	739	391	328	64	52.9	16.4
1981	1,142	734	345	329	16	47.0	4.8
1982	1,180	-	377	341	36	-	9.5
1983	1,220	837	408	382	26	48.7	6.4
1984	1,295	-	426	401	25	-	5.7
1985	1,387	916	423	394	29	46.2	5.6
1986	1,441	999	519	492	27	52.0	5.2
1989	1,754	1,194	713	693	20	59.7	2.8
1990	1,818	1,262	763	742	22	60.5	2.9

자료: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경제활동인구연보』, 『인구주택총조사』, 『고용구조특별조사』 각 연도판 및 인천광역시, 『시정연보』, 『인천경제백서』, 각연도판. 인천광역시사 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사』 제4권[인천: 인천광역시, 2002. 8], 585쪽에서 재인용.

표2, 연도별 전국과 인천지역의 노동자 파업

■표2	전국	수도권	인천	인천 지역
	쟁의건수	주요 투쟁 파업	쟁의건수	주요 투쟁 파업
1978	102	해고노동자 기독교방송국 점거사건	미상	동일방직 사건
1979	109	YH사건, 부마항쟁, 해태제과 8시간노동쟁취	미상	
1980	407	광주민중항쟁, 청피 단협 갱신, 금속노련 민주화	26	동국제강 파업, 동일방직해고자 복직투쟁
1981	186	청피노조 아프리사무실 점거	7	반도상사노조 강제해산
1982	88	콘트롤데이타, 원풍모방 민주노조 지키기	(8)	
1983	98	블랙리스트 철폐투쟁	(9)	블랙리스트 철폐투쟁(동일방직 세창물산)
1984	113	청계피복노조 복구대회, 노협의 노동법개정 청원, 대구 택시 시위	()[118]	블랙리스트 철폐투쟁
1985	265	구로지역 동맹파업(6.23)	23	대우자동차파업(4.16)
1986	276	서노련 탄압, 모세미용실 점거 농성(3.19), 한국노협 노동운동탄압 저지 최저임금 쟁취대회(3.10), 신흥정밀 박영진 분신자살(3.17), 구로인천지역해고자 전태일기념관 농성(3.22), 전국노동자임투위 대회(4.13)	33	한신여객(1.17), 영남개발(1.22), 이성전자(1.27), 미성통상(부천), 86임투전진대회(3.10), 경원기계(3.11 부천), 하인벨(3.15), 서.인노련 주안공단 시위(3.24), 남일금속(4.7), 한양공영 파업(4.8), 해고자 부평역 집회(4.12), 삼익악기 김동배 박진희 등 구속(4.12), 인하대교수 시국선언(4.23), 삼한택시 변형진 분신사망(5.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분기별 노동동향 분석』, 1989, 3/4분기, 제3권 제1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서울: 현장에서 미래를, 2001).

■표3[119]	전국 수도권	인천 지역
1980 이전	JOC(1967) 영등포산업선교회 민주노조	인천도시산업선교회(1966) JOC인천지부
1980 ~ 1983	학생의 노동현장 투신	대학생의 공장 투신, 소모임
1984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3.10) 청계피복노조 복구	인천지역노동자복지협의회(11) 인천사회운동연합(11. 19)
1985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노투, 4.10) 구로지역노조민주화추진연합(구민연, 6.1) 서울노동자연대투쟁연합(7.23) 안양지역노동3권쟁취위원회(안양3권위) 안양노동상담소(6.10) 안산지역노동자권익투쟁위원회(안산권익투) 성남생존권확보투쟁위원회(8.15) 청계피복노조,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구로지역노조민주화추진연합, 서울노동자연대투쟁연합⇒ 서울노동운동연합(8. 25)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3)	인천기독노동자연맹(12) 인천 노동3권쟁취위원회(9.7)
1986		인천지역노동자복지협의회가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와 관계 정리 인천지역노동자복지협의회, 노동3권쟁취위원회⇒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 2. 7)

119) 표3, 노동자 조직의 변화와 민중연대조직
자료: 김장한 외, 앞의 책; 한국민주노동자연합 엮음, 『19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사』(서울: 동녘, 1994); 이목희, 『한국 노동운동의 대중적 기초와 진로』(서울: 풀빛, 1996); 이원보, 앞의 책) 등을 근거로 작성.

■표4 120)	신민당	민통련 인사연	노동자	학생	시위대수	정부경찰언론
5.3 이전	개헌현판식 서울(3.11) 부산(3.23) 광주(3.23) 대구(4.5) 대전(4.19)	민국련 탈퇴(5.1)	전국노동자임투위 대회(4.16) 삼한택시 변형진 분신자살(5.1)	서울대생 김세진 이재호 분신(4.28)		
11:00	김영삼 인천도착	주안1동성당 결집	주안역 결집	주안역 결집	3천명	경찰 2천명 배치
12:00			주안역서 200명 출발 시민회관 앞 도로에 나섬		시위대2천명	
12:40		주안1동 성당서 500명 나오며 시위 시작 민주화촉진인천시민대회 개최	서.인노련 삼반정권타도 및 삼민헌법 쟁취 실천대회 개최	5천명 합세		
13:00		석바위 귀빈예식장 방향에서 경찰과 대치선 형성			5만명	
13:20		시위대 민정당사 진입 시도, 민정당사 불타				1천명 최루탄 발사하며 공격
14:00	김영삼 시민회관 도착, 현판식 무산, 신민당사로 퇴각	시위대 1만여명, 개헌현판식을 반대하며 5시 반 신민당의 대회 연기 선언까지 주안지역서 시위			5만명	
14:30		민통련 서.인노련 공동집회 합의하나 집회는 무산				
15:30		성조기와 군사독재 화형식 개최 시위대, 경찰 100여명 체포, 경찰트럭 태움				경찰 1만명 주안역쪽으로 공격
17:00		시위대, 주안역 쪽으로 이동, 제물포서 산발 시위				주안4거리 시위 진압
17:45	현판식 연기 선언	시위대, 주안역 앞으로 퇴각, 동인천 제물포 바양으로 시가행진				
18:00		시위대, 주안역 구내로 퇴각				경찰, 최루탄 공격
19:00		제물포, 동인천역 앞(연좌), 용덕마루 화평교 축현초교 주안 5,6공단 시위				시위대와 투석전. 언론 흑색선전 시작
23:00		동인천 제물포 도화동 시위 종료				
5.5		민통련 인사연 인천노복 서.인노련 간부 10여명 수배, 총 400여명 연행, 133명 구속, 50명 수배				
5.6						
이후	유성환 국시논쟁(10.14)			권인숙 연행(6.4)		

120) 표4, 5·3운동의 시간대별 진행 상황
자료: 양재덕 정동근 박육남 정한식 최성곤의 증언(2006년 10월 25일, 인천에서); 정동근, 「5·3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립을 위하여」(인천: 200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다시보는 5·3인천항쟁』(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삼반정권 타도하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새세상을 만들자!」(인천지역노동자연맹, 1987. 5. 3); 김지선, 「80년대 초

■ 표5[121]	전국 수도권	인천(조직원수)	시위참석자수	주장	전술
야당	신민당		2천여명(비조직대오 포함)	★	개헌현판식(무산)
재야	민통련(지역협, 민청련 참석)	인사연	민통련 인사연 100여명, 기타 사회운동단체 포함 1천여명	직선제개헌, 신민당 각성, 보수대타협 분쇄, 민주정부 수립	무기한농성 계획 주안사거리 연좌농성
노동	서노련	인노련(4개 지구) 주안지구 3, 4백명 부평지구 2백여명	인노련 1천명 JOC 인천기독노동자, 수도권 노동자계 2천여명	군사독재타도 민중생존권 확보 삼민헌법 쟁취 민중정권수립	주안일대에서 시가행진, 전투조
	한국노협				
		JOC 기노련			
학생	민민투		4천여명	미일외세축출 군부파쇼타도 민중헌법쟁취	전투조 시가행진
	자민투				
소계			1만여명(기타 포함)		
일반시민			4만여명		지켜봄 시위 참여
계			5만여명		

반의 노동운동과 5·3인천항쟁」『이론과 실천』(2002년 6월호); 방현석, 앞의 책, 99~109쪽 등을 바탕으로 작성.

121) 표5, 5·3시위의 참가 단위별 참가자수 주장 전술

자료: 표4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5·3운동 관련 일지

1980. 05. 광주민중항쟁
1982. 03.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1982. 11. 원풍모방노동조합 해체
1984. 09. 민청련 결성
1984. 03.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창립
1984. 09. 함평·무안농민대회
1984. 11. 19. 인천사회운동연합 결성
1984. 11. 인천지역노동자복지협의회 결성
1985. 02. 12. 총선에서 신민당이 다수표 획득
1985. 03.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결성, 신정동 목동 철거민 시위
1985. 04. 16. 대우자동차 임금인상 요구 파업
1985. 05. 23. 미문화원 점거 시위
1985. 06. 24. 구로지역 대우어패럴 등 7개 사업장 동맹 파업
1985. 08. 25.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결성

1986년
01. 전두환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불가 방침을 밝힘
02. 04. 서울대에서 15개 대학 1천여명이 '파쇼헌법철폐투쟁 및 개헌서명운동추진본부 결성식' 개최
02. 07.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 결성
02. 12. 신민당과 민추협 '직선제 개헌을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 시작
03. 05. 민통련(23개 단체)과 민주인사 303인 '군사독재 퇴진촉구와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범국민적 서명운동 선언' 발표
03. 11. 신민당은 '개헌추진위원회 서울지부 결성대회'를 시발로 '개헌현판식대회' 추진.
03. 30. 광주 개헌대회에 30여만명의 시민 집결. 각 대학교수 시국선언문 발표
03. 17. 신흥정밀 박영진 분신
04. 28. 서울대생 김세진 이재호, 전방입소훈련 거부 시위 중 "양키 고 홈" "반전반핵" 외치며 분신
04. 30. 전두환 정권은 청와대 3당대표 회동에서 국회가 합의한다면 임기 내 개헌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발표
05. 03. 인천 5·3시위
05. 06. 보안사, 김문수 등 서노련 활동가 6명 불법연행
05. 10. YMCA중등교육자협의회 산하 교사 546명, '교육민주화선언' 발표

05. 30. 서·인노련 소속 노동자 16명 한미은행 영등포지점 점거농성
06. 6~7. 권인숙이 부천서에서 5·3사건 수배자 소재 밝히기를 요구받으며 성고문 당함
06. 03. 서·인노련 간부 1명 구속, 3명 긴급수배
06. 21.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합의
07. 03. 인천 해고노동자 권인숙, 부천서 문귀동 경장을 강제 추행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
여성단체연합 성고문대책위원회 발족
07. 16. 검찰, 부천서 성고문 사건 근거 없다고 수사결과 발표
08. 16~23. 부평 소야전기(주) 노동자 150여명 '임금인상' '보너스 400% 지급' 등을
요구하며 식당점거 농성
08. 31. 전YH노조원 주최로 영등포성문밖교회에서 개최하려던 '김경숙 추도식'이 경찰
방해로 무산됨
09. 6. 월간『말』특집호「보도지침」발간
09. 20~10. 05. 제10회 서울아시안게임 개최
10. 17. 검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의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라고 발언한
신민당 유성환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10. 18. 전국노동자연맹추진위(전노추) 구성혐의로 7명 구속, 107명 수배
10. 19. 영등포 성문밖교회에서 500여명 참가해 '박영진열사추모사업회' 결성 집회 개최
10. 20. 경찰, 구국학련의 상부조직 '노동해방전선' 적발 발표
10. 24. 소위 마르크스·레닌당 결성 기도사건 발표
10. 28. 건대사건, 총연행자 1,525명, 구속자 1,295명
11. 26. 정부, 북한의 금강산댐 위협에 대응한다며 평화의 댐 건설 발표
11. 29. 서울개헌대회, 경찰봉쇄로 무산, 산발적 가두시위로 2,200명 연행
11. 30. 고 전태일의 16주기 추도식을 마석 모란공원 묘지에서 300여명이 참가해 거행

1987년
01. 14. 서울대생 박종철,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물고문으로 사망
03. 01. 인천지역 노동자 1천여 명이 부천 석왕사에서 3·1절 집회 뒤 부천역에서 가두시위
03. 27. 인천 세진음향, 임금인상 요구 가두시위
04. 13. 4·13호헌조치
04. 23. 인천 경동산업 노동자 일당 1,350원 인상, 보너스 400% 지급,
가족수당 10,000원 지급 요구하며 투쟁 돌입
04. 27. 한국노동조합총연맹, 4·13호헌조치 지지 성명 발표
05. 01. 신민당 탈당의원이 통일민주당 창당(김영삼 총재)
05. 03. 부평 샘터교회에서 인천기노련 주최로 노동자 학생 400여명이 메이데이 행사 주최.
05. 06. 서울지역 23개 대학 대표들이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서대협) 결성

05. 27.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발족

06. 11~19. 신호수(1962. 1생)가 인천 가스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 서부경찰서 대공과 소속 경찰에 연행당해 고향인 전남 여천 대미산 중턱의 동굴에서 시체로 발견됨

1987. 06. 6월민주항쟁

1987. 07~09. 노동자대투쟁

1987. 한국여성연합 '올해의 여성상' 수상자로 권인숙 선정

1989. 대법원, 문귀동에게 징역 5년, 위자료 지불 판결

1993. 권인숙의 가해자 문귀동 5년 만기 출소

1989. 대법원이 문귀동에게 징역 5년, 위자료 지불 판결

2002. 09. 04. 인천지역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이후 매년 진행)

2003. 05. 02. 5·3민주화운동기념사업추진위원회 토론회, 「5·3운동의 역사적 재조명」

2006. 05. 03. 인천 5·3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 토론회 「5·3에서 미래로」와 추모제<끝>

한겨레신문 연재

[길을 찾아서] '5·3 인천사태' 국가가 폭력기관임을 다시 보여줬다

이룰태림-멈출 수 없는 언론자유의 꿈 (93)

■ 양김씨의 야당과 재야 민주화운동 분열

1986년 5월3일 인천에서 직선제 개헌운동 집회가 열렸다. 나도 민통련 회원의 한 사람으로 참가했다. 전두환 정권은 재야·노동·청년·학생운동이 총집결한 이날 인천 주안 4거리 집회를 용공·폭력 집회로 몰아 민주화운동권에 궤멸적 타격을 가했다. 이 '인천집회'에 대한 5공화국 정권의 대대적 탄압을 당시 언론들은 '5·3 인천사태'라고 불렀다.

85년 '2·12 총선'에서 승리한 김대중·김영삼 '양김씨'는 이민우 신민당 총재를 앞세워 그해 말 '직선제 개헌 1000만명 서명운동'을 선언했다. 재야 민주화운동의 통합을 추진해온 민통련도 앞서 9월 개편대회 뒤 연말을 맞아 '민주헌법 쟁취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2년도 채 안 남은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계속 '체육관 선거'로 맞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권은 86년 1월16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지금 헌정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난국을 초래한다", "현행 헌법으로 87년 대선을 치러 대통령 단임 전통을 먼저 확립한 다음에 개헌 문제는 '88 서울올림픽' 이후 논의하자"고 응수했다. 이는 87년 자신이 직접 군인 중에서 차출해 허수아비 후임 대통령을 앉혀 놓고 계속 권한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이었다. 실제로 전두환은 세칭 '상왕' 자리를 만들기 위해 재벌들의 돈을 끌어모아 '일해재단'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86년 초 한국의 정치지형은 '개헌이냐, 호헌이냐' 또는 '87년 이전 개헌이냐, 88년 이후 개헌 논의냐'를 둘러싸고 대치 국면에 들어갔다. 재야운동권과 야당 정치인들 사이에 개헌의 내용과 추진 방법을 둘러싼 간극도 벌어지고 있었다.

야당 개헌운동의 초점은 '대통령 직선제'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 근저에는 "대통령 직선제만 도입되면 자신들이 집권하는 민간정부가 들어서게 될 터이고, 그러면 한국의 군부정치는 끝장나게 되므로 나라의 민주화가 저절로 궤도에 오르게 된다"는 '양김씨'의 정치관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민통련 등 재야세력들은, 개정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민중생존권, 남북 평화와 분단 극복 등의 가치가 담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새 헌법에는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이 더 명백히 보장되어야 할 뿐 아니라 반민주적, 반민족적, 반민중적 권력의 폭압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저항

권이 헌법적 권리로 분명히 명시되어야 하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은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불어 자유로운 통일 논의 권리도 보장돼야 할 것이었다.

'양김씨'는 전두환 정권을 향해 "더이상 망설이지 말고 개헌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선 데 반해, 학생·청년·재야 운동권은 "전두환은 하루빨리 퇴진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정권을 잡으려고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과 협상하려는 개헌운동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재야운동의 신념이었다.



1986년 7월3일 서울대생 권인숙 학생에 의해 폭로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계기로 '5·3 인천사태' 이후 갈라질 위기에 빠졌던 재야와 야당 정치권은 다시 뭉쳤다. 87년 6월항쟁으로 가석방된 뒤 9월14일 '석방 환영 및 86 여성운동 인물 선정' 기념식에서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권인숙씨, 사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양김씨'가 86년 2월부터 본격적인 개헌 서명운동을 시작하자, 민통련도 지역 가맹단체들과 함께 신민당 옥내집회에 맞춰 거리집회를 동시에 개최했다. 경쟁과 협력이 혼재된 기묘한 상황이었다.

민추협과 신민당은 86년 3월11일 서울 혜화동 흥사단에서 '개헌추진위 서울시지부 결성대회'를 연 뒤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청주 등 전국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개헌 현판식을 했다. '양김씨'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과 광주에서는 각각 10만과 20만의 학생·시민들이 동참했다. 민통련도 그 공간을 활용해 거리집회를 계속했다. 민통련 가맹단체들의 홍보 선전에 힘입어 대구, 대전, 청주 등에서 최소한 1만여명의 시민·학생이 집회에 참가했다. 3월 들어서는 천주교·개신교·불교 등 종교계와 여성계, 교수사회, 문화예술계, 법조계,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개헌 요구 성명서 발표와 서명운동이 전개되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직선제 개헌'을 촉구했고, 3월11일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4월4일에는 성공회 소속 신부들, 5월9일에는 조계종 승려들의 시국선언문 발표가 잇따랐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던 개헌운동은 '5·3 인천사태'로 파탄이 났다. 신민당이 이날 오후 인천 시민회관에서 열기로 했던 개헌 현판식은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대회장 안에 최루탄을 던져 넣고 김영삼 고문과 이민우 총재를 앞세운 신민당 인천·경기지역 당원들의 대회장 진입을 경찰이 최루탄을 난사하면서 저지하는 바람에 무산되었다.

양김의 야당과 재야 '개헌' 논의
86년 5·3 인천사태로 파탄
정체불명 괴한에 경찰 강경진압
재야는 백화제방식 주장 갈라져
분열 획책하던 전두환 정권
인천사태 배후로 '민통련' 지목
문익환·백기완 등 줄줄이 구속
난 민통련 사무처장 맡게 돼
부천서 성고문 사건 계기로
재야는 다시 '연대의 길'로
"성까지 혁명도구로 이용" 역공
권력의 뻔뻔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편 이날 민통련과 가맹단체들, '서노련' '인노련' 등 노동운동, 민청련, 학생운동권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따로따로 거리집회를 주최하면서 신민당의 타협주의를 비판하고, 저마다 '개헌'에 대한 주장을 선전하는 성명서·깃발·구호들을 백화제방식으로 내걸었다.

경찰은 한동안 어수선한 상황을 방치하더니 오후 5시부터 강제해산에 들어갔고, 5만을 헤아리는 시위대는 순식간에 흩어졌다. 그러자 주안 4거리에는 수백개의 깃발, 수십개의 펼침막, 갖가지 유인물들만 잔해가 되어 남아 있었다.(박우섭, '5·3 인천사태-민통련을 중심으로', <6월항쟁을 기록하다>(제2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경찰은 그날 129명을 연행해 구속한 뒤, 6월2일에는 45명에게 특별수배령을 내렸는데, 그 가운데 민통련 간부가 37명이나 되었고, 서노련도 집중적 탄압을 받았다.

한편으로 전두환은 신민당에 대해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하자"고 회유작전을 폈다. 이른바 '분할지배(디바이드 앤 룰) 작전'으로 재야와 야당 사이를 이간질한 것이다. 신민당은 '5·3' 이후 대중적 동력이 떨어진 것을 보고, 전두환의 공작인 줄 알면서도 5월 30일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해 국회로 돌아가고 말았다.

■ 국민에 대한 폭력기관으로 회귀한 국가

'5·3 인천사태'는 국가가 다시 국민에 대한 폭력기관으로 되돌아갔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우선 인천집회를 국가전복을 꾀한 폭동이라 규정하면서, 민통련을 배후 중의 배후로 몰았다. '5·3 인천집회'에서 학생운동, 노동운동, 민통련이 서로 다른 주장을 했는데도 총배후를 민통련에 뒤집어씌우는 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못했다.

검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급진좌경 활동과 격렬한 폭력소요를 자행해온 '민민투' 학생운동과, 체제 전복 기도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장기표·정동년 등이 핵심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민통련 및 그 가맹단체 소속원 등이 인천 소요를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번 폭력 소요사태에서 인천을 해방구로, 해방인천 만세, 미·일 외세 몰아내고 민중정권 수립하자는 등 북괴의 상투적 대남 선전, 선동과 현저히 유사한 내용의 구호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인천집회의 배후인 민통련은 "반국가단체"라는 것이었다.

전두환이 이처럼 자신만만했던 배경에는 야당과 재야가 서로 분열하고 반목한 데도 한 원인이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인천집회' 당시 학생운동의 한 그룹, '전국 반미 반파쇼 민족민주투쟁 학생연합'(민민학련)은 "제헌의회 소집"을 외쳤고, 또다른 학생운동 그룹인 '반미 자주화 투쟁 민족민주투쟁 학생연합'에서는 "미제 축출", "반전 반핵"을 외쳤다. '서노련'과 '인노련' 등 노동단체들은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요구했다. 가맹단체인 민청련조차 민통련을 "야당과 타협하는 기회주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

판했다. 나는 자유로운 비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천집회'에서 재야 단체들의 '중구난방'은 때와 장소를 잘못 고른 커다란 실책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인천집회 같은 사태가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되었다. 서로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모든 참가단체의 대표자가 회의를 해서 연합집회를 열고, 각자 차례대로 단상에 올라가 주장함으로써 학생·시민 모두를 선전하고 설득하는 것이 정답이다. 나는, 한 사회에서 독재-민주 세력이 대립하고 있을 때 특히 민주세력은 연대를 하지 않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믿는다. 또 연대를 할 때는 '논이구동'(論異求同)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로 생각이 다를 때는 토론을 해서 뜻이 합쳐진 부분만 행동을 같이하기로 한다"는 뜻이다. 그래도 끝내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은, 그대로 내버려둘 일이었다.

'5·3 인천사태' 이후 민통련은 고 문익환 의장, 고 강희남 대의원총회 의장, 백기완 부의장, 정동익 감사, 임채정 상임위원장, 김종철 대변인, 이부영 사무처장, 조춘구 사무차장, 장기표 정책연구실장, 장영달 총무국장, 박계동 홍보실 차장 등이 구속·수배되는 바람에 쑥대밭이 되었다.

그해 6월26일 구속된 이창복 부의장은 6월 초 나를 불러 수배된 이부영 대신에 민통련의 사무처장 대행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두 가지 이유로 사양했다. 그 하나는 원체 약골이었던 탓에 '언협' 사무국장 1년 동안 해친 건강부터 회복해야 하는 사정, 또 하나는 활동자금을 조달해낼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좋다. 간판만 지켜달라"라는 그의 부탁을 나는 끝내 거절하지 못했다.

6월 말 장충동 민통련 사무실로 출근해보니 상층부로는 고 계훈제 부의장, 이해찬 정책위원회 차장, 박우섭 총무부 차장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일당백의 간사들, 정선순·이명식·임병주·이달원·이윤숙·오경렬·변인식 등이 남아 민통련을 든든히 지키고 있었다.

나는 시인 김정환을 대변인 대행으로, 고 김도연을 편집실장 대행으로, 박우섭을 총무부장으로, 간사 정선순을 총무부 차장으로 하는 최소한의 진용을 새로 꾸렸다. 또 고난의 86년 여름, 민통련의 건재함을 안팎에 알리고자 <민중의 소리>를 꾸준히 발간하는 한편 지역운동협의회 간사 이명식을 통해 '민통련 지역운동가맹단체협의회'(지운협) 활동가들과 함께 '다가올 전두환 정권과의 전면적 대결에서 지역 대중들과 민통련이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분석하는 과제를 맡게 했다.



성유보(필명 이룰태림·71) 희망래일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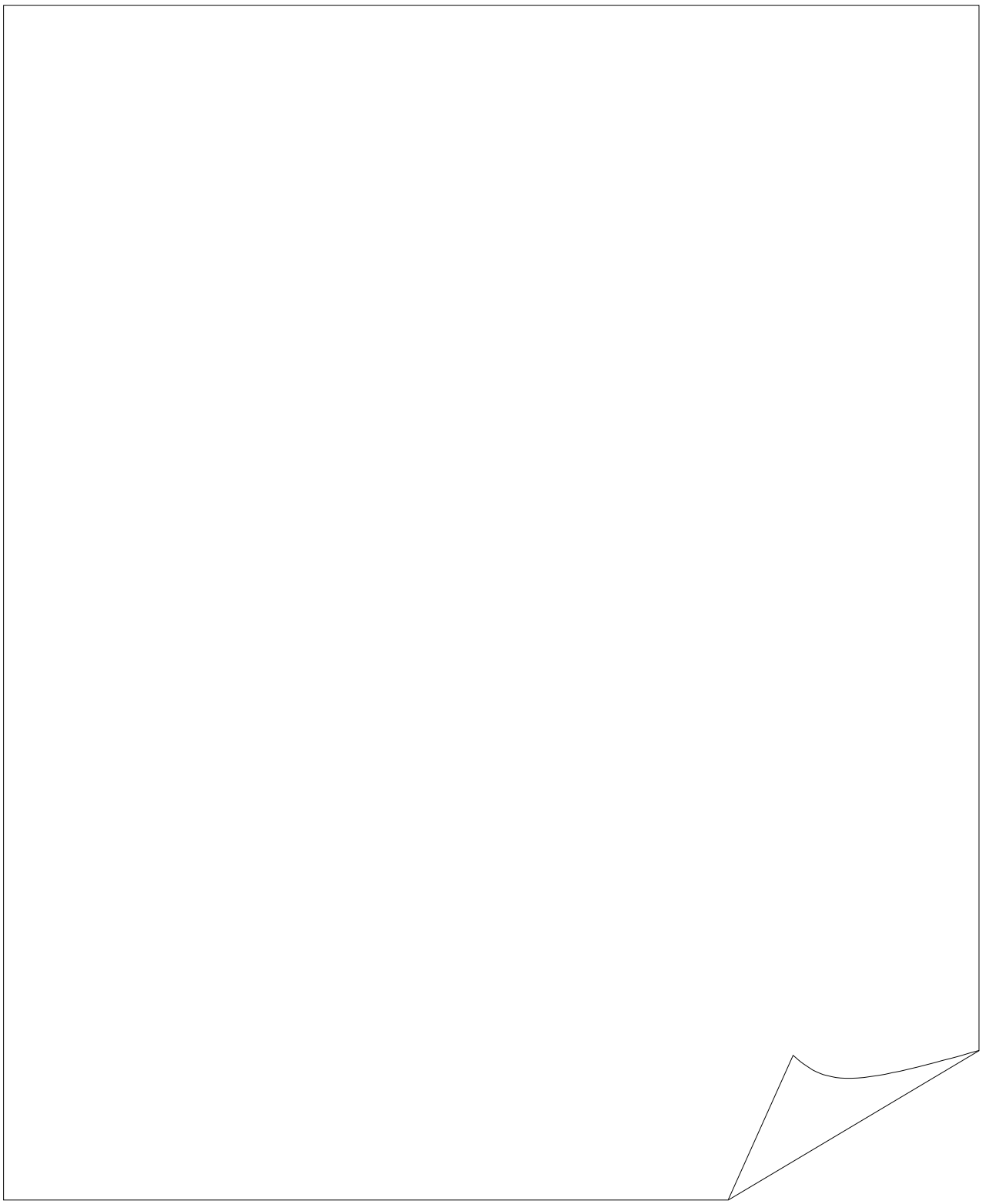
그런 와중인 7월3일 권인숙 학생에 의해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폭로되었다. 이 천인공노할 사건에 대해, 검찰은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권이 마침내 성까지 혁명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역공을 폈다. 전국의 모든 언론에서 검찰 발표를 대서특필했음은 물론이다. '고문·용공조작 저지 공동투쟁위원회'(고문공대위)가 다시 소집되었고, 7월19일 명동성당에서 '성고문 용공조작 폭로 규탄대회'를 열어 항의했다. 그러나 '권양'은 공문서 위조 혐의로 대법원에서 1년6개월 형을 확정받았고 87년 '6월항쟁' 이후 7월에야 가석방되었다. 이후 가해 형사 문귀동은 기소되어 89년 5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때 고 조영래 변호사가 써서 발표한 '권인숙양 변론서'는 온 국민의 심금을 울렸다. 반면, 고문공대위는 그다지 인상 깊은 활동을 하지 못했기에 나는 개인적으로 늘 송구스럽게 생각해왔다. 그나마 '인천' 때문에 갈라질 위기였던 재야와 야당이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연대를 시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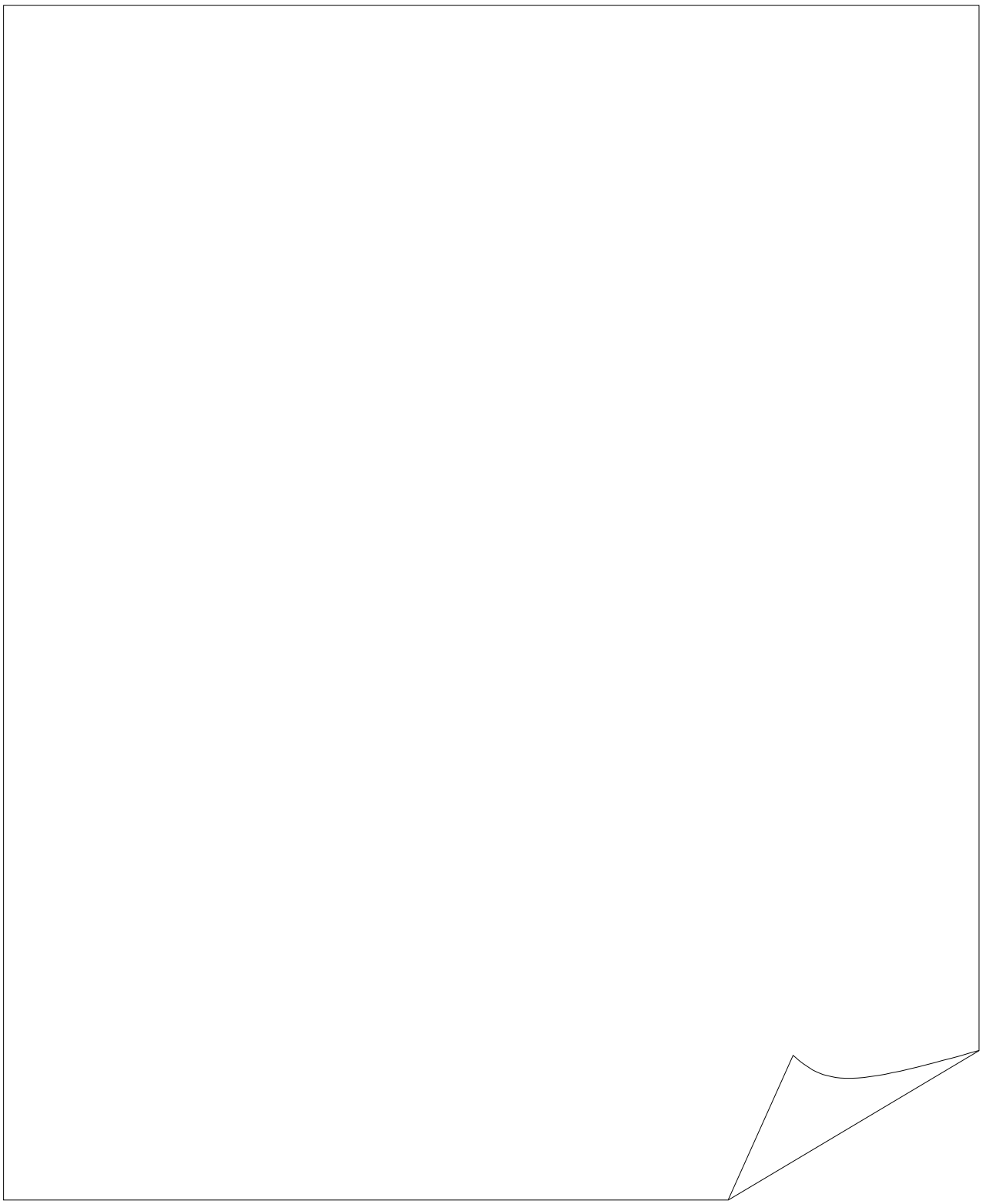
필자/성유보 정리도움/강태영

성유보(필명 이룰태림·71) 희망래일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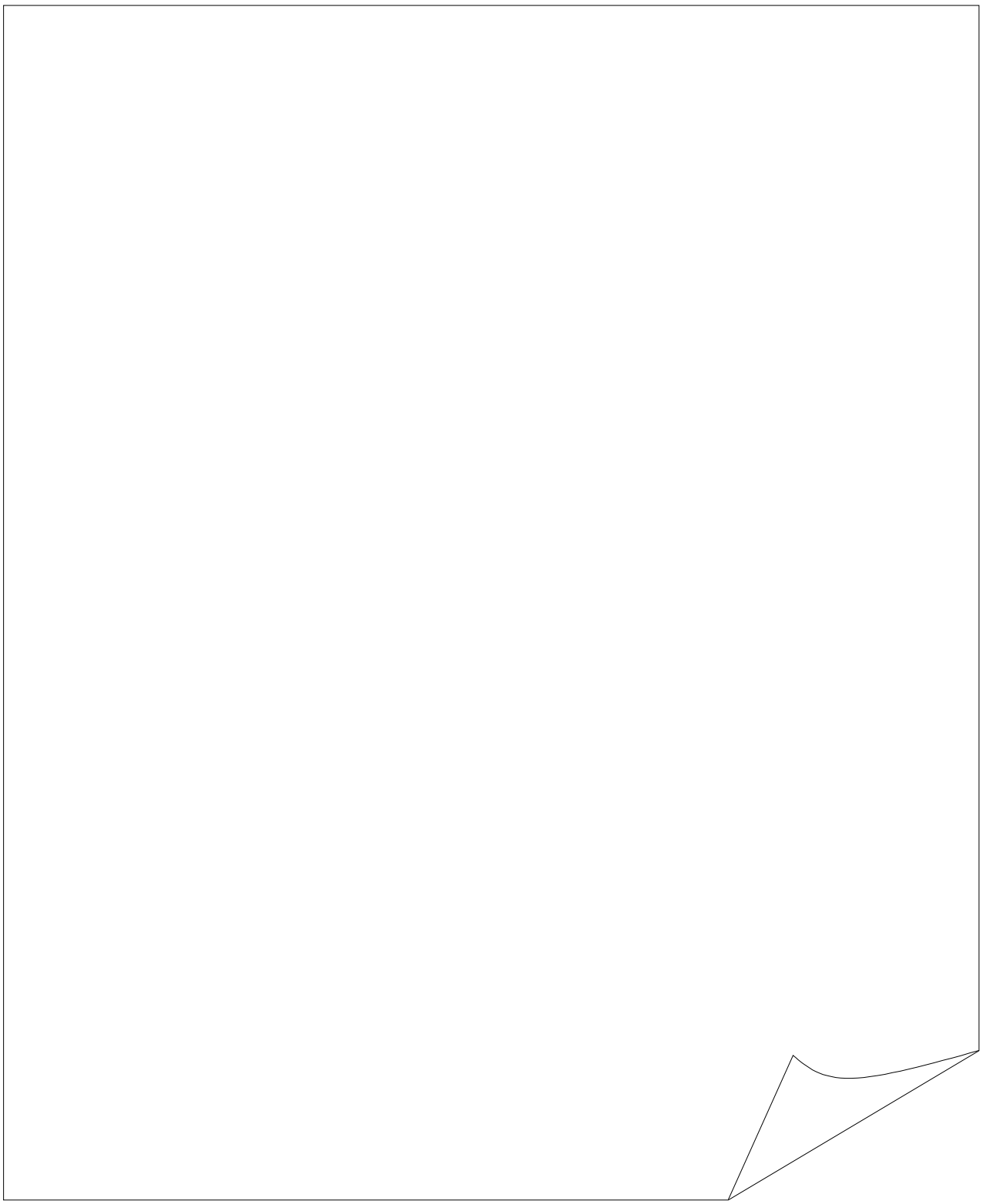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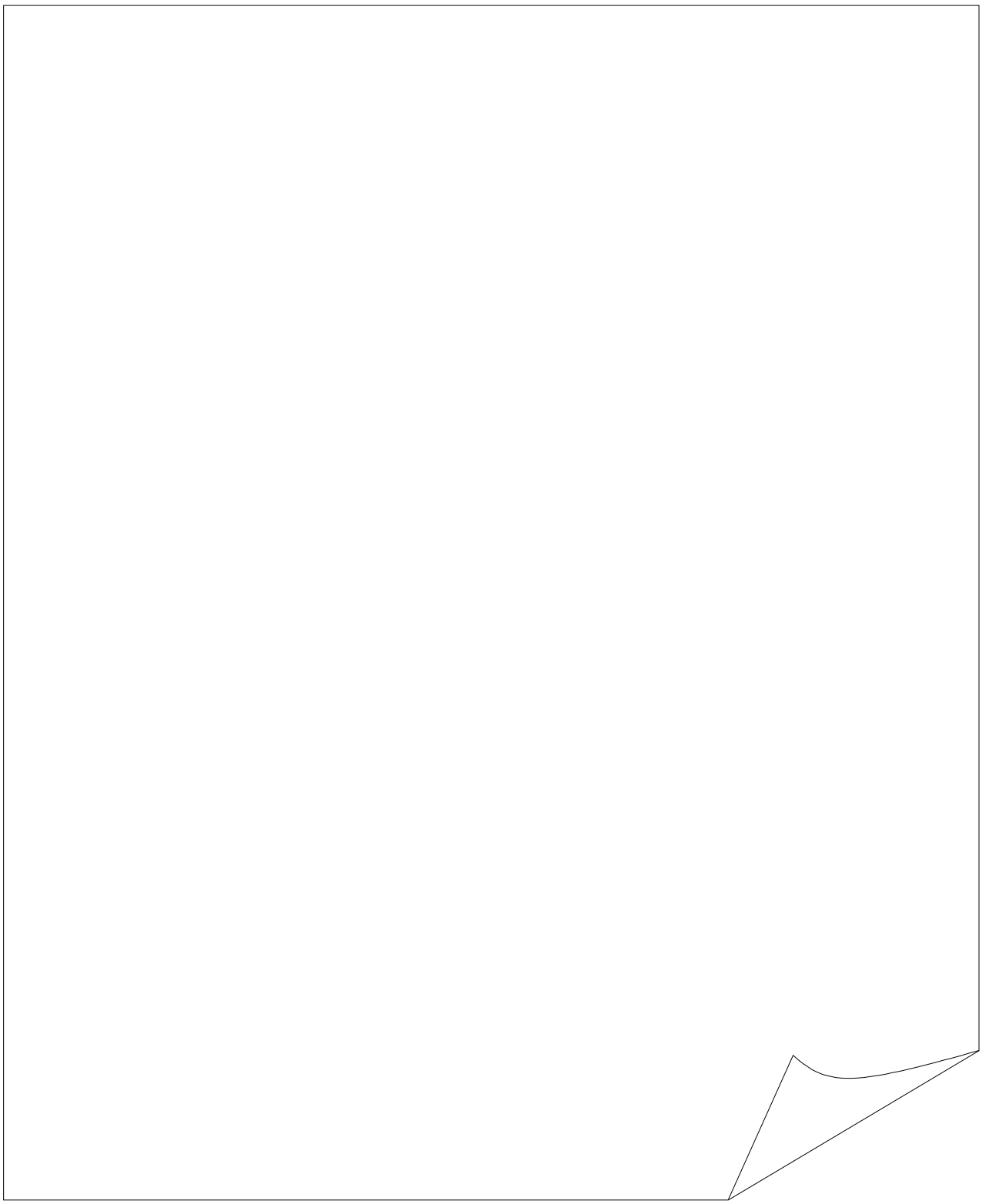
MEMO



MEMO



MEMO



MEMO

